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및 역량 강화 |



2021. 10



본 자료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에서
준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역량 강화 |

2021. 10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역량 강화

연구책임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장우현 연구위원

연구보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종혁 선임연구원

연구자문 한국개발연구원 : 이진국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정은애 연구위원

목 차

제1장 서론	36
제2장 소상공인을 위한 생애주기지원체계 구축 및 강화	41
제1절 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과 규모 추이	41
1. 국내 자영업자 비중과 규모의 장기 추이	41
2. 자영업자 규모 변동의 시기와 강도	45
제2절 자영업자 비중의 OECD 국제 비교	46
1. OECD 국가들의 자영업자 비중 변화	46
2. OECD 국가들의 취업자 구성 변화	51
3. OECD 국가들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 변화	52
4. 자영업자 적정성 및 과잉성 분석 결과	55
제3절 KCB자료를 활용한 자영업자 지역별·업종별 진입철수 추이 분석(2017~2019년) ...	56
1. 자영업자 진입철수추이 분석 개요	56
2. 업종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분석	63
3. 지역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분석	71
제3장 소상공인 대상 예산사업분석	80
제1절 생애주기별 예산사업분석 개요	80
1. 예산사업분석 개요	80
2. 폐업·철수 지원의 법적 근거	81
제2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예산사업 분석	82
제3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관련 정책(중소기업정책) 예산사업 분석	83
제4절 기타 주요부처 소상공인 관련 정책(중소기업정책) 예산사업 분석	88
제5절 소결	99

제4장 소상공인 정책수요: 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100
제1절 소상공인 정책수요 분석 개요	100
제2절 소상공인 폐업 관련 정책수요 분석	101
1. 폐업 소상공인 정책수요 분석	101
제5장 정책제언과 결론	112
참고문헌	114
부록	116

표 목차

〈표 1〉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전 산업(2018년 기준)	1
〈표 2〉 대기업,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소상공인 주요 통계: 비율	3
〈표 3〉 대기업,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소상공인 주요 통계: 절대수치	4
〈표 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사업 예산 분석	12
〈표 5〉 중소벤처기업부 전체 사업 예산 분석	13
〈표 6〉 소상공인 관련 사업-범부처	18
〈표 1-1〉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전 산업(2018년 기준)	36
〈표 1-2〉 대기업,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소상공인 주요 통계: 비율	38
〈표 1-3〉 대기업,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소상공인 주요 통계: 절대수치	39
〈표 2-1〉 국내 자영업자 비중 추이: 전 산업	42
〈표 2-2〉 국내 자영업자 규모 추이: 전 산업	43
〈표 2-3〉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전 산업(2018년 기준)	48
〈표 2-4〉 국내 자영업자 비중과 규모의 적정성 및 과잉성 분석 결과: 전 산업	55
〈표 2-5〉 국내 자영업자 비중과 규모의 적정성 및 과잉성 분석 결과: 산업별	55
〈표 3-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사업 예산 분석	83
〈표 3-2〉 중소벤처기업부 전체 예산사업 분석	84
〈표 3-3〉 소상공인 관련(중소기업지원) 사업 - 범부처	89

그림 목차

[그림 1] 자영업 사업체 수(KCB SOHO, 2017년 1월~2020년 11월)	6
[그림 2] 광역자치단체별 자영업자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9년)	6
[그림 3] 광역자치단체별 자영업자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8년)	7
[그림 4] 광역자치단체별 자영업자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7년)	7
[그림 5] 업종별 자영업자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9년)	8
[그림 6] 업종별 자영업자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9년)	8
[그림 7] 자영업자 사업체당 추정연매출액	9
[그림 8] 자영업 사업체 연도별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7~2019년)	10
[그림 9] 광역자치단체별 폐업률/개업률(KCB SOHO, 2017~2019년)	10
[그림 10] 폐업 소요 기간	29
[그림 11] 폐업의 주된 원인(1순위)	29
[그림 12] 폐업의 주된 원인(1+2순위)	30
[그림 13] 폐업 소요 비용	30
[그림 14] 폐업까지 소요된 비용의 구체적 내용(1순위)	30
[그림 15] 폐업까지 소요된 비용의 구체적 내용(1+2순위)	31
[그림 16] 폐업 과정 및 폐업 시 가장 어려운 점(1순위)	31
[그림 17] 폐업 과정 및 폐업 시 가장 어려운 점(1+2순위)	32
[그림 18] 폐업 시 정부의 지원정책(1순위)	32
[그림 19] 폐업 시 정부의 지원정책(1+2순위)	33
[그림 2-1] 국내 자영업자 비중과 규모: 전산업	42
[그림 2-2] 고용주 대비 자영자 배율	46
[그림 2-3] 자영업자 비중 변화: 비중 감소 국가	47
[그림 2-4] 자영업자 비중 변화: 비중 증가 국가	48
[그림 2-5] 인구 규모별 자영업자 비중과 1인당 GDP	50
[그림 2-6] 임금근로자 배율과 자영업자 배율: 자영업자 비중 감소 국가	52
[그림 2-7] 임금근로자 배율과 자영업자 배율: 한국	53

[그림 2-8] 임금근로자 배율과 자영업자 배율: OECD 평균(한국 제외)	54
[그림 2-9] 자영업 사업체 수(KCB SOHO, 2017년 1월~2020년 11월)	57
[그림 2-10] 광역자치단체별 자영업자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9년)	58
[그림 2-11] 광역자치단체별 자영업자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8년)	58
[그림 2-12] 광역자치단체별 자영업자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7년)	59
[그림 2-13] 업종별 자영업자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9년)	59
[그림 2-14] 업종별 자영업자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9년, 부분확대)	60
[그림 2-15] 자영업자 사업체당 추정연매출액	60
[그림 2-16] 월별 전체사업체 수 추이 확대(2019~2020년)	61
[그림 2-17] 자영업 사업체 연도별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7~2019년)	62
[그림 2-18] 광역자치단체별 폐업률/개업률(KCB SOHO, 2017~2019년)	62
[그림 2-19] 한식음식점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63
[그림 2-20] 외국식음식점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64
[그림 2-21]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64
[그림 2-22]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65
[그림 2-23] 오락장운영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65
[그림 2-24] 욕탕마사지 및 기타신체관리서비스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66
[그림 2-25] 채소과실 및 뿌리작물소매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67
[그림 2-26] 신선냉동 및 기타수산물 소매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67
[그림 2-27] 육류소매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68
[그림 2-28]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68
[그림 2-29] 체인화편의점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69
[그림 2-30] 교육지원서비스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69
[그림 2-31]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70
[그림 2-32] 이용 및 미용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70
[그림 2-33] 전국 개업과 폐업 추이 및 전년동월대비 변화	71
[그림 2-34] 강원도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71
[그림 2-35] 경기도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72
[그림 2-36] 경상남도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72
[그림 2-37] 경상북도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73

[그림 2-38] 광주광역시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73
[그림 2-39] 대구광역시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74
[그림 2-40] 대전광역시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74
[그림 2-41] 부산광역시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75
[그림 2-42] 서울특별시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75
[그림 2-43] 세종특별자치시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76
[그림 2-44] 울산광역시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76
[그림 2-45] 인천광역시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77
[그림 2-46] 전라남도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77
[그림 2-47] 전라북도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78
[그림 2-48] 제주특별자치도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78
[그림 2-49] 충청남도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79
[그림 2-50] 충청북도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79
[그림 4-1] 폐업 소요 기간	101
[그림 4-2] 폐업의 주된 원인(1순위)	102
[그림 4-3] 폐업의 주된 원인(1+2순위)	102
[그림 4-4] 폐업 소요 비용	103
[그림 4-5] 구체적 폐업 비용(1순위)	103
[그림 4-6] 구체적 폐업 비용(1+2순위)	104
[그림 4-7] 폐업 과정 및 폐업 시 가장 어려운 점(1순위)	104
[그림 4-8] 폐업 과정 및 폐업 시 가장 어려운 점(1+2순위)	105
[그림 4-9] 폐업 시 정부의 지원정책(1순위)	105
[그림 4-10] 폐업 시 정부의 지원정책(1+2순위)	106
[그림 4-11] 폐업을 고려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107
[그림 4-12] 폐업 및 퇴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	107
[그림 4-13] 폐업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	108
[그림 4-14] 정부의 폐업 지원 시 가장 필요한 정책	109
[그림 4-15] 폐업 시 가장 힘든 애로사항	109
[그림 4-16] 폐업 및 퇴로 정부정책의 문제점	110
[그림 4-17] 폐업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심층면접)	110

< 2021~2025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역량 강화(요약) >

1. 서론

- 한국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섹터는 2018년 기준 경제 내에서 30%~40%에 달하는 높은 고용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개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평균 규모는 비정상적으로 영세하여 소상공인 1개 업체당 고용은 1.5명을 넘지 못함.
-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기준 소상공인 섹터의 고용 897만명과,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취업자 2,682만명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대한민국 경제에서 소상공인 섹터의 고용비중은 약 33%에 달함.¹⁾
-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기준 소상공인 섹터의 고용 897만명과 소상공인 기업 620만개를 적용하면, 소상공인 1인당 소상공인 본인을 포함한 고용은 1.45명에 불과
- 그 결과, KDI 이진국(2020)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자영업자 사장 수 비중은 OECD 주요 33개국 중 멕시코에 이어 2등에 달하는 특이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2018년 기준 인구대비 자영업자 사장 수는 10.9%로 11.6%인 멕시코에 이어 2등이며,²⁾ 취업자 2,682만명 중 21%가 자영업자 사장으로서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사장 수는 그리스, 멕시코에 이어 3등임.

<표 1>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전 산업(2018년 기준)

(단위: 명, %)

국가	취업자 (천명)	임금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인구 대비 자영업자 수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소계	고용주	자영자		
Greece	3,751	67.4	29.1	7.5	21.6	3.5	10.2
Mexico	53,721	68.4	27.1	4.8	22.3	4.5	11.6
Korea	26,822	74.9	21.0	6.2	14.9	4.1	10.9
Italy	22,586	78.3	20.6	5.7	14.9	1.1	7.7
Turkey	27,882	69.5	20.3	4.4	15.8	10.2	6.9
Poland	16,133	80.3	17.4	3.9	13.5	2.3	7.3

1)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에 의한 추정이므로, 일관성을 위해 2018년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의 전수 조사 기준 일자리 수 2,342만개를 적용하면 38%까지 비중이 증가함.
 2) OECD 33개국 단순 평균값은 6%임.

〈표 1〉의 계속

(단위: 명, %)

국가	취업자 (천명)	임금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인구 대비 자영업자 수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소계	고용주	자영자		
Spain	19,136	84.4	15.2	4.8	10.4	0.4	6.2
Portugal	4,615	86.6	13.1	4.5	8.6	0.4	5.9
Ireland	2,180	86.7	12.9	4.1	8.8	0.4	5.8
Belgium	4,699	86.6	12.7	3.7	8.9	0.7	5.2
Switzerland	4,489	87.0	11.6	5.4	6.2	1.4	6.1
Finland	2,465	88.1	11.6	3.4	8.1	0.3	5.2
Iceland	188	88.8	11.1	3.9	7.2	0.1	5.9
France	26,686	88.8	10.9	4.1	6.8	0.3	4.4
Lithuania	1,324	88.5	10.8	2.4	8.4	0.7	5.1
Hungary	4,411	90.1	9.7	4.1	5.6	0.2	4.4
Australia	12,584	90.4	9.5	9.5	0.0	0.2	4.8
Sweden	4,910	91.3	8.6	3.5	5.1	0.1	4.1
Japan	66,640	89.1	8.0	8.0	0.0	2.3	4.2
Luxembourg	278	91.4	7.5	2.9	4.6	1.1	3.4
Denmark	2,739	92.5	7.2	3.1	4.0	0.3	3.4
Norway	2,545	93.6	6.2	1.8	4.5	0.2	3.0
United States	155,761	93.7	6.2	6.2	0.0	0.1	3.0
Czechia	5,147	83.5	16.0	3.0	13.0	0.5	7.7
Netherlands	8,543	84.3	15.4	3.9	11.5	0.3	7.6
Canada	18,658	84.7	15.2	4.6	10.6	0.1	7.7
Slovakia	2,533	85.4	14.6	2.8	11.8	0.0	6.8
United Kingdom	31,112	85.9	13.8	1.9	11.9	0.3	6.5
Latvia	873	88.6	11.0	4.4	6.6	0.4	5.0
Estonia	630	89.5	10.4	4.5	6.0	0.1	5.0
Slovenia	962	86.0	12.1	3.7	8.4	1.9	5.6
Austria	4,241	88.9	10.4	4.5	5.9	0.7	5.0
Germany	40,636	91.0	8.8	4.0	4.8	0.2	4.3

주: Norway는 2016년 기준

자료: 이진국(2020)에 의함; EuroStat, ILO, OECD, Canada Stat, 경제활동인구조사 MDIS를 바탕으로 작성

□ 이처럼 우리 경제 생산부문 생태계의 구성 비중에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는 많은 반면 생산성이 낮음 또한 꾸준히 지적되어 오고 있음.

○ 장우현 외(2013)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전체 물리적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체³⁾의 88.11%, 전체 종사자의 40.05%를 점유하지만 매출은 12.34%, 종사자지급액은 13.19%에 그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열악함.

〈표 2〉 대기업,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소상공인 주요 통계: 비율

대기업과 핵심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는 생산성 및 수익성과 역(逆)의 관계

비율(%)	대기업	핵심중소기업	소상공인
기업	0.15	7.74	92.10
사업체	2.30	9.59	88.11
매출액	60.98	26.68	12.34
영업이익	61.47	18.46	20.06
상용종사자 수	31.39	52.16	16.44
상용종사자 지급액	43.42	46.37	10.22
종사자 수	22.46	37.49	40.05
상용종사자 지급액	40.95	45.86	1.19
R&D 지출액(경상연구개발비)	67.98	29.52	2.50
평균대비 비율(100%)	대기업	핵심중소기업	소상공인
종사자당 지급액	182.35	122.31	32.94
상용종사자당 지급액	138.29	88.89	62.13
종사자당 영업이익	273.72	49.25	50.10

중소기업

주: 1) 201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함, 소상공인은 5인(서비스업) 또는 10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또는 운송업) 미만 사업체임, 핵심중소기업은 법적인 중소기업이면서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으로정의함.

2) 장우현 외(2013)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전체 물리적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체⁴⁾의 88.11%, 전체 종사자의 40.05%를 점유하지만 매출은 12.34%, 종사자지급액은 13.19%에 그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열악함.

자료: 장우현 외(2013)에 의함.

3) 2011년 경제총조사 마이크로 전수조사 분석에 따름.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특고 노동자들 등은 제외됨.
 4) 2011년 경제총조사 마이크로 전수조사 분석에 따름.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특고 노동자들 등은 제외됨.

- 지금과 같은 영세 구조를 극복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섹터의 규모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저성장 국면에 있어 성장률 제고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장우현 외(2013)의 2011년 경제총조사 기준 분석⁵⁾에 따르면, 2010년 소상공인의 인당 지급액은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인당지급액 대비 29% 수준에 그침.
- 이 수치를 80% 수준으로만 향상시킬 수 있어도 지급액 증가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가가치는 53조원 규모 증가하게 되며 이는 당시 명목 GDP 1,323조원 대비 4%에 이룸.

〈표 3〉 대기업,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소상공인 주요 통계: 절대수치

	전체 산업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체
기업체 수	4,818	244,524	2,908,332	3,157,674
사업체 수	76,975	320,712	2,945,854	3,343,541
매출액	2,542,034,978	1,112,380,790	514,518,063	4,168,933,831
영업이익	181,187,985	54,423,333	59,133,007	294,744,325
상용근로자 수	3,169,616	5,266,658	1,659,889	10,096,163
상용임금총액	134,587,436	143,743,164	31,666,490	309,997,090
상용 인당 임금	42,462	27,293	19,077	30,704
종사자 수	3,803,235	6,349,365	6,782,187	16,934,787
종사자 임금총액	138,716,231	155,333,406	44,681,503	338,731,140
종사자 인당 임금	36,473	24,464	6,588	20,002
종사자 인당 이익	47,640	8,571	8,719	17,405
경상연구개발비	14,752,798	6,405,674	543,572	21,702,044
사업체당 업력	14,54	11,29	7,24	7,80

주: 1. 매출액, 영업이익, 임금, 경상연구개발비의 단위는 백만원
 2. 사업체당 업력의 단위는 년
 3. 2010년 경제총조사 기업체별 기준, 종사자기준, 상한기준, 주업종(대분류)판정 적용
 자료: 장우현 외(2013)에 의함.

5) 소상공인의 수와 고용 등 양적 지표를 확인하는 연구들은 많으나 부가가치, 영업이익, 종사자임금 등 질적 자료를 전수로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해당 연구를 인용함.

- 현재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세규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설계가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규모화와 전환에도 맞춰져야 하므로, 현재의 재정정책이 해당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음
 - 자영업자의 철수 및 전환을 실제 발생 기준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의 설계와 예산배분이 이뤄지는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정책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위한 창업성장전환을 포괄하는 생애주기지원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현황에 대해 실시간·증거기반으로 파악하고 정책을 이에 연동하여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 현황을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진입과 유지, 철수의 생애주기별로 파악하고 생애주기별 정책특화를 검토하는 한편, 현장의 정책수요를 확인하여 생애주기별 지원체계의 구축 및 강화방안에 대해 모색하기로 함.

II. 소상공인·자영업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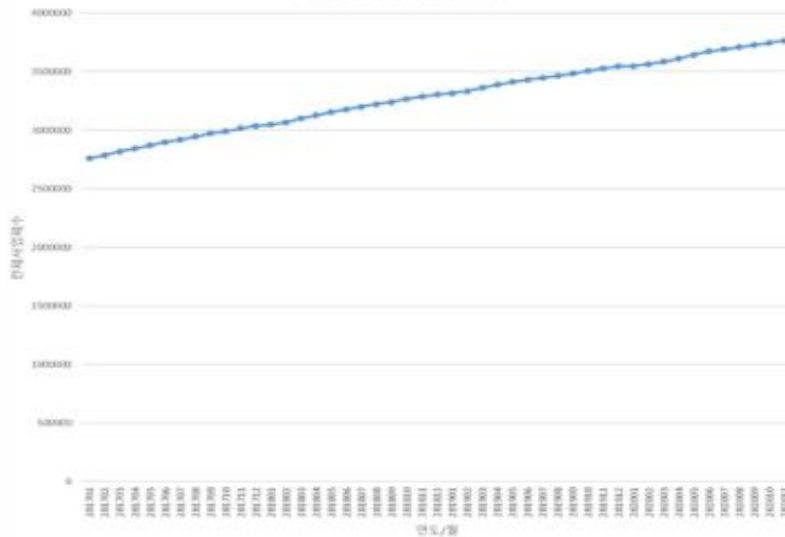
1. KCB자료를 활용한 자영업자 지역별, 업종별 진입철수 추이 분석(2017~2019)

- 자영업자의 실제 진입 철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자영업자 신용정보(SOHO) 2017~2020년 월별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자의 개업과 폐업을 심층 분석하였음.
 -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월별 자영업자 신용정보 자료는 2019년 기준 연평균 3,435,000개의 자영업자 사업체 정보가 담긴 미시 데이터임.
 - 실제 경제 현장에서의 진입 퇴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실제 활용하는 신용정보가 존재하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사업체 수와 개업사업체 수를 지역, 업종, 기간별에 따라 분석함.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분석의 목적에 따라 일상적인 분석의 경우는 2017~2019년 자료를 중심으로 결과 제시

- 2017~2019년간 모든 지역, 모든 기간, 사실상 모든 업종에서 개업이 폐업보다 유의하게 높으며, 이에 따라 사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월별 자료로부터 도출한 평균 전체 자영업체 사업체 수는 3,430,500개이며, 해당연도 폐업사업체 수는 287,384개, 개업사업체 수는 511,815개로 전체 사업체 대비 연간 폐업비율은 8.37%, 개업비율은 14.90%임.

- 2017~2019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단위 모두에서 개업은 폐업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분류 기준 업종에서도 일부 이상치 외 절대 다수의 업종에서 개업은 폐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진입이 철수보다 높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됨.
-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던 2020년의 경우에도 자영업의 진입은 철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자영업 사업체 수도 증가하고 있음.

[그림 1] 자영업 사업체 수(KCB SOHO, 2017년 1월~2020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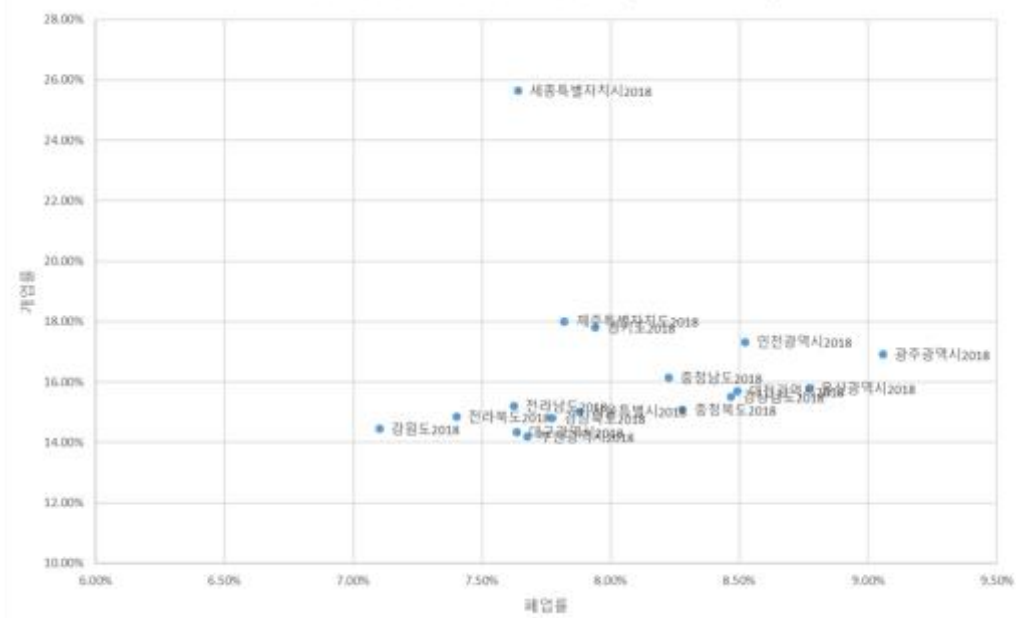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 광역자치단체별 자영업자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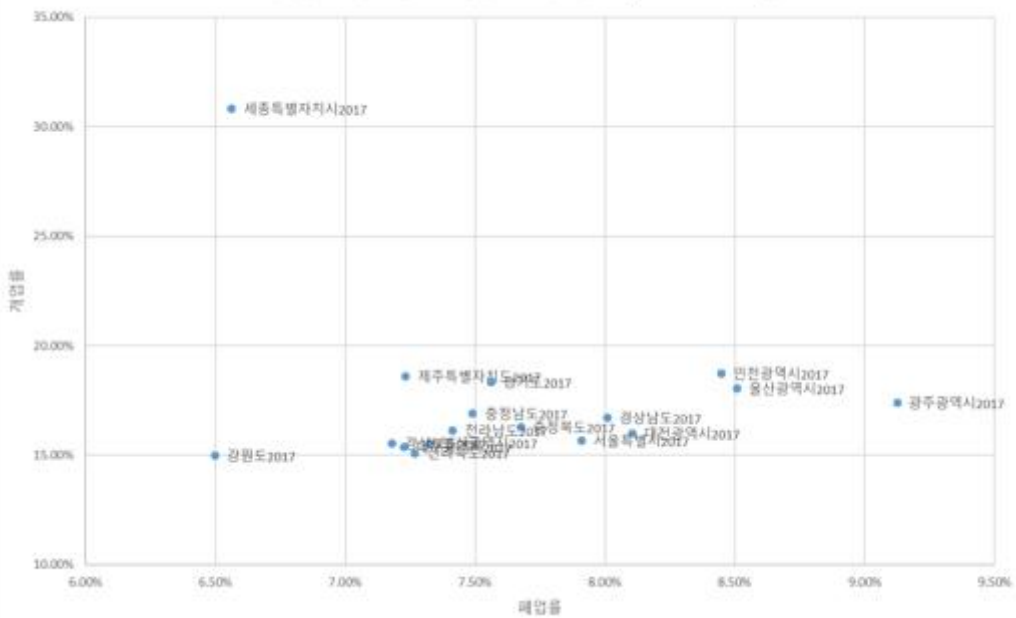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3] 광역자치단체별 자영업자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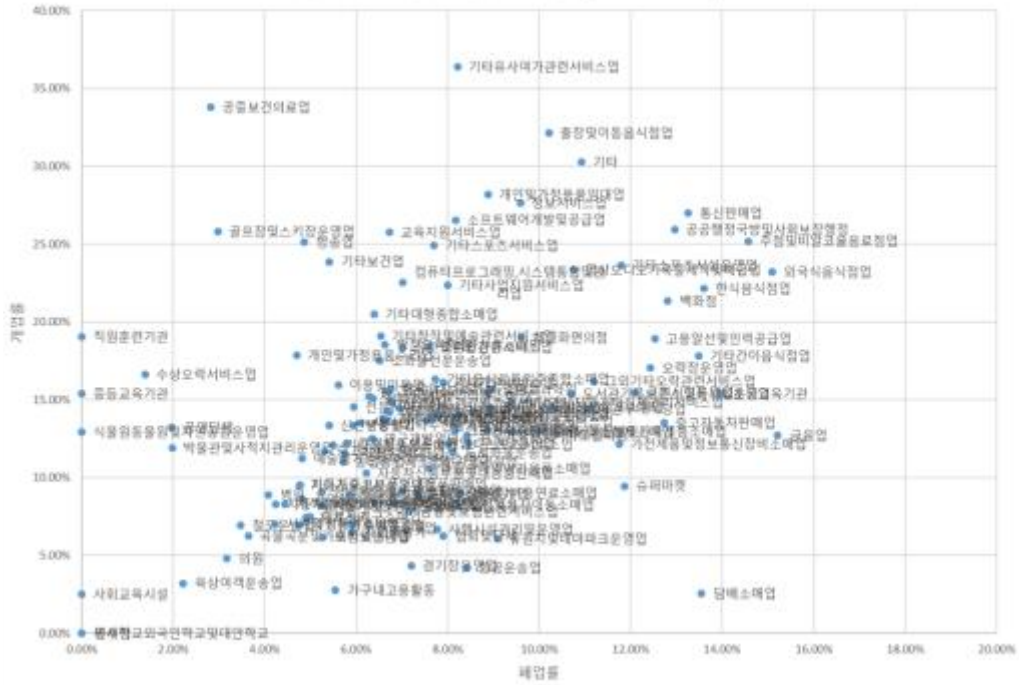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4] 광역자치단체별 자영업자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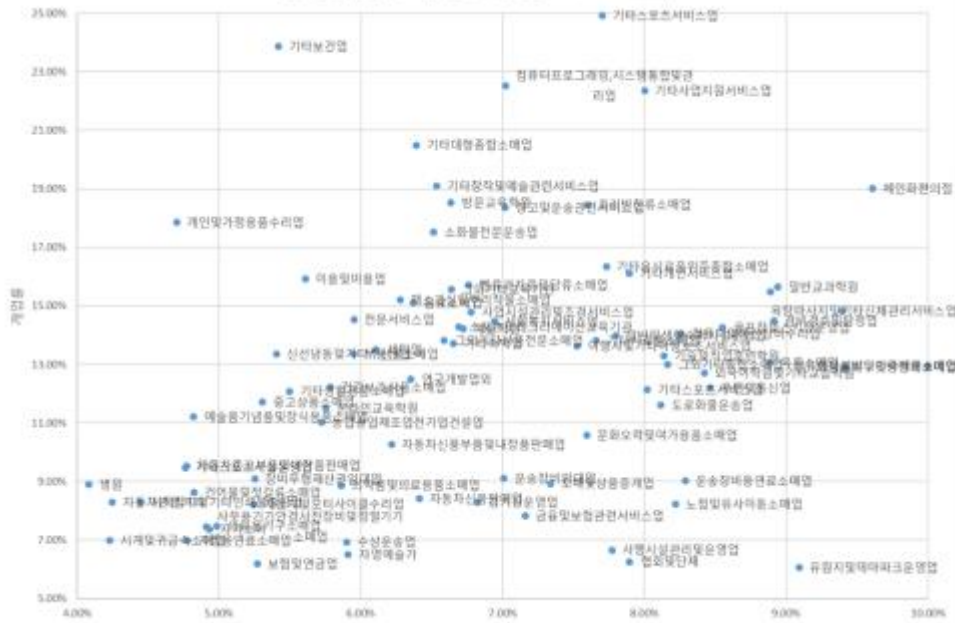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5] 업종별 자영업자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9년)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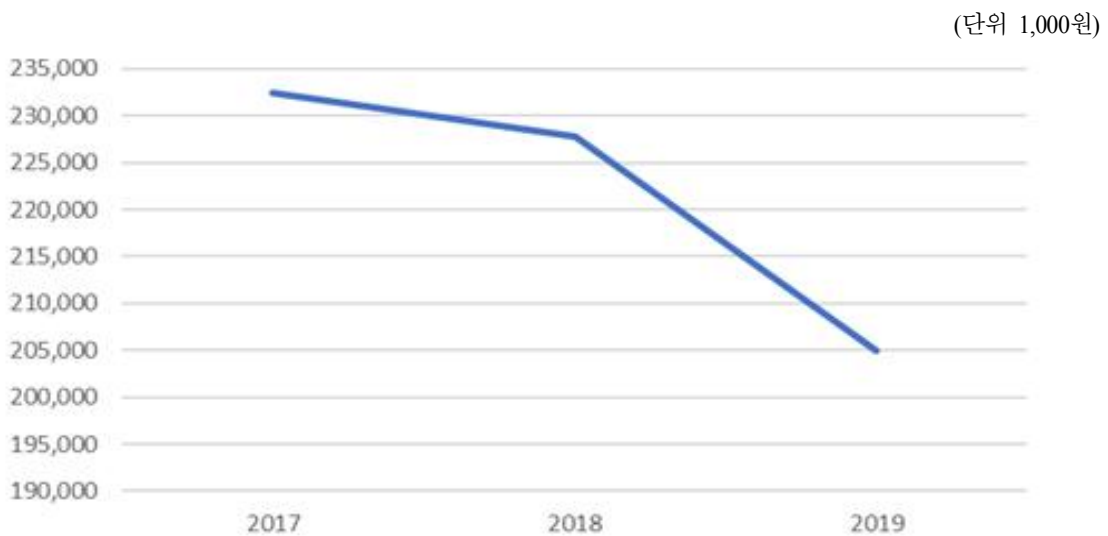
[그림 6] 업종별 자영업자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9년)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진입이 많고 철수가 적어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나는 반면, KCB의 추정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자영업자 매출액 증가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특히 2019년 추정연매출액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체당 추정 연매출액은 감소 중
 - 사업체당 평균 추정 매출액은 2017년 2억 3,300만원에서 2018년 2억 2,800만원, 2019년 2억 500만원 수준으로 감소
 - 자영업자의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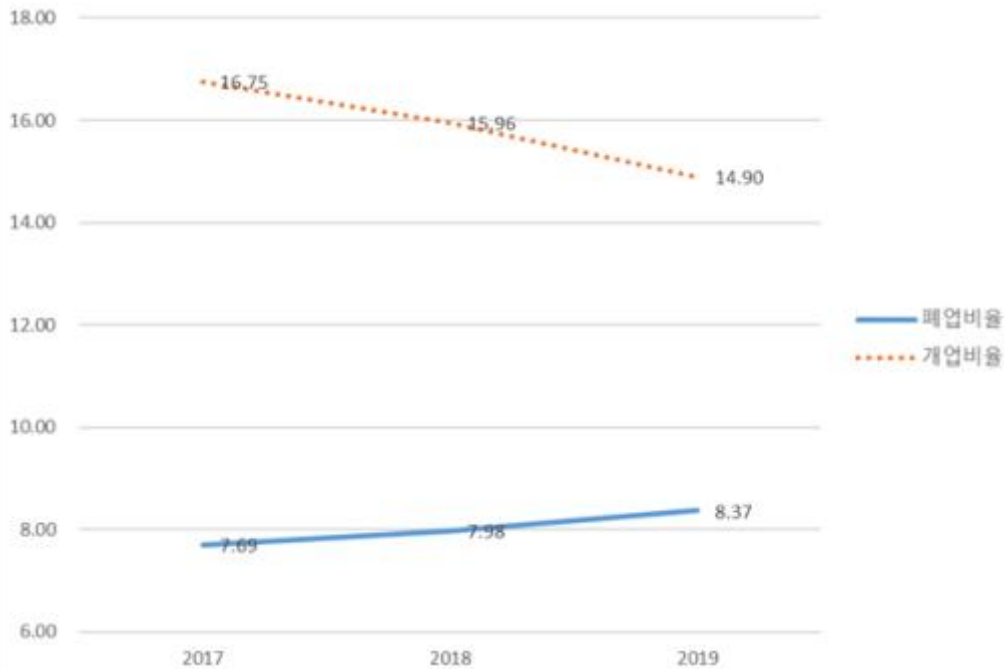
[그림 7] 자영업자 사업체당 추정연매출액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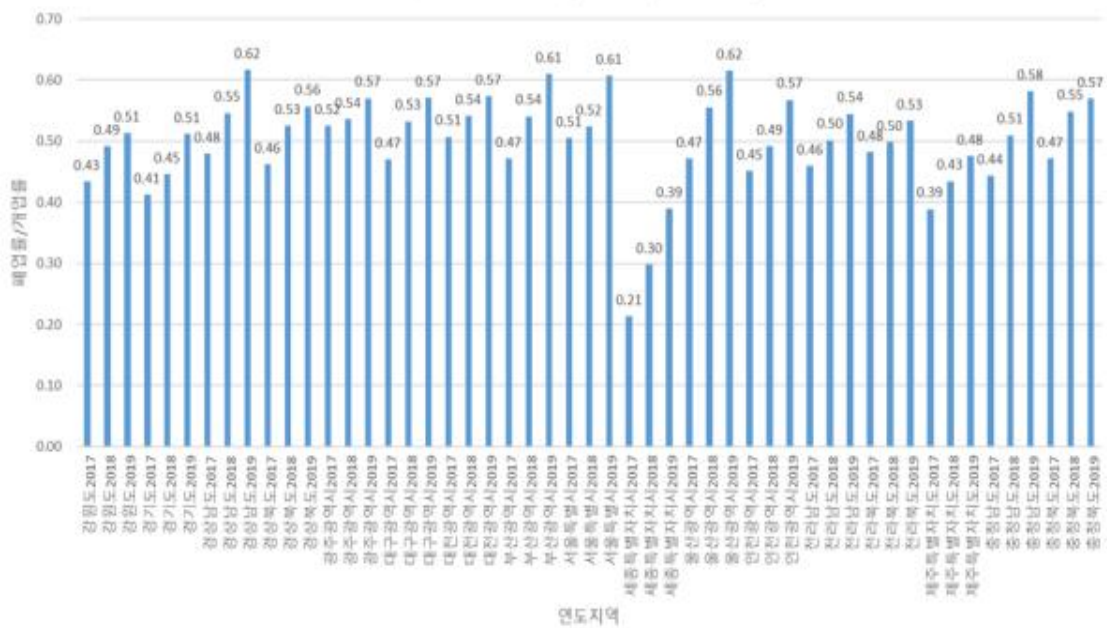
- 진입이 철수보다 유의하게 많지만, 2017년부터 2019년 연간으로 보면 진입률은 낮아지고 폐업률은 높아지는 추이를 보여, 자영업자 증가 추세는 완화되고 있었음이 확인됨.
 - 전체사업체수 대비 진입 비율은 2017년 16.75%에서 2018년 15.96%, 2019년 14.90%로 지속적으로 하락
 - 전체사업체수 대비 철수 비율은 2017년 7.69%에서 2018년 7.98%, 2019년 8.37%로 상승하고 있음.
 - 다만, 코로나 19 시기인 2020년에는 개업비율은 12.88%로 추세적 하락하였으나, 오히려 폐업비율은 6.70%로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8] 자영업 사업체 연도별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7~2019년)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9] 광역자치단체별 폐업률/개업률(KCB SOHO, 2017~2019년)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2017~2019년간 세종특별자치시처럼 개업이 압도적이었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업률은 일반적으로 개업률의 50% 이상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19년 기준 1년에 8.37% 수준(287,384개)의 사업체가 폐업하여 철수하고 있으며, 이는 창업사업체 대비 56%에 해당하는 비중임.
 - 자영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입보다 철수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의 비중 기준으로도 철수가 진입의 50%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책도 이에 맞춰 생애주기별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자영업자의 영세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철수 비중을 높여나가고 진입은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전제로 현재 상황만으로도, 경제현상 기준으로 폐업은 창업의 50% 수준에 달하는 정책 수요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자영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입보다 철수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의 비중 기준으로도 철수가 진입의 50%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책도 이에 맞춰 생애주기별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자영업자의 영세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철수 비중을 높여나가고 진입은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전제로 현재 상황만으로도, 경제현상 기준으로 폐업은 창업의 50% 수준에 달하는 정책 수요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Ⅲ. 소상공인 대상 예산사업 분석

1. 생애주기별 예산사업분석 개요

- 앞선 2장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생태계에서는 창업도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그 비중의 절반 이상으로 폐업도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 자료 기준으로 확인하였음.

- 본 장에서는 정책 공급이 정책 수요와 맞게 설계되어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현재 소상공인 정책의 생애주기별 특화 상황을 확인함.

- 창업-성장-철수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상황에 따라 재정사업이 특화하여 조준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 확인함.
-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3단계로 나누어 소상공인 정책으로 명시된 정책,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범부처 정책 기준으로 철수에 특화되어 있는 정책의 비중을 확인함.
-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으로 명시된 정책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많은 부분을 소상공인이 수혜할 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검토
- 2장에서 도출된 2019년 생애주기 비중을 사업체 숫자 수요 기준으로 검토하면, 철수-폐업지원의 경우도 8.37% 수준, 창업은 14.90% 수준, 나머지 사업이 유지 및 성장 특화로 구성되는 것이 현상 대비 기준으로 볼 수 있음.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성상 부가가치 기준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소상공인은 일반적으로 다른 생산부문 사업체 대비 규모가 작고 동질적인 측면에 강하므로 사업체 수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도 합리적인 최선의 방식으로 볼 수 있음.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예산사업 분석

-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명시적인 소상공인 지원 명칭을 가진 사업들을 관리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중 소상공인-소상공인-소공인 명칭이 붙은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분류로 볼 때 8개 사업이 확인되며 총 금액은 약 4조원 규모
- 소상공인 예산사업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유지-성장에 특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폐업특화 지원은 1.8%, 창업특화 지원은 0.6%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유지와 성장지원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사업 예산 분석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본예산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기지원	71,66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지원	131,396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창업지원	23,768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R&D)	3,962		○		

<표 4>의 계속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본예산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융자)	3,700,0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인프라	24,49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스마트상점기술보급	22,000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특화지원	74,347		○		
	합계	3,977,284	23,768	3,881,855	71,661	0
	비율		0.6%	97.64%	1.77%	0%

주: 중소기업부(2021) 자료를 기초로 저자 직접 작성

-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명칭 정책 외에도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수혜하므로 해당 정책들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장우현 외(201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함께 수혜하고 있음.
 -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중소기업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해 검토

3. 중소기업부 소상공인관련정책(중소기업정책) 예산사업 분석

- 다음으로는 생애주기별 특화를 확인하기 위해 중소기업부(2021) 자료 기준으로 중소기업부 중소기업 정책들에 대해 검토하여 진행함.
 - 총 101개 사업, 15조 4천억여원의 사업을 검토함.
 - 검토결과, 창업특화사업에 29%의 예산, 유지 및 성장사업에 54%, 특화한 것으로 보기 힘든 사업에 13.0%, 철수 및 퇴출에 특화한 사업에는 단 2.1%에 불과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5> 중소기업부 전체 사업 예산 분석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본예산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기지원	71,66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지원	131,396		○		

〈표 5〉의 계속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본예산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창업지원	23,768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R&D)	3,962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용자)	3,700,0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인프라	24,49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스마트상점기술보급	22,000		○		
중소벤처기업부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11,583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협력기반구축	1,864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기반조성	15,875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 (정보화)	13,010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25,134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28,680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98,480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화지원플랫폼	31,064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91,696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442,456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중기부)	106,361		○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수출플랫폼(정보화)	3,684		○		
중소벤처기업부	Tech-Bridge활용상용화기술개발 사업	24,923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중소기업육성프로젝트 지원사업	49,132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규제해결형기술개발(R&D)	13,856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지주회사자회사R&D지원 (R&D)	9,975		○		
중소벤처기업부	미세먼지저감실용화기술개발 (R&D)	7,785				○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CollaboR&D	46,572				○
중소벤처기업부	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R&D)	11,633				○
중소벤처기업부	예비가젤형기술개발(R&D)	12,408		○		

〈표 5〉의 계속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본예산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R&D역량제고(R&D)	14,972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R&D)	4,350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일반)	288,783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R&D)	201,103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6,093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	6,077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R&D)(일반)	408,578	○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원천기술상용화기술개발(R&D)	3,790				○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기술개발(R&D)	10,469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정보화)	6,943		○		
중소벤처기업부	AI기반고부가신제품기술개발(R&D)	7,715		○		
중소벤처기업부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437,690		○		
중소벤처기업부	빅데이터기반서비스개발지원사업(R&D)	13,000		○		
중소벤처기업부	융복합기술교류촉진(R&D)	3,710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스마트서비스지원	9,288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술연구조사(R&D)	1,758		○		
중소벤처기업부	민관협력창업자육성	102,440	○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500,000		○		
중소벤처기업부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770,000		○		
중소벤처기업부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500,000		○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출연(일반)	300,000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236,886				○
중소벤처기업부	투융자복합금융(융자)	140,000				○

〈표 5〉의 계속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본예산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250,000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제도운영	4,779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저변확대	53,185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특별)	60,000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경영지도	3,727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출연	330,00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	6,507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기반구축	126,637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40,100		○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육성	13,354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인력애로센터활용취업지원	10,013		○		
중소벤처기업부	연수사업	26,271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유입인프라조성	318,209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	36,815		○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지원자금(융자)	250,000			○	
중소벤처기업부	남북경제협력중소기업육성	198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육성	8,819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16,541				○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인프라구축(정보화)	13,425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품질기술개발(R&D)	48,031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센서선도프로젝트기술개발	10,998				○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수요형스마트공장기술개발 (R&D)	9,263				○
중소벤처기업부	위기대응지역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6,400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중기부)	83,588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	3,291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R&D)	122,707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R&D)(세종)	3,372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운영	1,082				○

〈표 5〉의 계속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본예산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혁신바우처지원사업	52,605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반로컬크리에이터활성화	8,800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인프라지원	74,888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인프라지원(세종)	80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인프라지원(제주)	1,160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공패키지	107,717	○			
중소벤처기업부	마케팅지원사업	25,900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R&D)(소부장)	31,100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R&D)(특별)	29,555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특별)	104,684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일반)	740,0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전략협력기술개발	5,013		○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기반활용플러스	8,590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R&D)	1,301		○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수요맞춤형방역물품기술 개발(R&D)	8,905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우수연구개발혁신제 품지정및시범구매사업	1,416		○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서비스플랫폼구축	216,600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데이터공동활용플랫폼기술 개발(R&D)	4,544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단지대개조지역기업R&D	9,000		○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기업성장집중지원	1,925		○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출연(특별)	60,000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제도운영	6,836		○		
합계		15,355,031	4,420,464	8,288,290	321,661	1,994,616
비율			28.79%	53.98%	2.09%	12.99%

주: 중소기업부(2021) 자료를 기초로 저자 직접 작성

4. 기타 주요부처 소상공인관련정책(중소기업정책) 예산사업 분석

□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2021) 자료에 기반하여 기타 주요부처의 중소기업정책을 검토함.

- 총 222개 사업, 14조 6천억여원의 사업을 검토함.
- 검토결과, 대부분이 유지-성장특화 또는 특화 없음, 일부 창업사업이 확인되어 철수나 퇴출에 특화한 사업은 확인할 수 없어, 2절에서 확인한 철수나 퇴출 수치 비율은 더 낮아지게 됨을 확인하였음.
- 전체 사업 중 유지-성장특화에 40%, 특화 없음이 59%, 창업에 1.3%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

〈표 6〉 소상공인 관련 사업-범부처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본예산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154,979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1,372,832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186,481		○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융자	9,167		○		
고용노동부	일터혁신지원	22,054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	59,924		○		
고용노동부	유해작업환경개선	61,592		○		
고용노동부	안전인증및안전검사	6,763		○		
고용노동부	업종별재해예방	69,571		○		
고용노동부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27,29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용자	322,758				○
고용노동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276,304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	1,296,564		○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4,746		○		
고용노동부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11,523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493,592		○		
고용노동부	근로자복지지원	1,64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해외진출역량강화	3,301		○		

〈표 6〉의 계속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본예산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해외진출지원	2,39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IT지원센터운영	5,6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미디어기술개발사업화 (R&BD)지원	1,85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기반구축 (정보화)	3,2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VR·AR콘텐츠산업육성	70,36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기업경쟁력강화	25,7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DB산업육성(정보화)	3,35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경쟁력 강화	122,97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반보호강화	22,85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기반확충	77,5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제조운영체제개발 및실증(R&D)	3,55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SW산업진흥지원(정보화 /제주)	7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SW산업진흥지원(정보화 /세종)	78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SW산업진흥지원(정보화 /지역지원포함)	11,0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SW전문기업육성	7,63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연구성과기반BIG선도 모델	4,66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핵심기술개발(R&D)	1,44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 단지조성	9,6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389,9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58,86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	1,7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산업창출및중소 기업육성	3,069				○

〈표 6〉의 계속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본예산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과미래앞장감양성	80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창의기업육성	14,75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협력기반ICT스타트업 육성(R&D)	5,10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융용기술개발지원 (융자)	25,58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시험인증허브기반 구축	19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 개발(R&D)	2,40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기반개방형혁신제품서 비스개발(R&D)	2,920				○
관세청	수출입화물검사지원	9,128		○		
국토부	물류산업지원	2,954				○
국토부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R&D)	39,685		○		
국토부	국토교통혁신펀드	20,000		○		
국토부	자동차대체부품활성화사업	4,500		○		
금융위원회	경영지도	12,020				○
금융위원회	보증연계투자	60,000				○
금융위원회	코넥스시장활성화지원	1,235				○
금융위원회	팩토링금융	39,750		○		
기상청	연직바람관측장비융합기술 개발(R&D)	1,494				○
기상청	기상산업활성화	11,678				○
기상청	미래유망민간기상서비스성장 기술개발(R&D)	2,624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R&D)	17,497				○
농림축산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R&D)	3,985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R&D)	13,363				○
농림축산식품부	유용농생명자원산업화기술 개발(R&D)	8,663				○

〈표 6〉의 계속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본예산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첨단생산기술개발(R&D)	9,972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수출활성화	2,233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16,694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ICT기자재국가표준 확산지원	4,100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모태펀드출자	40,000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80,903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용자)	372,882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인프라강화	47,506				○
농림축산식품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R&D)	20,826				○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성식품산업육성	6,051				○
농림축산식품부	맞춤형혁신식품및천연안심 소재기술개발(R&D)	10,506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종합자금	179,800				○
농림축산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	14,383				○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유통활성화지원(용자)	80,000				○
농림축산식품부	GoldenSeed프로젝트(R&D)	25,280				○
농림축산식품부	사료산업종합지원(용자)	50,610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육성	64,609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창업지원및벤처육성	74,504	○			
문화체육관광부	공간정보기반실감형콘텐츠 융복합기술개발(R&D)	1,095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용자지원	599,000		○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및대중문화산업육성	54,063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연구개발(R&D)	56,779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투자활성화	28,305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콘텐츠산업균형발전지원	49,730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생태계조성	48,254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지원	8,699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39,283		○		

〈표 6〉의 계속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본예산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금융지원	119,220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60,386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R&D)	4,291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창업·선도기업육성핵심 기술개발(R&D)	1,701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42,392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육성	28,636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 개발(R&D)	10,578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창업및융합활성화	3,950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수출지원	51,947		○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1,375				○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R&D)	90,832				○
방위사업청	국방벤처기업육성	19,722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이차보전	9,316				○
방위사업청	글로벌방산강소기업지원	11,836		○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밀착형방송광고활성화 기반구축	1,640				○
방송통신위원회	혁신형중소기업방송광고활 성화지원	1,350				○
산림청	산촌활성화지원	15,455				○
산림청	목재자원의고부가가치첨단화 기술개발(R&D)	8,735				○
산림청	산림과학기술실용화지원사업 (R&D)	4,921				○
산림청	융복합기반임산업의신산업화 기술개발(R&D)	2,115				○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50,819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사중재원지원	918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83,071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경쟁력강화지원	41,173		○		

〈표 6〉의 계속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본예산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산업부)	81,692				○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4,561				○
산업통상자원부	CDM기반정밀의료데이터통합플랫폼기술개발(R&D)	4,980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기술개발(R&D)	110,675				○
산업통상자원부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R&D)(산업부)	3,430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용임베디드시스템기술개발(R&D)	8,357				○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R&D)	7,992				○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제조)(R&D)	63,703				○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하이브리드PCB기술개발(R&D)	4,900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형스마트그리드실증(R&D)	5,357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전원확대와전력계통안정화를위한RMS기술개발(R&D)	4,365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4,865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R&D)	1,346				○
산업통상자원부	ESS기술개발사업(R&D)	4,080				○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R&D)	14,457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국제협력(R&D)	81,896				○
산업통상자원부	우수기술연구센터(ATC)	25,200				○
산업통상자원부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R&D)	39,812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R&D)(산업부)	5,000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성과활용촉진	25,088				○

〈표 6〉의 계속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본예산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화연계기술개발(R&D)	14,855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 구축(R&D)	195,437				○
산업통상자원부	청정제조기반구축(R&D)	1,980				○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9,000				○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제품성능안전평가기술 개발및기업지원	3,320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의류혁신역량강화사업	5,278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 사업(R&D)	12,391				○
산업통상자원부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산업육성 사업	8,636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혁신Lab기술개발	9,297				○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13,890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글로벌투자연계기술 개발(R&D)	9,741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R&D)	886,632				○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산업경쟁력강화(R&D)	1,847				○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주력산업품질대응뿌리 기술개발사업(R&D)	27,272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R&D)	48,202				○
산업통상자원부	가격변동리스크헷지지원	46,658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	136,905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플랜트진출확대	8,372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에특)(R&D)	214,010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 육성(R&D)	4,668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19,132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유자)	326,000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진단보조	10,575				○

〈표 6〉의 계속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본예산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	2,566				○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핵심기술개발(R&D)	56,218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안전부품경쟁력강화기술 개발(R&D)	6,526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중대사고방지안전강화 기술개발(R&D)	7,050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72,196				○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R&D)	11,748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9,000				○
산업통상자원부	e-모빌리티기업지원센터구축 지원	5,500				○
산업통상자원부	드론활용서비스시장창출지원 (R&D)	8,580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지역미래자동차핵심 부품개발(R&D)	1,875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지역미래형전기차 부품개발(R&D)	5,508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연계형자동차부품기술 개발(R&D)	4,366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부품기업혁신지원	5,845				○
산업통상자원부	자율비행개인항공기기술개발 (R&D)	7,335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통합유지보수기반구축 (R&D)	2,592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기술개발(R&D)	5,664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R&D)	283,890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534,000				○
산업통상자원부	LNG발전용가스터빈고온부품 성능검증혁신기술개발(R&D)	4,455				○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용가스터빈연료다변화 기술개발사업(R&D)	5,986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발전미세먼지저감친환경 설비혁신기술개발(R&D)(산업부)	6,833				○

〈표 6〉의 계속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본예산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 지원(R&D)	32,220				○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혁신성장	24,610				○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혁신성장(R&D)	5,793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77,888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세종)	5,991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활력프로젝트	18,725				○
산업통상자원부	i-Ceramic플랫폼구축사업 (R&D)	5,000				○
산업통상자원부	수송분야비배기관미세먼지 저감사업(R&D)	7,000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14,313				○
산업통상자원부	대체물질활용기술개발	655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산업기술(R&D)	127,013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156,711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	186,840				○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제도활성화	7,281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고도화	6,838				○
조달청	정부조달국제협력제체구축	3,347				○
조달청	조달물자구매및관리지원(자본)	44,500				○
특허청	IP-R&D전략지원(R&D)	40,352				○
특허청	모태조합출자	20,000	○			
특허청	스타트업지식재산바우처	1,686				○
특허청	여성발명진흥	1,696				○
특허청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11,770				○
특허청	지식재산창출지원	19,026				○
해양수산부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4,750				○
해양수산부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R&D)	8,950				○
해양수산부	우수수산물지원(용자)	132,401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매지원(용자)	70,389		○		

<표 6>의 계속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본예산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해양수산부	해양모태펀드	10,000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수요기술개발사업 (R&D)	14,060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신산업육성및기업 투자유치지원	12,601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	4,830				○
환경부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51,932				○
환경부	물산업진흥및물기업육성	6,030				○
환경부	재활용저해제 품순환이용성 개선기술개발사업(R&D)	8,386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체계선진화	62,155				○
환경부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	21,640				○
환경부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30,000				○
환경부	중소환경기업사업화지원사업	89,730				○
환경부	글로벌담환경기술개발사업	8,918				○
환경부	환경시설재난재해대응기술 개발사업	5,511				○
환경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311,078				○
환경부	사업장미세먼지관리	505,561				○
환경부	생활주변미세먼지관리사업	72,761				○
환경부	유망녹색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9,223				○
합계		14,586,468	187,721	5,833,273	0	8,565,474
비율		100%	1.29%	39.99%	0	58.72%

4. 소결

□ 이상의 분석 결과, 현실 생태계에서의 철수 수요와 비교해 볼 때 재정사업 중 철수에 특화된 사업의 수와 예산액은 과소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예산 15조 4천억원의 29%가 창업, 54%가 성장과 유지 특화, 13%는 특화되지 않게 조준된 반면 철수에 특화된 사업 예산은 2.1%에 불과함.

- 기타 부처의 소상공인 관련 예산 14조 5천억원 중에서는 철수에 특화된 사업 예산이 존재하지 않았음.
- 정확히 소상공인, 철수에 조준된 금액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 설계에 있어 소상공인의 철수에 관련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실제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수혜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분석이 불가능함.
 - 정책제언에서 제시하겠지만 각 부처가 소상공인 지원 비율, 소상공인 지원 비율 중 생애주기 지원비율을 사업별로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IV. 소상공인 정책수요: 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1. 소상공인 정책수요분석 개요

-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협조를 받아, 소상공인 사업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라 폐업 현황 조사 내용과 수요에 대해 분석함.
 - 소상공인 진흥공단 조사에서 폐업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생계비 확보로 나타나고 있음.
- 별도의 설문 조사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권리금 회수와 시설 집기 처분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폐업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보고서와 같이 ‘생계비 지원’이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대출 상환 유예’ 14.1%, ‘손실보상 소급적용’ 12.1%, ‘세금 면제 또는 유예’ 10.1%, ‘권리금 보호’ 9.4% 등 자금 지원과 보호에 대한 응답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나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2. 소상공인 폐업관련 정책수요 분석⁶⁾

가. 폐업 소요 기간

- 폐업 소요 기간으로는 3개월 미만(43.3%), 3개월 ~ 6개월 미만(28.7%)로 가장 많이 나타남

6) 소상공인연합회(2020), 「소상공인 사업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조사기간: 2020년 10월 13일~ 2020년 11월 3일)

- 폐업 소요 기간으로의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및 광역시의 경우 3개월 미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연령별로는 30~40대의 경우가 3개월 미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 10] 폐업 소요 기간

[Base: n=300(괄호 안은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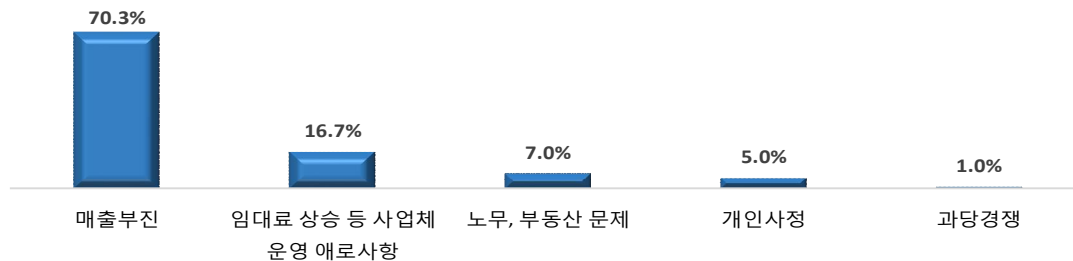


나. 폐업의 주된 원인(1순위)

- 폐업의 주된 원인으로는 매출부진(70.3%)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폐업의 주된 원인(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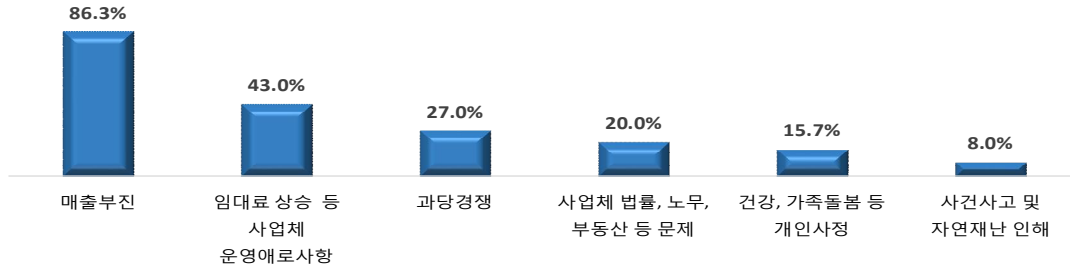
[Base: n=300, 단위: %]



- 폐업의 주된 원인으로는 매출부진(86.3%)로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광역시의 경우 매출부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30대의 경우는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인상 등 안정적 사업체 운영의 애로사항으로 인한 폐업이 이루어졌다고 함

[그림 12] 폐업의 주된 원인(1+2순위)

[Base: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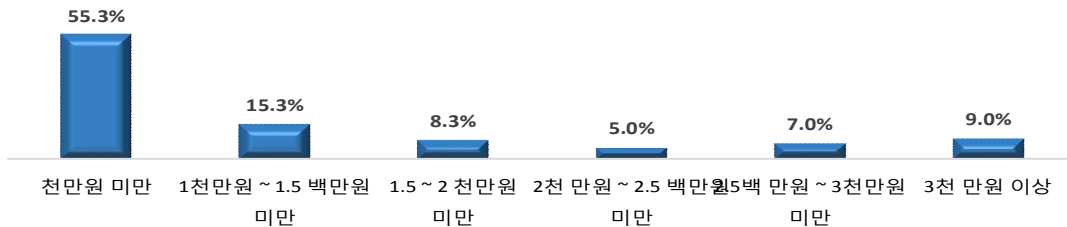
다. 폐업 비용 관련

1) 폐업 소요 비용

- 폐업 소요 비용으로는 천만원 미만(55.3%)이 응답자의 1/2 이상을 차지함
연령이 높을수록 천만원 미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13] 폐업 소요 비용

[Base: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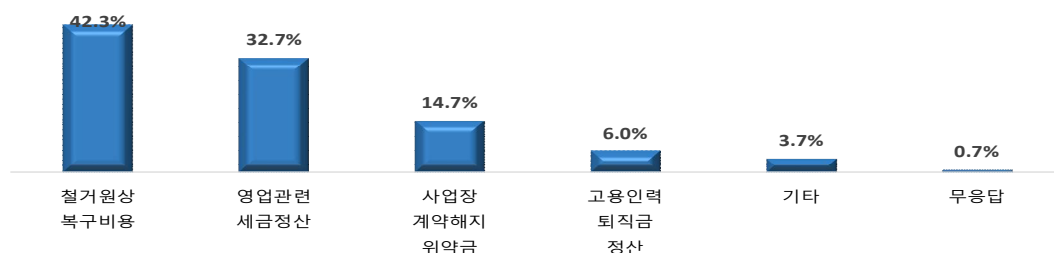


2) 폐업까지 소요된 비용의 구체적 내용(1순위)

- 폐업 소요된 비용의 구체적 내용은 철거원상 복구비용(42.3%), 영업관련(32.7%) 순으로 나타남
- 30대 이상의 경우 사업장 계약해지 위약금이 20대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14] 폐업까지 소요된 비용의 구체적 내용(1순위)

[Base: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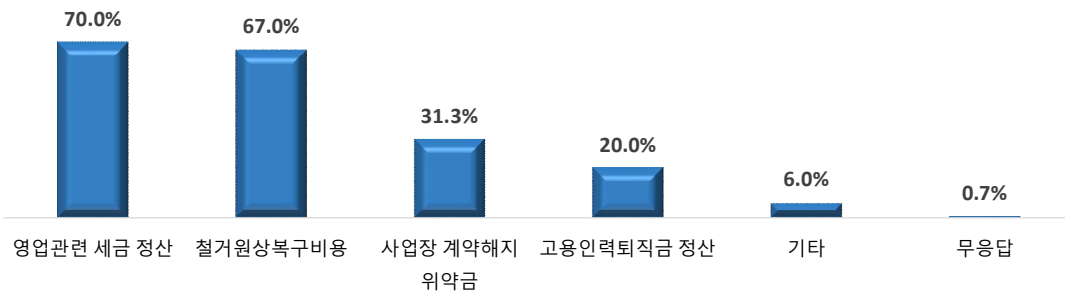


○ 폐업 소요된 비용의 구체적 내용은 철거원상 복구비용(42.3%), 영업관련(32.7%) 순으로 나타남

- 30대 이상의 경우 사업장 계약해지 위약금이 20대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15] 폐업까지 소요된 비용의 구체적 내용(1+2순위)

[Base: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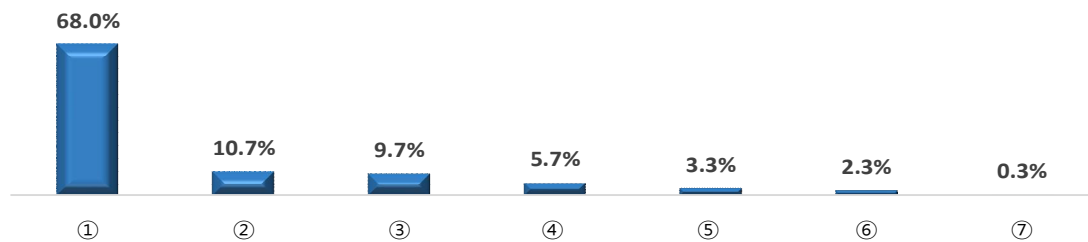
라. 폐업 과정 혹은 폐업 시 가장 어려운 점

○ 폐업 과정 혹은 폐업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생계비 확보(68.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경기지역, 30대가 생계비에 어려움이 타 집단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16] 폐업 과정 및 폐업 시 가장 어려운 점(1순위)

[Base: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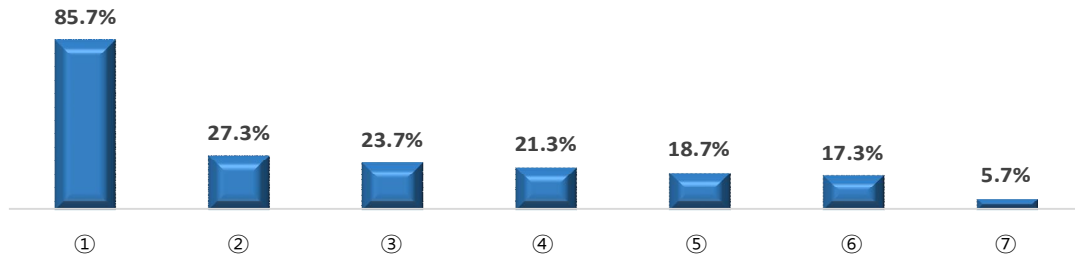
주: ① 생계비 확보 ② 미래에 대한 불안(재창업, 재취업 등에 대한 불확실성) ③ 기타 영업시 또는 영업 종료에 따라 발생된 손해비용 ④ 폐업 정리절차에 따른 세금 정산 및 신고 ⑤ 사업체 기존 설치정리 비용(철거, 원상복구 등) ⑥ 법 관련 분쟁(가맹사업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⑦ 기타

○ 폐업 과정 혹은 폐업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생계비 확보(68.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경기지역, 30대가 생계비에 어려움이 타 집단 대비 높게 나타남

[그림 17] 폐업 과정 및 폐업 시 가장 어려운 점(1+2순위)

[Base: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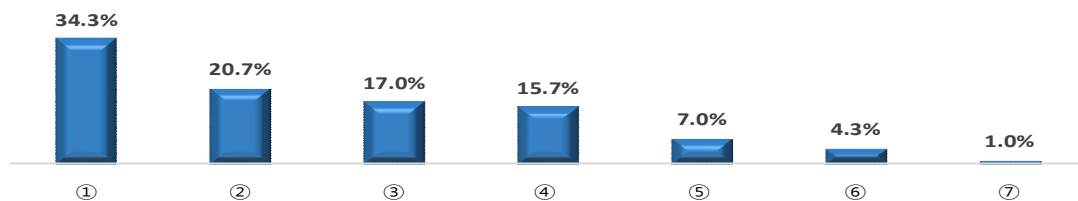
주: ① 생계비 확보 ② 미래에 대한 불안(재창업, 재취업 등에 대한 불확실성) ③ 기타 영업시 또는 영업 종료에 따라 발생된 손해비용 ④ 폐업 정리절차에 따른 세금 정산 및 신고 ⑤ 사업체 기존 설치정리 비용(철거, 원상복구 등) ⑥ 법 관련 분쟁(가맹사업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⑦ 기타

마. 폐업 시 필요한 정부의 지원정책

- 폐업 시 필요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는 가계생활안정자금지원(34.3%), 재창업취업을 위한 지원(20.7%), 폐업절차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17.0%)순으로 나타남

[그림 18] 폐업 시 정부의 지원정책(1순위)

[Base: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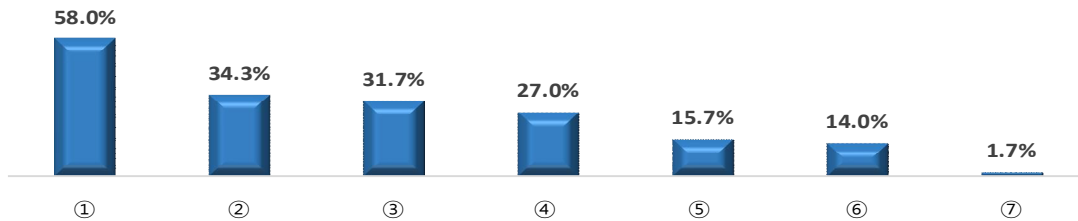


주: ① 가계생활 안정자금 지원 ② 재창업 취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 ③ 폐업절차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 ④ 철거원상 복구비용 자금 지원 ⑤ 신용불량 회복을 위한 지원 ⑥ 사회보험 지원 ⑦ 기타

- 폐업 시 필요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는 가계생활안정자금지원(58.0%), 재창업취업을 위한 지원(34.3%), 폐업절차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31.7%)순으로 나타남

[그림 19] 폐업 시 정부의 지원정책(1+2순위)

[Base: n=300, 단위: %]



주: ① 가계생활 안정자금 지원 ② 재창업 취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 ③ 폐업절차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 ④ 철거원상 복구비용 자금 지원 ⑤ 신용불량 회복을 위한 지원 ⑥ 사회보험 지원 ⑦ 기타

V. 정책제언과 결론

- 자영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입보다 철수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의 비중 기준으로도 철수가 진입의 50%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책도 이에 맞춰 생애주기별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자영업자의 영세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철수 비중을 높여나가고 진입은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전제로 현재 상황만으로도, 경제현상 기준으로 폐업은 창업의 50% 수준에 달하는 정책 수요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2017~2019년간 모든 지역, 모든 기간, 사실상 모든 업종에서 개업이 폐업보다 유의하게 높으며, 이에 따라 사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KCB 월별 자료로부터 도출한 평균 전체 자영업체 사업체 수는 3,430,500개이며, 해당연도 폐업사업체 수는 287,384개, 개업사업체 수는 511,815개로 전체 사업체 대비 연간 폐업비율은 8.37%, 개업비율은 14.90%임.
 - 2017~2019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단위 모두에서 개업은 폐업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분류 기준 업종에서도 일부 이상치 외 절대 다수의 업종에서 개업은 폐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진입이 철수보다 높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됨.

-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던 2020년의 경우에도 자영업의 진입은 철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자영업 사업체 수도 증가하고 있음.
- 재정사업 분석 결과, 현실 생태계에서의 철수 수요와 비교해 볼 때 재정사업 중 철수에 특화된 사업의 수와 예산액은 과소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예산 15조 4천억원의 29%가 창업, 54%가 성장과 유지 특화, 13%는 특화되지 않게 조준된 반면 철수에 특화된 사업 예산은 2.1%에 불과함.
 - 기타 부처의 소상공인 관련 예산 14조 5천억원 중에서는 철수에 특화된 사업 예산이 존재하지 않았음.
- 정책 설계에 있어 생애주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철수에 관련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접근이 제시될 수 있음. 첫째,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정책들을 생애주기별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함.
 - 현행 정책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특화되지 않은 경우, 창업-성장-철수 중심의 생애주기별 특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재정 조준 확인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비중, 생애주기별 지원 비중을 파악하여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
- 다음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철수를 지원하는 특화 사업을 추가 설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의 수요에 따라 단기 생활자금 지원, 설비 처리 지원, 권리금 문제 해결,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해결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폐업 사업체들이 받을 수 없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금액 등 사업 규모를 파악하여 보완적인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기존의 제도들을 강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선택지임.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지원, 명시적인 재정정책은 아니지만 노란우산 공제와 같은 공제제도가 있음에 주목하여 해당 제도에 대한 지원을 모색할 수 있음.

- 종합적으로, 중장기적, 중기적, 단기적 접근으로 나누어 가능한 선택지들을 조합하여 접근할 것을 제언함.
 - 사업을 재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목적을 위해 현업 당국이 개별 정책에 있어 소상공인 지원 비중과, 생애주기 배분 비중을 관리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기적으로는 증거에 기반하여 폐업컨설팅, 설비처분 관련 정보 제공 등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설계를 추구해볼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현장의 수요에 생활자금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지원, 노란우산공제제도의 보장 등을 통해 접근하는 것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의 목표로 소상공인 경쟁력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동력 확충도 함께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는 창업 외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주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 향후 5년간 인구대비 자영업자 사장 비율 목표를 하향 목표로 낮추어 나가는 한편, 소상공인 인당지급액 등 질적 지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
 - 현실에서 진입과 철수가 유사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과, 정책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철수를 촉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진입지원만큼 철수지원 비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설계 및 예산배분을 할 수 있도록 조정

제1장 서론

한국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섹터는 2018년 기준 경제 내에서 30%~40%에 달하는 높은 고용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개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평균 규모는 비정상적으로 영세하여 소상공인 1개 업체 당 고용은 1.5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기준 소상공인 섹터의 고용 897만명과,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취업자 2,682만명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대한민국 경제에서 소상공인 섹터의 고용비중은 약 33%에 달한다.⁷⁾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기준 소상공인 섹터의 고용 897만명과 소상공인 기업 620만개를 적용하면, 소상공인 1인당 소상공인 본인을 포함한 고용은 1.45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KDI에서 발간한 이진국(2020)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자영업자 사장 수 비중은 OECD 주요 33개국 중 멕시코에 이어 2등에 달하는 특이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인구대비 자영업자 사장 수는 10.9%로 11.6%인 멕시코에 이어 2등이며,⁸⁾ 취업자 2,682만명 중 21%가 자영업자 사장으로서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사장 수는 그리스, 멕시코에 이어 3등에 위치한다.

〈표 1-1〉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전 산업(2018년 기준)

(단위: 천명, %)

국가	취업자 (천명)	임금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인구 대비 자영업자 수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소계	고용주	자영자		
Greece	3,751	67.4%	29.1%	7.5%	21.6%	3.5%	10.2%
Mexico	53,721	68.4%	27.1%	4.8%	22.3%	4.5%	11.6%
Korea	26,822	74.9%	21.0%	6.2%	14.9%	4.1%	10.9%
Italy	22,586	78.3%	20.6%	5.7%	14.9%	1.1%	7.7%
Turkey	27,882	69.5%	20.3%	4.4%	15.8%	10.2%	6.9%

7)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에 의한 추정이므로, 일관성을 위해 2018년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의 전수 조사 기준 일자리 수 2,342만개를 적용하면 38%까지 비중이 증가함

8) OECD 33개국 단순 평균값은 6%임

〈표 1-1〉의 계속

(단위: 천명, %)

국가	취업자 (천명)	임금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인구 대비 자영업자 수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소계	고용주	자영자		
Poland	16,133	80.3%	17.4%	3.9%	13.5%	2.3%	7.3%
Spain	19,136	84.4%	15.2%	4.8%	10.4%	0.4%	6.2%
Portugal	4,615	86.6%	13.1%	4.5%	8.6%	0.4%	5.9%
Ireland	2,180	86.7%	12.9%	4.1%	8.8%	0.4%	5.8%
Belgium	4,699	86.6%	12.7%	3.7%	8.9%	0.7%	5.2%
Switzerland	4,489	87.0%	11.6%	5.4%	6.2%	1.4%	6.1%
Finland	2,465	88.1%	11.6%	3.4%	8.1%	0.3%	5.2%
Iceland	188	88.8%	11.1%	3.9%	7.2%	0.1%	5.9%
France	26,686	88.8%	10.9%	4.1%	6.8%	0.3%	4.4%
Lithuania	1,324	88.5%	10.8%	2.4%	8.4%	0.7%	5.1%
Hungary	4,411	90.1%	9.7%	4.1%	5.6%	0.2%	4.4%
Australia	12,584	90.4%	9.5%	9.5%	0.0%	0.2%	4.8%
Sweden	4,910	91.3%	8.6%	3.5%	5.1%	0.1%	4.1%
Japan	66,640	89.1%	8.0%	8.0%	0.0%	2.3%	4.2%
Luxembourg	278	91.4%	7.5%	2.9%	4.6%	1.1%	3.4%
Denmark	2,739	92.5%	7.2%	3.1%	4.0%	0.3%	3.4%
Norway	2,545	93.6%	6.2%	1.8%	4.5%	0.2%	3.0%
United States	155,761	93.7%	6.2%	6.2%	0.0%	0.1%	3.0%
Czechia	5,147	83.5%	16.0%	3.0%	13.0%	0.5%	7.7%
Netherlands	8,543	84.3%	15.4%	3.9%	11.5%	0.3%	7.6%
Canada	18,658	84.7%	15.2%	4.6%	10.6%	0.1%	7.7%
Slovakia	2,533	85.4%	14.6%	2.8%	11.8%	0.0%	6.8%
United Kingdom	31,112	85.9%	13.8%	1.9%	11.9%	0.3%	6.5%
Latvia	873	88.6%	11.0%	4.4%	6.6%	0.4%	5.0%
Estonia	630	89.5%	10.4%	4.5%	6.0%	0.1%	5.0%
Slovenia	962	86.0%	12.1%	3.7%	8.4%	1.9%	5.6%
Austria	4,241	88.9%	10.4%	4.5%	5.9%	0.7%	5.0%
Germany	40,636	91.0%	8.8%	4.0%	4.8%	0.2%	4.3%

주: Norway는 2016년 기준

자료: 이진국(2020)에 의함; EuroStat, ILO, OECD, Canada Stat, 경제활동인구조사 MDIS를 바탕으로 작성

이처럼 우리 경제 생산부문 생태계의 구성 비중에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는 많은 반면 생산성이 낮음 또한 꾸준히 지적되어 오고 있다. 장우현 외(2013)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전체 물리적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체⁹⁾의 88.11%, 전체 종사자의 40.05%를 점유하지만 매출은 12.34%, 종사자지급액은 13.19%에 그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2〉 대기업,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소상공인 주요 통계: 비율

대기업과 핵심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는 생산성 및 수익성과 역(逆)의 관계

비율(%)	대기업	핵심중소기업	소상공인
기업	0.15	7.74	92.10
사업체	2.30	9.59	88.11
매출액	60.98	26.68	12.34
영업이익	61.47	18.46	20.06
상용종사자 수	31.39	52.16	16.44
상용종사자 지급액	43.42	46.37	10.22
종사자 수	22.46	37.49	40.05
상용종사자 지급액	40.95	45.86	1.19
R&D 지출액(경상연구개발비)	67.98	29.52	2.50
평균대비 비율(100%)	대기업	핵심중소기업	소상공인
종사자당 지급액	182.35	122.31	32.94
상용종사자당 지급액	138.29	88.89	62.13
종사자당 영업이익	273.72	49.25	50.10

중소기업

주: 1) 201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함, 소상공인은 5인(서비스업) 또는 10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또는 운송업) 미만 사업체임, 핵심중소기업은 법적인 중소기업이면서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으로정의함.

2) 장우현 외(2013)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전체 물리적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체¹⁰⁾의 88.11%, 전체 종사자의 40.05%를 점유하지만 매출은 12.34%, 종사자지급액은 13.19%에 그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열악함.

자료: 장우현 외(2013)에 의함.

9) 2011년 경제총조사 마이크로 전수조사 분석에 따름.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특고 노동자들 등은 제외됨.
 10) 2011년 경제총조사 마이크로 전수조사 분석에 따름.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특고 노동자들 등은 제외됨.

영세구조와 생산성 미흡은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오히려 성장잠재력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볼 현상은 아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영세 구조를 극복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섹터의 규모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저성장 국면에 있어 성장을 제고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우현 외(2013)의 2011년 경제총조사 기준 분석¹¹⁾에 따르면, 2010년 소상공인의 인당 지급액은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인당지급액 대비 29%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만일 이 수치를 80% 수준으로만 향상시킬 수 있어도 지급액 증가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가가치는 53조원 규모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명목 GDP 1,323조원 대비 4%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효율화된 영역으로부터는 GDP 성장률 0.1% 기여도 제고가 곤란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성장잠재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3〉 대기업,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소상공인 주요 통계: 절대수치

	전체 산업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체
기업체 수	4,818	244,524	2,908,332	3,157,674
사업체 수	76,975	320,712	2,945,854	3,343,541
매출액	2,542,034,978	1,112,380,790	514,518,063	4,168,933,831
영업이익	181,187,985	54,423,333	59,133,007	294,744,325
상용근로자 수	3,169,616	5,266,658	1,659,889	10,096,163
상용임금총액	134,587,436	143,743,164	31,666,490	309,997,090
상용 인당 임금	42,462	27,293	19,077	30,704
종사자 수	3,803,235	6,349,365	6,782,187	16,934,787
종사자 임금총액	138,716,231	155,333,406	44,681,503	338,731,140
종사자 인당 임금	36,473	24,464	6,588	20,002
종사자 인당 이익	47,640	8,571	8,719	17,405
경상연구개발비	14,752,798	6,405,674	543,572	21,702,044
사업체당 업력	14,54	11,29	7,24	7,80

주: 1. 매출액, 영업이익, 임금, 경상연구개발비의 단위는 백만원
 2. 사업체당 업력의 단위는 년
 3. 2010년 경제총조사 기업체별 기준, 종사자기준, 상한기준, 주업종(대분류)판정 적용
 자료: 장우현 외(2013)에 의함.

11) 소상공인의 수와 고용 등 양적 지표를 확인하는 연구들은 많으나 부가가치, 영업이익, 종사자임금 등 질적 자료를 전수로 확인한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해당 연구를 인용함.

현재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세규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설계가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규모화와 전환에도 맞춰져야 하므로, 현재의 재정정책이 해당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대비 자영업자 사장 수 비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1인 창업 등을 과도 지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 중 성장단계에서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정책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의 철수 및 전환을 실제 발생 기준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의 설계와 예산배분이 이뤄지는 지에 대해서도 역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위한 창업성장전환을 포괄하는 생애주기지원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현황에 대해 실시간·증거기반으로 파악하고 정책을 이에 연동하여 집행하고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진단에 기반하여 자영업자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국제비교와 장기시계열 비교를 위해 샘플조사인 경제인구활동조사에 기반한 장기 추세와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제시한다. 다음으로는 신용정보에 기반한 코리아 크레딧 뷰로의 자영업자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2017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자영업자의 진입과 철수(개업과 폐업) 통계를 기간별, 지역별, 업종별로 심층분석하여 정책대상의 총량을 파악한다. 다음으로는 소상공인이 수혜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전체 중소기업정책 기준으로 파악하여 정책이 진입과 성장, 철수의 생애주기에 맞춰 어떻게 설계되고 조준되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여 정책공급과 수요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중기적으로 생애주기 전반의 정책 미스매치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당국에 제언할 수 있는 내용들을 도출하기로 한다.

제2장

소상공인을 위한 생애주기지원체계 구축 및 강화

제1절 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과 규모 추이²⁾

1. 국내 자영업자 비중과 규모의 장기 추이

본 절에서는 먼저 정책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국내 자영업자 비중과 규모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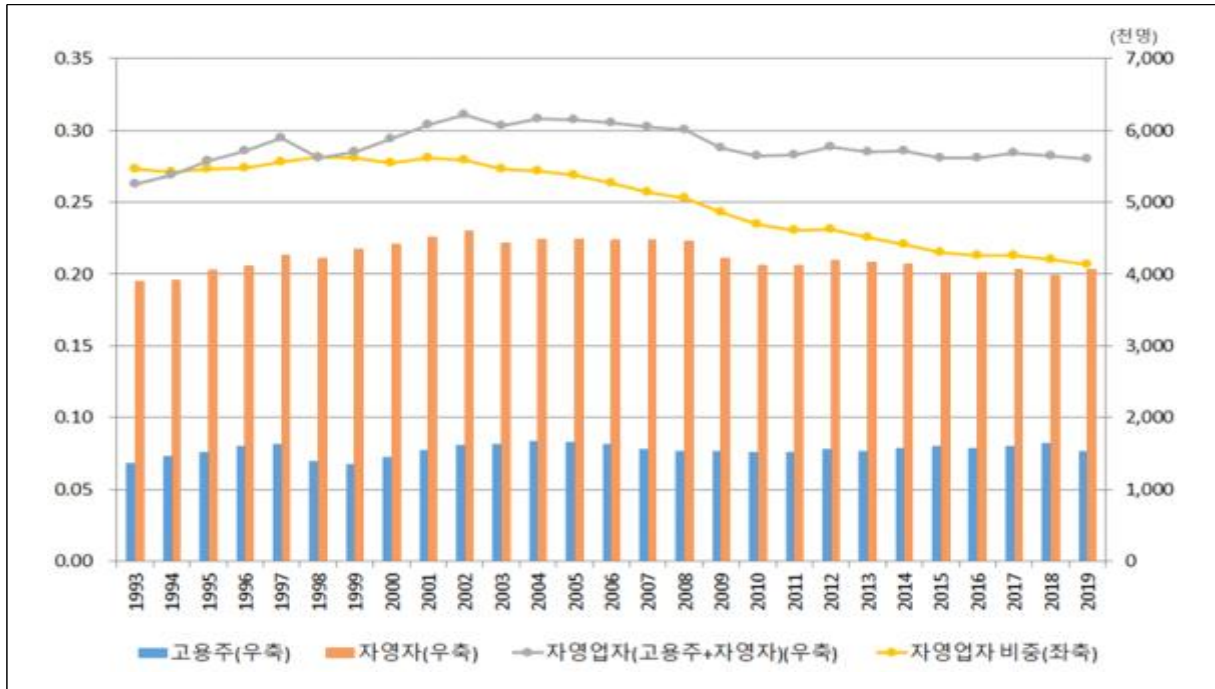
4절에서는 자영업자 신용정보에 기반한 미시자료에 따른 자영업자 현황을 살펴보게 되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미시자료는 최신의 자료로서 장기 관점에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장기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샘플 조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장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샘플자료이기 때문에 전체 평균 등 전체 통계 외 세부그룹별 통계는 신뢰성이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예컨대 지역별 통계, 업종별 통계 등을 살펴보기에는 적합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전제로, 먼저 [그림 2-1]을 통해 경제활동인구조사기준 국내 자영업자 비중과 규모 추이를 살펴보자. 우선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27.3%에서 2019년 20.7%로 감소하였다. IMF 외환위기 전후로 27~28% 수준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이다가 2000년대에 접어든 이래 본격적이고 지속적인 감소 추이가 나타난다.

12) 본 절의 내용은 이진국(2020)의 내용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적에 맞춰 인용 및 정리한 것이다.

[그림 2-1] 국내 자영업자 비중과 규모: 전 산업



주: 자영업자 비중 = (고용주+자영업자)/취업자
 자료: 이진국(2020)에 의함.

<표 2-1>을 통해서도 비중의 감소 추이가 고용주 및 자영업자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볼 수 있다. 다만 고용주 비중은 1993년 7.1%에서 2019년 5.7%로, 자영업자 비중은 20.2%에서 15.0%로 감소하여 자영업자의 비중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표 2-1> 국내 자영업자 비중 추이: 전 산업

(단위: 천명, %)

연도	취업자	임금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고용주대비 자영업자 비율
			소계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소계	고용주		자영업자	
1993	19,234	62.1	37.9	27.3	7.1	20.2	10.6	2.9
1994	19,848	62.9	37.1	27.1	7.4	19.7	10.0	2.7
1995	20,414	63.2	36.8	27.3	7.4	19.8	9.5	2.7
1996	20,853	63.3	36.7	27.4	7.7	19.7	9.3	2.6
1997	21,214	63.2	36.8	27.8	7.7	20.1	9.0	2.6
1998	19,938	61.7	38.3	28.2	7.0	21.2	10.2	3.0
1999	20,291	62.4	37.6	28.1	6.7	21.4	9.5	3.2
2000	21,173	63.1	36.9	27.8	6.9	20.9	9.2	3.0

〈표 2-1〉의 계속

(단위: 천명, %)

연도	취업자	임금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고용주대비 자영업자 비율
			소계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소계	고용주	자영업자		
2001	21,614	63.2	36.8	28.1	7.2	20.9	8.7	2.9
2002	22,231	63.9	36.1	27.9	7.3	20.7	8.2	2.8
2003	22,222	65.0	35.0	27.3	7.3	20.0	7.7	2.7
2004	22,682	65.9	34.1	27.2	7.4	19.8	7.0	2.7
2005	22,831	66.5	33.5	26.9	7.3	19.6	6.6	2.7
2006	23,188	67.3	32.7	26.3	7.0	19.3	6.3	2.7
2007	23,561	68.3	31.7	25.7	6.7	19.0	6.0	2.9
2008	23,775	68.8	31.2	25.3	6.5	18.8	5.9	2.9
2009	23,688	70.0	30.0	24.3	6.5	17.8	5.7	2.8
2010	24,033	71.2	28.8	23.5	6.3	17.2	5.3	2.7
2011	24,526	71.7	28.3	23.1	6.2	16.8	5.2	2.7
2012	24,955	71.8	28.2	23.1	6.3	16.8	5.1	2.7
2013	25,299	72.6	27.4	22.5	6.1	16.5	4.9	2.7
2014	25,897	73.2	26.8	22.1	6.1	16.0	4.7	2.6
2015	26,178	74.1	25.9	21.5	6.1	15.3	4.4	2.5
2016	26,409	74.5	25.5	21.3	6.0	15.3	4.3	2.5
2017	26,725	74.6	25.4	21.3	6.0	15.2	4.2	2.5
2018	26,822	74.9	25.1	21.0	6.2	14.9	4.1	2.4
2019	27,123	75.4	24.6	20.7	5.7	15.0	4.0	2.6

주: 고용주 대비 자영업자 비율 = 자영업자/고용주
 자료: 이진국(2020)에 의함.

〈표 2-2〉 국내 자영업자 규모 추이: 전 산업

(단위: 천명)

연도	취업자	임금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고용주대비 자영업자 비율
			소계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소계	고용주	자영업자		
1993	19,234	11,944	7,290	5,258	1,364	3,895	2,032	2.9
1994	19,848	12,479	7,370	5,376	1,463	3,913	1,994	2.7
1995	20,414	12,899	7,515	5,569	1,520	4,049	1,946	2.7

〈표 2-2〉의 계속

(단위: 천명)

연도	취업자	임금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고용주대비 자영자 비율
			소계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소계	고용주	자영자		
1996	20,853	13,200	7,653	5,710	1,605	4,105	1,943	2.6
1997	21,214	13,404	7,810	5,901	1,639	4,262	1,908	2.6
1998	19,938	12,296	7,641	5,616	1,392	4,225	2,025	3.0
1999	20,291	12,663	7,628	5,703	1,351	4,351	1,925	3.2
2000	21,173	13,356	7,817	5,876	1,455	4,421	1,941	3.0
2001	21,614	13,659	7,955	6,071	1,548	4,523	1,884	2.9
2002	22,231	14,206	8,026	6,212	1,614	4,598	1,814	2.8
2003	22,222	14,449	7,773	6,066	1,630	4,436	1,707	2.7
2004	22,682	14,936	7,746	6,161	1,677	4,484	1,585	2.7
2005	22,831	15,186	7,645	6,141	1,656	4,486	1,503	2.7
2006	23,188	15,608	7,580	6,109	1,630	4,479	1,471	2.7
2007	23,561	16,094	7,467	6,048	1,567	4,480	1,419	2.9
2008	23,775	16,357	7,418	6,005	1,538	4,467	1,413	2.9
2009	23,688	16,586	7,102	5,749	1,532	4,217	1,352	2.8
2010	24,033	17,111	6,922	5,642	1,515	4,127	1,279	2.7
2011	24,526	17,596	6,930	5,657	1,526	4,132	1,273	2.7
2012	24,955	17,921	7,034	5,768	1,570	4,199	1,266	2.7
2013	25,299	18,365	6,934	5,703	1,533	4,169	1,232	2.7
2014	25,897	18,959	6,939	5,720	1,581	4,139	1,219	2.6
2015	26,178	19,402	6,776	5,622	1,609	4,013	1,153	2.5
2016	26,409	19,669	6,740	5,614	1,584	4,030	1,126	2.5
2017	26,725	19,934	6,791	5,681	1,608	4,074	1,110	2.5
2018	26,822	20,083	6,739	5,638	1,651	3,987	1,101	2.4
2019	27,123	20,440	6,683	5,606	1,537	4,068	1,077	2.6

주: 고용주 대비 자영자 비율 = 자영자/고용주
 자료: 이진국(2020)에 의함.

하지만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가 절대 규모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표 2>에 따르면 1993년 대비 2019년의 고용주와 자영자는 각각 17만명 가량 증가하여 전체 자영업자 수는 34.7만명 늘어났다. 결국 앞선 자영업자의 비중 감소는 이 시기 동안 자영업자 보다 임금근

로자가 훨씬 큰 폭으로 증가(849.6만명)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 자영업자 규모 변동의 시기와 강도

자영업자 규모 추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가운데) 크게 세 지점에서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하였다([그림 2-1] 및 <표 2-2> 참고). 첫 번째 지점은 외환위기 충격이 도래한 1998~99년으로 2년 동안 자영업자 규모가 약 20만명 감소하였다. 이 수치는 고용주의 감소(29만명)와 자영업자의 증가(9만명)가 상쇄된 결과로서 경기불황 및 경영난을 맞아 고용주가 고용원을 감축하여 자영업자로 전환된 사례가 상당하였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자영업계의 고용원을 포함하는) 임금근로자는 1998~1999년 동안 74만명 급감하였는데, 이 때 발생한 대량의 실업 사태가 이후 2000~2002년 동안의 자영업 창업 폭증(51만명)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외환위기로 발생한 실업 충격에 대하여 자영업계가 완충 역할을 수행한 셈인데, 임금근로 일자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데다 정부의 대대적인 창업지원 확대가 실업자의 자영업계 진입을 촉발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¹³⁾

이렇게 덩치가 부풀려진 자영업계는 2003년 신용대란(또는 카드대란)을 계기로 두 번째 하락 지점을 맞이한다. 2002년 당시 국내 자영업자 수는 621만명으로, 이는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시작한) 196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자영업계에 대한 내수 소비의 크기에 비해 과도한 공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 시기에 가계부채 증가와 연체, 급격한 소비 위축을 동반한 신용대란은 자영업계에 극심한 경영난과 큰 폭의 구조조정(14.6만명 감소)을 초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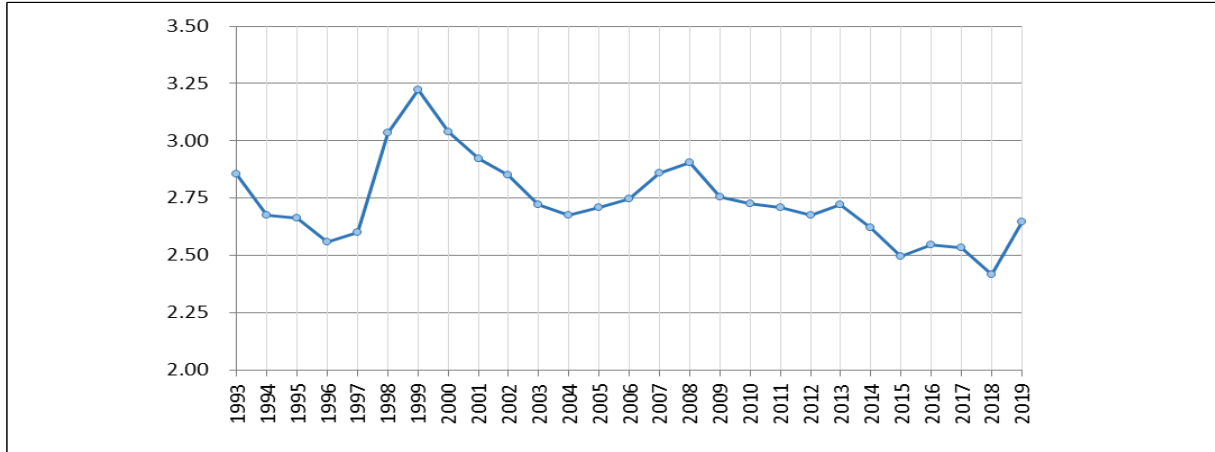
다만 신용대란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외환위기 때와 달랐던 점은 이 불황에서는 고용주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3년의 고용주는 2002년에 비해 오히려 1.6만명 증가하였고,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16.2만명에 달하였다. 구조조정이 소규모 생계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신용대란으로 줄어든 자영업계는 이후 5년 동안 수적으로 정체된 시기를 보내다가 2008년 하반기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 번째 급감을 맞이하였다. 2009~10년의 2년 동안 감축된 자영업자 수는 무려 36.3만 명이었는데 이는 자영업계의 몸집을 약 6%나 줄인 것으로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감축 사례가 되었다. 자영업자의 감소(34만명)가 대부분이었으나 고용주도 소폭 감소(2.3만명)하였다는 점에서 외환위기와 신용대란에서 보인 구조조정 양상이 혼재된 모습이었다. 세 번째 구조조정 후의 자영업자 규모는 2010년 564.2만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의 규모(561.6만명)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고, 이후 2015년

13) 정부는 외환위기 발 실업 급증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정책을 도입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실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마련하여 창업 자금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여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홍석일 외, 2016).

메르스 유행 등을 거치며 소폭의 등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2] 고용주 대비 자영자 비율



주: 고용주 대비 자영자 비율=자영자 수/고용주 수
 자료: 이진국(2020)에 의함.

분석 기간에 걸쳐 관찰되는 또 한 가지 경향은 고용주 대비 자영자 비율이 경기 불황 국면을 전후로 크게 변동한다는 점이다([그림 2-2] 참조). 외환위기를 거치며 급격하게 높아진 비율이 신용대란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자들이 경기불황에 특히 취약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2019년의 비율이 큰 폭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이듬해 코로나19가 발발한 것은 영세성의 증가와 수요의 급감이 맞물려 향후 큰 폭의 구조조정이 또 한 차례 진행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

제2절 자영업자 비중의 OECD 국제 비교¹⁴⁾

1. OECD 국가들의 자영업자 비중 변화

앞서 2절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지난 20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았다. 다음으로는 OECD 주요국 간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자영업자 비중 추이의 보편성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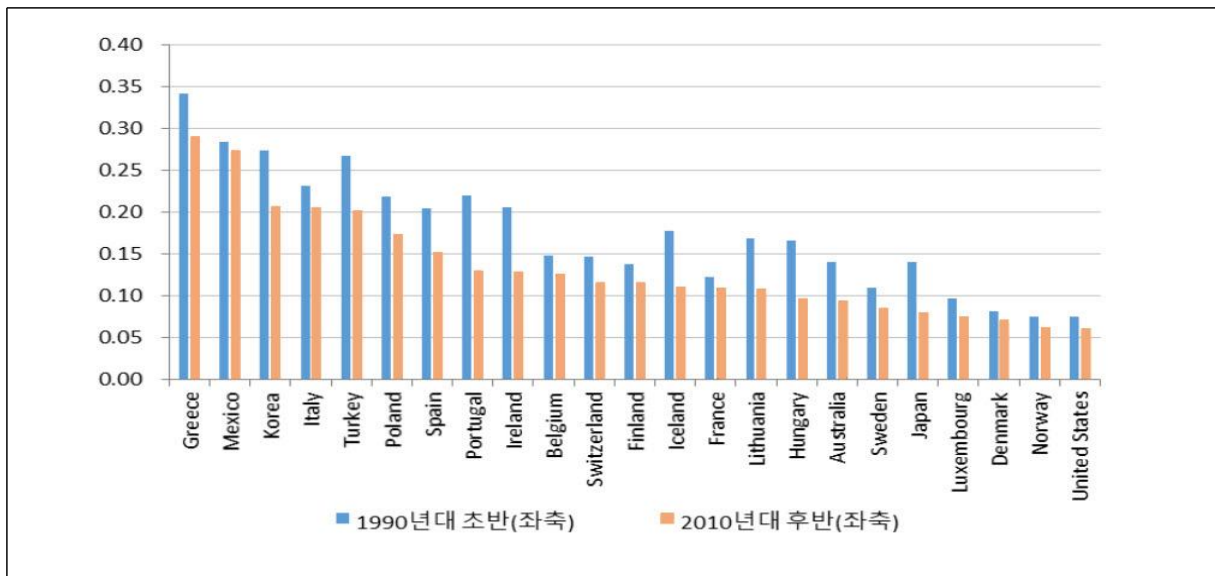
[그림 2-3]과 [그림 2-4]는 OECD 33개국의 자영업자 비중 변화를 보고한다. 각국의 1990년 초반과 2010년대 후반의 수치를 제시하였는데,¹⁵⁾ [그림 2-3]은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한 23개

14) 본 절의 내용은 이진국(2020)의 내용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적에 맞춰 인용 및 정리한 것이다.
 15) 자영업자 비중의 전후 비교 시점은 대부분의 국가들에 대하여 1992년과 2018년도로 설정되어 있다. 다만,

국을 포함하고 [그림 2-4]는 비중이 증가한 7개국을 보여준다. 두 그림에 포함되지 않은 3개국(오스트리아, 독일, 슬로베니아)에서는 전후 비중이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¹⁶⁾ 각 국가가 직면한 경제·사회·문화 여건에 따라 비중의 증가, 감소, 불변의 양상이 혼재하지만 해당 국가 수를 헤아려보았을 때 비중의 감소 추이가 우세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3~2018년의 26년 동안 자영업자 비중이 6.7%p 낮아지며 상대적으로 큰 낙폭을 보였다. 이 크기는 포르투갈(8.9%p 감소), 아일랜드(7.7%p 감소), 헝가리(6.9%p 감소)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감소폭에 해당한다. 또한 1990년대 초반에 25% 이상의 최상위 비중을 보였던 국가들(그리스, 멕시코, 터키, 한국) 중에서는 가장 크게 감소한 경우이다. 다만 큰 감소폭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그림 2-3]에 포함된 OECD 국가들 중 여전히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인구 대비 자영업자 수에 있어서도(<표 2-3>) 두 번째로 높은 10.9% 수준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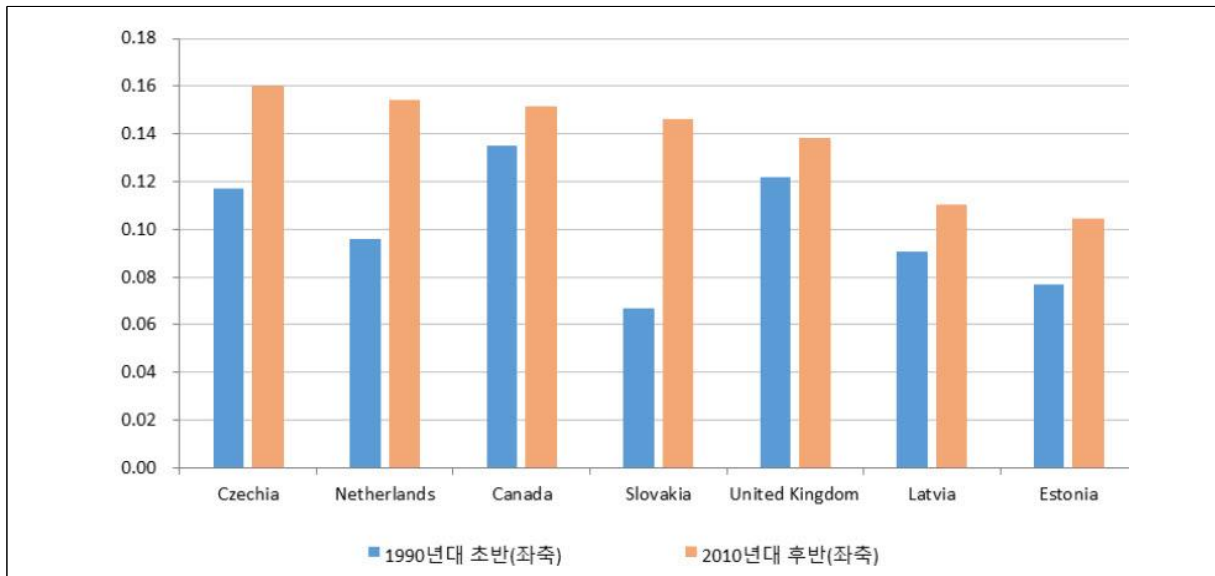
[그림 2-3] 자영업자 비중 변화: 비중 감소 국가



주: 국가별 비교 시점이 다소 상이함(예: Korea 1993 vs 2018, Denmark 1992 vs 2018).
 자료: 이진국(2020)에 의함.

1990년대 초반의 자료 가용 여건이 상이하였던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1992년과 가장 가까운 연도의 비중을 활용하였다(예: 한국 1993년 vs. 2018년, 핀란드 1995년 vs. 2018년).
 16) 오스트리아, 독일, 슬로베니아에서는 1990년대 초반과 2010년대 후반의 자영업자 비중 차이가 1%p 이하에 그쳤다.

[그림 2-4] 자영업자 비중 변화: 비중 증가 국가



주: 국가별 비교 시점이 다소 상이함(예: Korea 1993 vs 2018, Denmark 1992 vs 2018).
 자료: 이진국(2020)에 의함.

<표 2-3>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전 산업(2018년 기준)

국가	취업자 (천명)	임금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인구 대비 자영업자 수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소계	고용주	자영자		
Greece	3,751	67.4%	29.1%	7.5%	21.6%	3.5%	10.2%
Mexico	53,721	68.4%	27.1%	4.8%	22.3%	4.5%	11.6%
Korea	26,822	74.9%	21.0%	6.2%	14.9%	4.1%	10.9%
Italy	22,586	78.3%	20.6%	5.7%	14.9%	1.1%	7.7%
Turkey	27,882	69.5%	20.3%	4.4%	15.8%	10.2%	6.9%
Poland	16,133	80.3%	17.4%	3.9%	13.5%	2.3%	7.3%
Spain	19,136	84.4%	15.2%	4.8%	10.4%	0.4%	6.2%
Portugal	4,615	86.6%	13.1%	4.5%	8.6%	0.4%	5.9%
Ireland	2,180	86.7%	12.9%	4.1%	8.8%	0.4%	5.8%
Belgium	4,699	86.6%	12.7%	3.7%	8.9%	0.7%	5.2%
Switzerland	4,489	87.0%	11.6%	5.4%	6.2%	1.4%	6.1%
Finland	2,465	88.1%	11.6%	3.4%	8.1%	0.3%	5.2%
Iceland	188	88.8%	11.1%	3.9%	7.2%	0.1%	5.9%
France	26,686	88.8%	10.9%	4.1%	6.8%	0.3%	4.4%
Lithuania	1,324	88.5%	10.8%	2.4%	8.4%	0.7%	5.1%

〈표 2-3〉의 계속

국가	취업자 (천명)	임금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인구 대비 자영업자 수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소계	고용주	자영자		
Hungary	4,411	90.1%	9.7%	4.1%	5.6%	0.2%	4.4%
Australia	12,584	90.4%	9.5%	9.5%	0.0%	0.2%	4.8%
Sweden	4,910	91.3%	8.6%	3.5%	5.1%	0.1%	4.1%
Japan	66,640	89.1%	8.0%	8.0%	0.0%	2.3%	4.2%
Luxembourg	278	91.4%	7.5%	2.9%	4.6%	1.1%	3.4%
Denmark	2,739	92.5%	7.2%	3.1%	4.0%	0.3%	3.4%
Norway	2,545	93.6%	6.2%	1.8%	4.5%	0.2%	3.0%
United States	155,761	93.7%	6.2%	6.2%	0.0%	0.1%	3.0%
Czechia	5,147	83.5%	16.0%	3.0%	13.0%	0.5%	7.7%
Netherlands	8,543	84.3%	15.4%	3.9%	11.5%	0.3%	7.6%
Canada	18,658	84.7%	15.2%	4.6%	10.6%	0.1%	7.7%
Slovakia	2,533	85.4%	14.6%	2.8%	11.8%	0.0%	6.8%
United Kingdom	31,112	85.9%	13.8%	1.9%	11.9%	0.3%	6.5%
Latvia	873	88.6%	11.0%	4.4%	6.6%	0.4%	5.0%
Estonia	630	89.5%	10.4%	4.5%	6.0%	0.1%	5.0%
Slovenia	962	86.0%	12.1%	3.7%	8.4%	1.9%	5.6%
Austria	4,241	88.9%	10.4%	4.5%	5.9%	0.7%	5.0%
Germany	40,636	91.0%	8.8%	4.0%	4.8%	0.2%	4.3%

주: Norway는 2016년 기준
 자료: 이진국(2020)에 의함.

한편 [그림 2-4]와 같이 자영업자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한 국가들로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체코처럼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 공산권 국가들이 대거 보이지만 동시에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2-3]과 [그림 2-4]를 종합해보면,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 추이가 우세해 보이지만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영업자 비중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통제를 가한다면 자영업자 비중과 경제발전 정도 간에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그림 2-5]는 자영업자 비중이 ①감소한 국가들을 ②인구 규모에 따라 나누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인구 1천만 명 이상 국가들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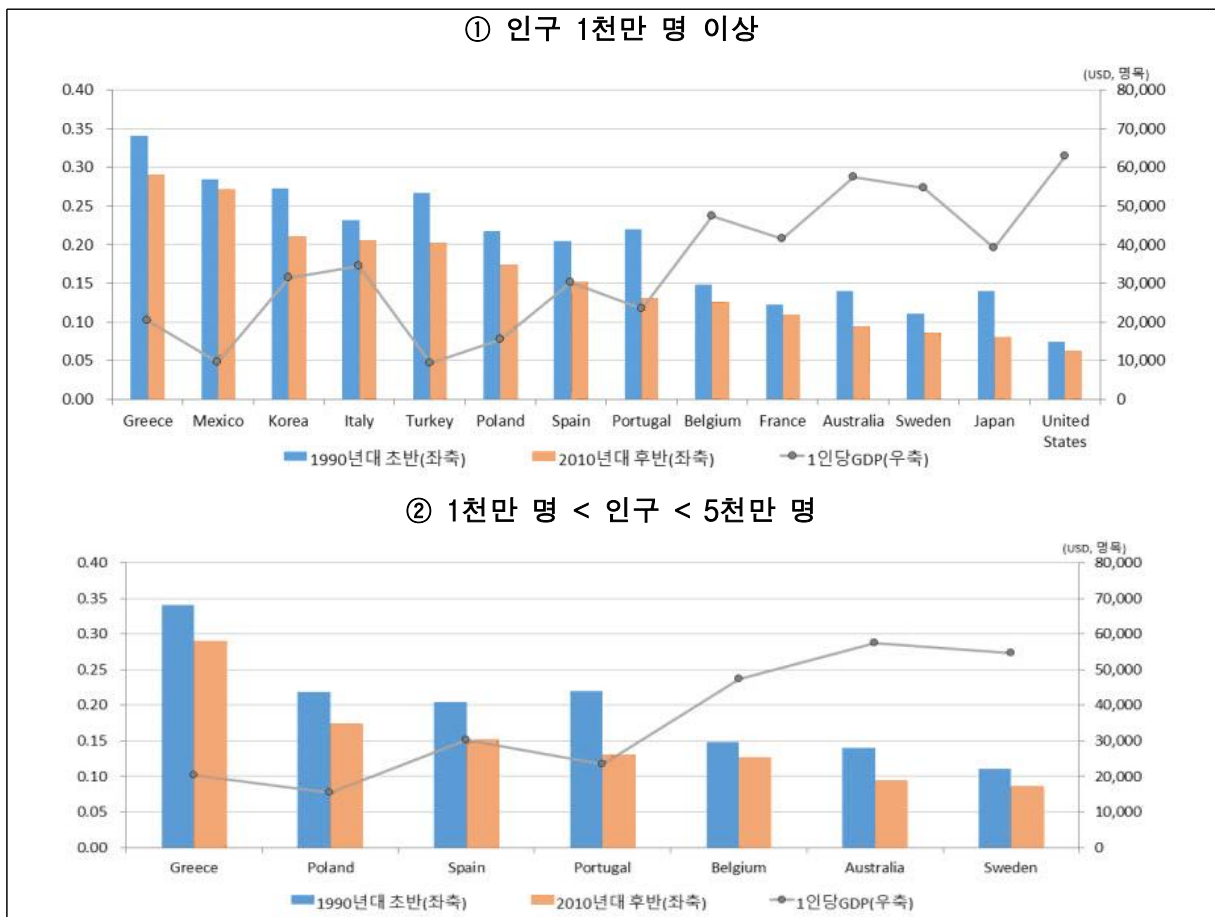
상으로 한 첫 번째 경우를 보면, 자영업자 비중이 낮은 국가일수록 1인당 GDP가 전반적으로 높은 흐름이 관찰된다.

물론 그 중에서도 평균적인 추세로부터 현격하게 벗어나 있는 국가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이탈리아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는데 1인당 GDP도 높은 국가에 속하고, 반대로 일본은 자영업자 비중은 8%로 낮은 편인데 유사한 비중 수준을 보이는 스웨덴 및 미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경우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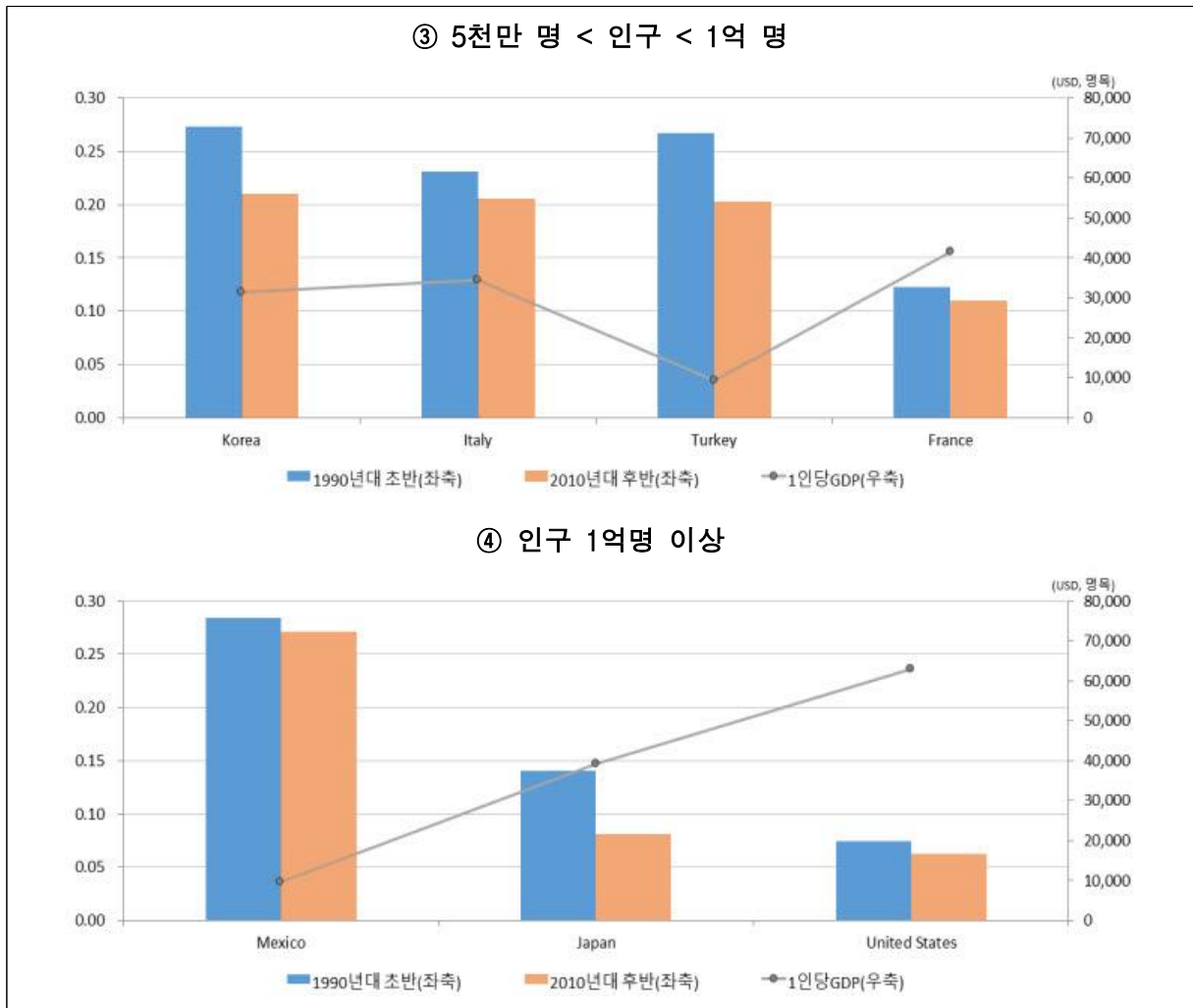
인구 규모를 조금 더 세분화하여 통제해 보면 자영업자 비중과 1인당 GDP 간의 역의 관계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그림 2-5]의 두 번째 경우와 네 번째 경우가 그러한데, 2010년대 후반에 자영업자 비중이 낮은 국가로 이동함에 따라 1인당 GDP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하지만 한국과 이탈리아가 속한 세 번째 경우는 이번에도 그러한 흐름에서 벗어나 보인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미루어 보면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영업자 비중은 평균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두 변수 간 인과관계 여부와 강도는 보다 엄밀한 계량분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그림 2-5] 인구 규모별 자영업자 비중과 1인당 GDP



[그림 2-5]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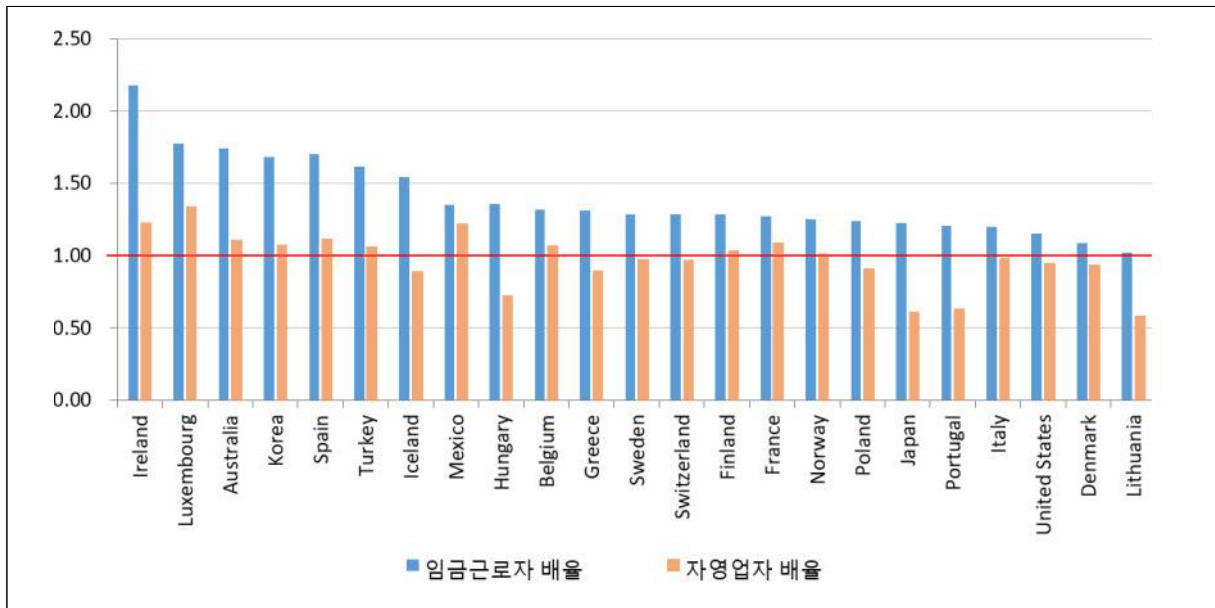


주: 전후 연도는 국가별로 다소 상이(예: Korea 1993-2019, Denmark 1992~2018).
 자료: 이진국(2020)에 의함.

2. OECD 국가들의 취업자 구성 변화

제3절에서 국내 자영업자의 비중이 감소하였지만 절대 규모는 감소하지 않았음을 보았다. 자영업자보다 임금근로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양상이 OECD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자.

[그림 2-6] 임금근로자 배율과 자영업자 배율: 자영업자 비중 감소 국가



주: 임금근로자 배율=임금근로자 수(2010년대 후반)/임금근로자 수(1990년대 초반)

자영업자 배율=자영업자 수(2010년대 후반)/자영업자 수(1990년대 초반)

자료: 이진국(2020)에 의함.

[그림 2-6]은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한 23개국을 대상으로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수의 전후 변화를 배율로 나타낸 것이다.¹⁷⁾ 분석 결과, [그림 2-6]의 모든 국가에서 임금근로자 배율이 1.0을 초과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7개국에서는 1.5를 넘는 경우도 보였다. 경제성장으로 사업체 수와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근로자의 기회가 빠르게 확대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의 임금근로자 배율은 23개국 중 네 번째로 높은 1.68로서 2018년의 임금근로자 수가 1993년 대비 68%나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자영업자 배율에서는 사뭇 다른 양상이 관찰된다. 자영업자 배율이 1을 넘은 국가는 11개국이고 반대의 경우는 12개국으로, 국가에 따라 자영업자 수 자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로 나뉜다. 아울러 모든 국가에 대하여 자영업자 배율이 임금근로자 배율보다 작게 나타나 자영업자 비중이 (자영업자 보다는) 임금근로자의 수적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OECD 국가들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 변화

현재까지의 OECD 국제비교 분석은 각 나라의 산업 전반에 걸친 평균적인 경향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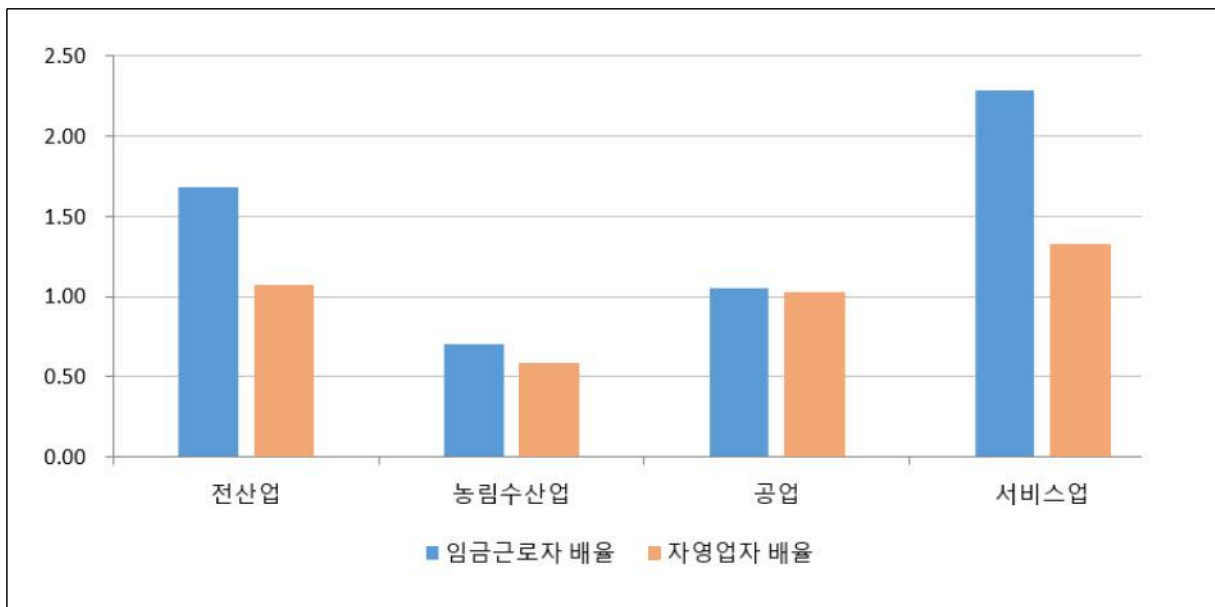
17) 한 국가에서 2010년대 후반의 임금근로자 수가 1990년대 초반보다 많아졌다면 임금근로자 배율이 1보다 크고, 반대의 경우 1보다 작게 나타난다.

을 둔 것이다. 이제 관점을 달리하여 산업섹터별 양상을 살펴보자. [그림 2-7]과 [그림 2-8]은 앞서 정의한 임금근로자 배율과 자영업자 배율을 농림수산업, 공업, 서비스업의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

우선 한국을 분석한 [그림 2-7]을 보면, 농림수산업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절대 규모가 감소하였고(임금근로자 배율: 0.71, 자영업자 배율: 0.58)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와 취업자의 전반적인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을 포함하는) 공업에서는 두 그룹의 취업자 모두 1.0에 가까운 배율을 보이며 비중과 절대규모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이에 반해(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교육업, 의료복지업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업에서는 앞서 살핀 두 섹터에 비하여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관찰된다. 임금근로자 배율과 자영업자 배율 모두 1.0을 훌쩍 넘어섰고(임금근로자 배율: 2.28, 자영업자 배율: 1.32) 특히 임금근로자의 배율이 자영업자 배율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다. 자영업자 비중은 감소하지만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및 전체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7] 임금근로자 배율과 자영업자 배율: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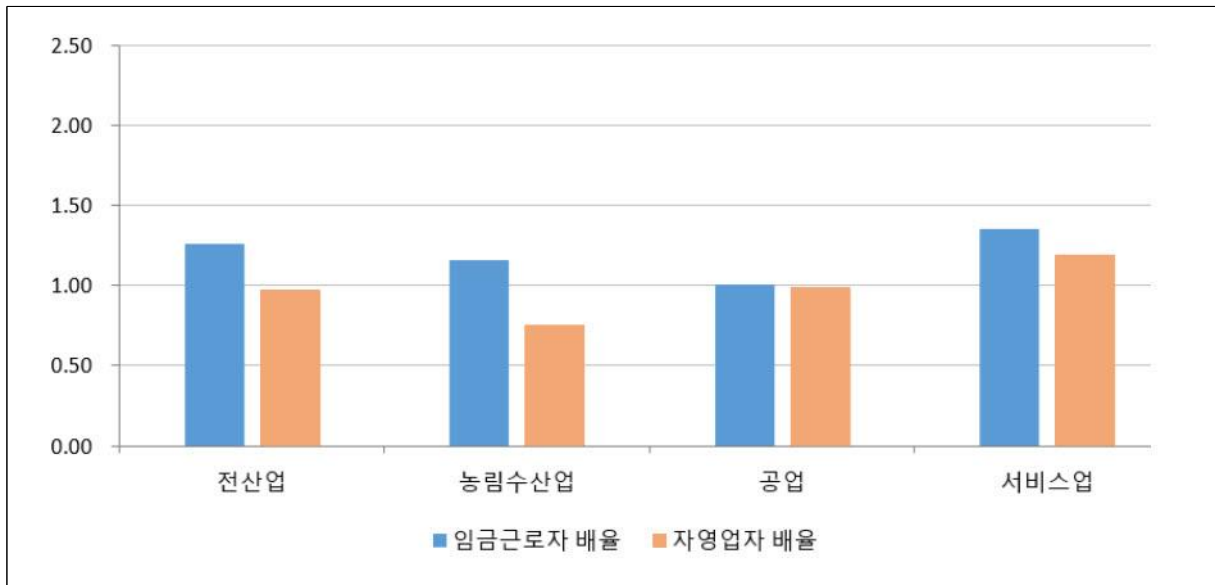


주: 임금근로자 배율=임금근로자수(2010년대 후반)/임금근로자수(1990년대 초반)

자영업자 배율=자영업자수(2010년대 후반)/자영업자수(1990년대 초반)

자료: 이진국(2020)에 의함.

[그림 2-8] 임금근로자 배율과 자영업자 배율: OECD 평균(한국 제외)



주: 임금근로자 배율=임금근로자수(2010년대 후반)/임금근로자수(1990년대 초반)

자영업자 배율=자영업자수(2010년대 후반)/자영업자수(1990년대 초반)

자료: 이진국(2020)에 의함.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섹터에서 임금근로자 배율이 자영업자 배율을 상회하여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해 온 전반적 경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의 현격한 배율 변화가 전 산업의 평균적인 취업자 구성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을 제외한 OECD 22개국의 상황을 보고한 [그림 2-8]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다만, 서비스업의 변화가 전 산업의 평균적인 경향을 유도하는 정도가 한국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국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자영업자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자영업자의 규모 감소보다는 임금근로자가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구성 변화가 전 산업의 평균적인 변화 추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OECD 국가들의 보편적 경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같은 보편적 경향을 따르면서도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이 전 산업의 평균적인 경향을 유도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는 특수성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취업자가 서비스업에 분포하는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으나 자영업자의 서비스업 분포 비중은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서비스업에 상대적으로 더 밀집해 있는 상황은 서비스업의 취업자 구성 변화가 전 산업의 변화 양상을 주도하고 있는 점, 그리고 경기불황 시 영세 자영업자들이 특히 취약한 경향을 보여 온 결과들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자영업자 적정성 및 과잉성 분석 결과

이진국(2020)에 따르면, 국가비교 패널회귀분석 모형으로부터 기대되는 국내 자영업자의 적정 비중은 14.5%, 적정 규모는 388.8만명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과잉규모는 175.0만명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과잉성은 2018년 현재 자영업자 수의 31%가 (모형에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초과 공급된 강도에 해당한다. 특히 과잉 공급은 도소매업(60.9만명), 음식숙박업(35.5만명), 교육업(24.4만명)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음식숙박업과 교육업에서는 과잉 정도가 최근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큰 이질성이 발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4〉 국내 자영업자 비중과 규모의 적정성 및 과잉성 분석 결과: 전 산업

(단위: 만명)

모형	설명력 (R2)	취업자	비중(2018년)		규모(2018년)			
			현재	적정	현재	적정	과잉	
랜덤 효과	모형 1	0.199	2,682.2	21.0%	13.8%	563.8	371.5	192.3
	모형 2	0.232	2,682.2	21.0%	14.3%	563.8	384.4	179.4
	모형 3	0.358	2,682.2	21.0%	14.7%	563.8	393.2	170.6
고정 효과	모형 4	0.082	2,682.2	21.0%	12.9%	563.8	346.5	217.3
	모형 5	0.116	2,682.2	21.0%	12.8%	563.8	344.0	219.8
	모형 6	0.152	2,682.2	21.0%	12.8%	563.8	344.2	219.5

주: 회귀모형 각각에 대하여 적정성 및 과잉성 분석을 진행함.
 자료: 이진국(2020)에 의함.

〈표 2-5〉 국내 자영업자 비중과 규모의 적정성 및 과잉성 분석 결과: 산업별

(단위: 만명)

구분	취업자	비중(2018년)		규모(2018년)			배율 (현재 규모 / 적정 규모)
		현재	적정	현재	적정	과잉	
전 산업	2,682.2	21.0%	14.5%	563.8	388.8	175.0	1.45
도소매업	372.3	31.4%	15.0%	116.8	55.9	60.9	2.09
음식숙박업	224.2	29.3%	13.5%	65.7	30.2	35.5	2.17
교육업	184.7	18.2%	4.9%	33.5	9.1	24.4	3.68
농림수산업	134.0	63.5%	46.8%	85.1	63.1	22.0	1.35
기타 3차산업	633.1	23.8%	20.4%	150.7	128.9	21.7	1.17
제조업	451.0	9.4%	7.3%	42.2	33.1	9.1	1.28
부동산업	52.8	30.0%	22.4%	15.8	11.8	4.0	1.34

〈표 2-5〉의 계속

(단위: 만명)

구분	취업자	비중(2018년)		규모(2018년)			배율 (현재 규모 /적정규모)
		현재	적정	현재	적정	과잉	
기타 2차산업	19.7	4.1%	2.9%	0.8	0.6	0.2	1.40
광업	1.9	0.2%	1.2%	0.00	0.02	-0.02	-
공공행정국방업	111.0	0.0%	0.3%	0.0	0.2	-0.2	-
가사업	4.8	15.5%	26.5%	0.7	1.3	-0.5	0.59
금융보험업	84.0	4.6%	8.0%	3.9	6.7	-2.9	0.57
의료복지업	204.6	4.4%	6.8%	9.0	14.2	-5.2	0.63
건설업	203.4	19.5%	23.3%	39.6	47.8	-8.2	0.83

주: 1. 각 산업별로 설명력이 가장 높은 2개 모형의 평균 수치를 보고함.
 자료: 이진국(2020)에 의함.

제3절 KCB자료를 활용한 자영업자 지역별·업종별 진입철수 추이 분석(2017~2019년)¹⁸⁾

1. 자영업자 진입철수추이 분석 개요

3절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현황과 추이에 있어 장기적인 측면, 국제 비교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4절에서는 마이크로 자료에 기반한 최근의 자영업자의 실제 진입 철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자영업자 신용정보(SOHO) 2017~2020년 월별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자의 개업과 폐업을 심층 분석하기로 한다.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월별 자영업자 신용정보 자료는 2019년 기준 연평균 3,435,000개의 자영업자 사업체 정보가 담긴 미시 데이터로, 사업체 수 자체도 충분한 의미를 갖는 수치로 볼 수 있다. 물론 현존하는 모든 자료와 마찬가지로 본 자료에도 자영업자 전부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본 자료에는 현재 금융기관에서 대출 결정을 할 때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전부 포함된 자료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모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코리아 크레딧 뷰로 실제 경제 현장에서의 진입 퇴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실제 활용하는 신용정보가 존재하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사업체수와 개업사업체수를 지역,

18) 본 장에서 사용한 자료와 분석 결과는 장우현(2021), 김문정·장우현(2021)에서 활용한 자료와 분석 내용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적에 맞춰 재구성한 것이다.

업종, 기간별에 따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참고로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분석의 목적에 따라 일상적인 분석의 경우는 2017~2019년 자료를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한다. 다만, 향후 5년간 재정운용에 있어 코로나 19의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분석과 다른 방향의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 2020년의 자료를 기반으로 추가 분석한다.

먼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7년부터 2019년간 모든 지역, 모든 기간, 사실상 모든 업종에서 개업이 폐업보다 유의하게 높으며, 이에 따라 사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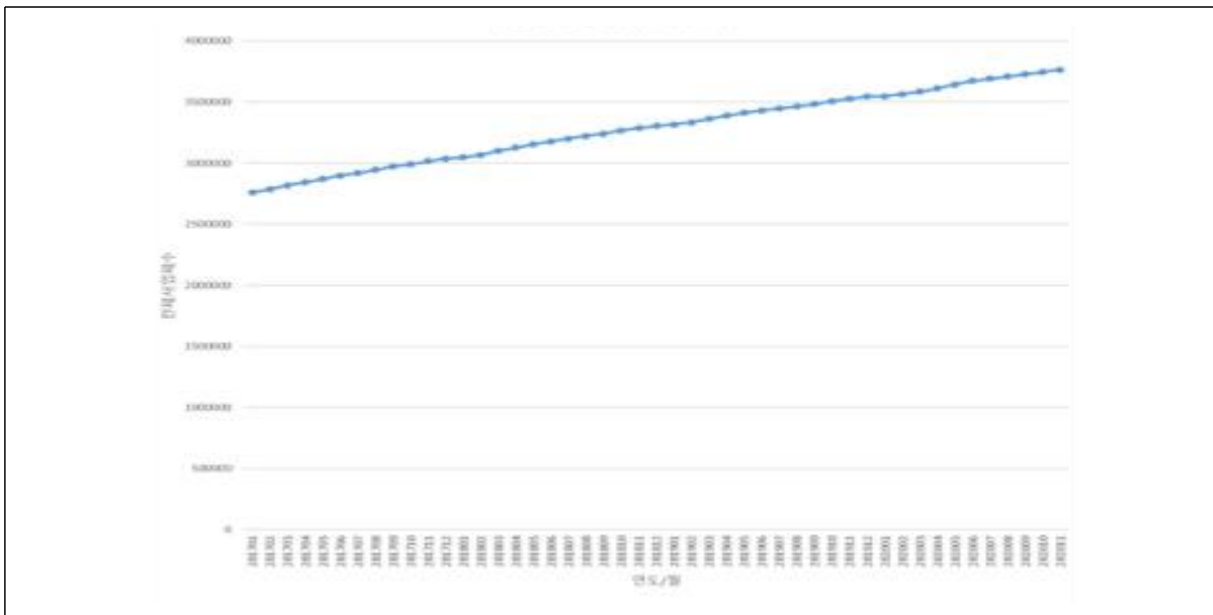
예컨대 2019년 월별 자료로부터 도출한 평균 전체 자영업체 사업체 수는 3,430,500개이며, 해당연도 폐업사업체 수는 287,384개, 개업사업체 수는 511,815개로 전체 사업체 대비 연간 폐업비율은 8.37%, 개업비율은 14.90%이다.

지역별로 살펴본다면, 2017~2019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단위 모두에서 개업은 폐업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분류 기준으로 나눈 업종에서도 일부 이상치 외 절대 다수의 업종에서 개업은 폐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진입이 철수보다 높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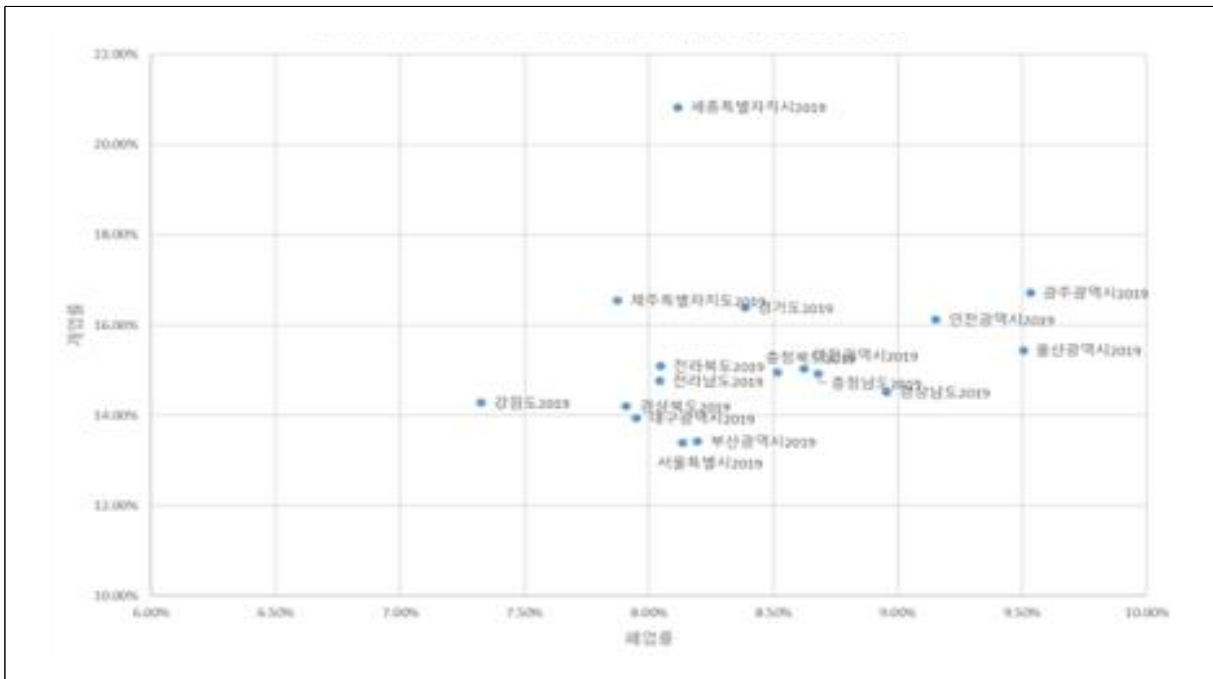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던 2020년의 경우에도 자영업의 진입은 철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자영업 사업체 수도 증가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2-9] 자영업 사업체 수(KCB SOHO, 2017년1월~2020년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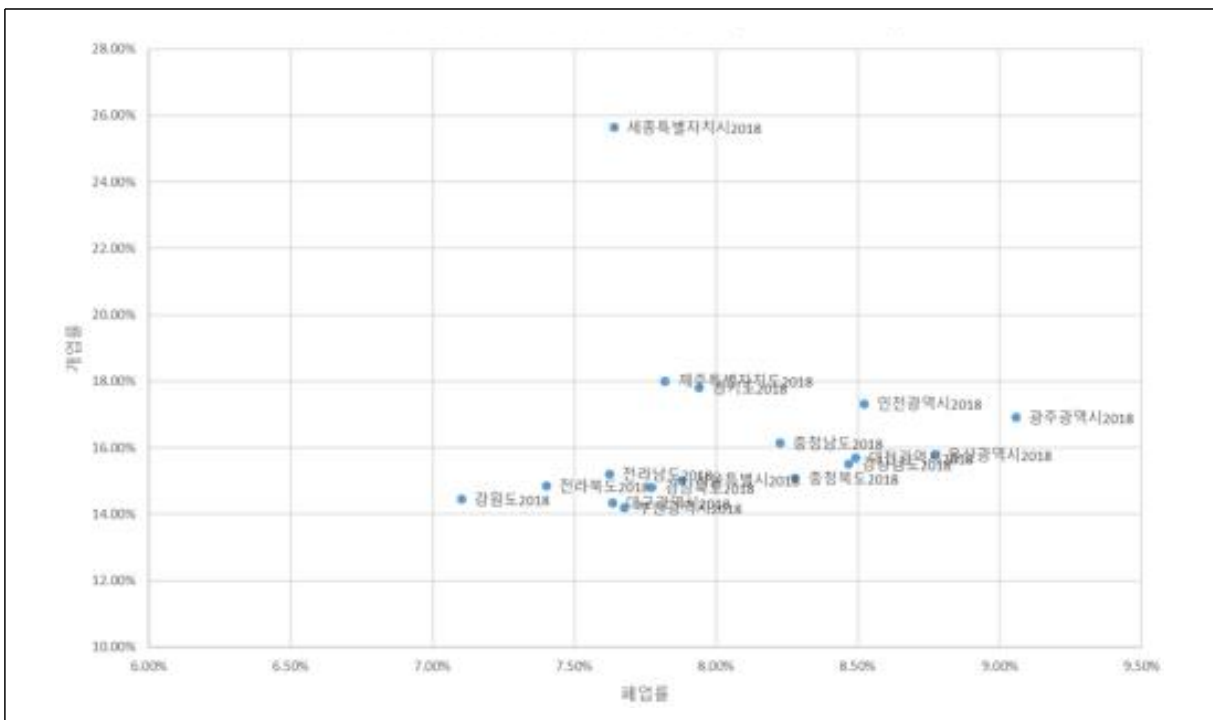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10] 광역자치단체별 자영업자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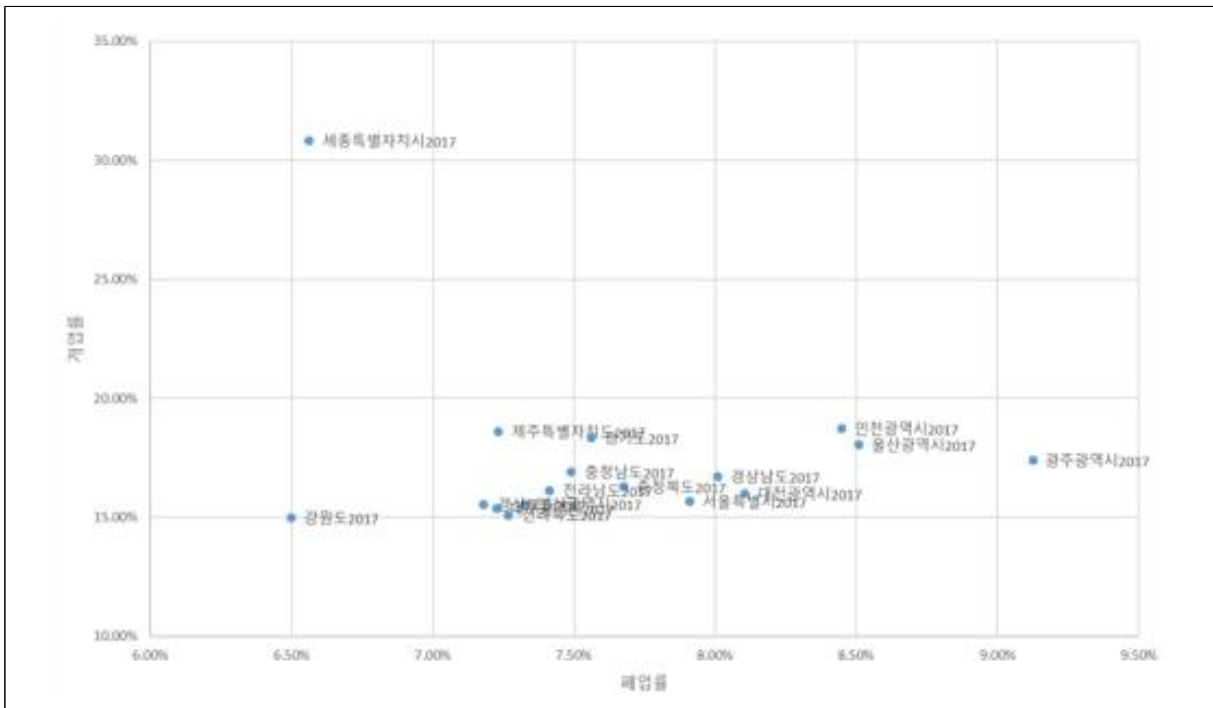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11] 광역자치단체별 자영업자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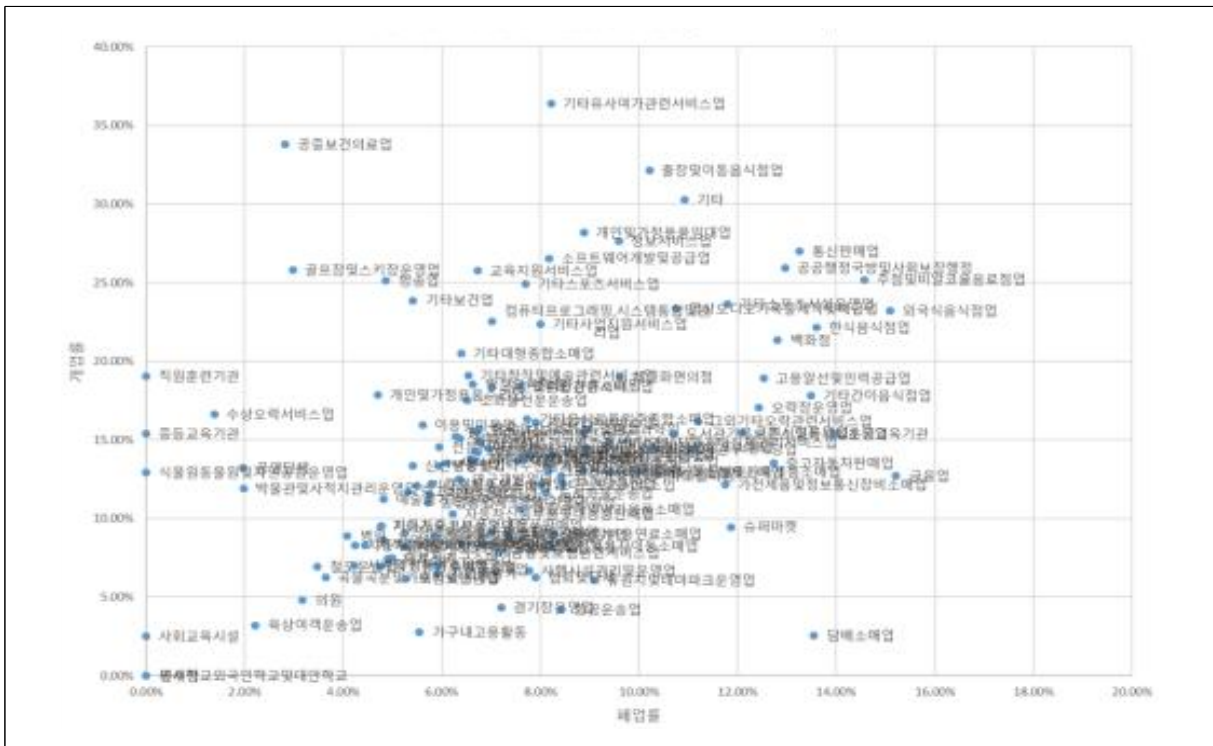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12] 광역자치단체별 자영업자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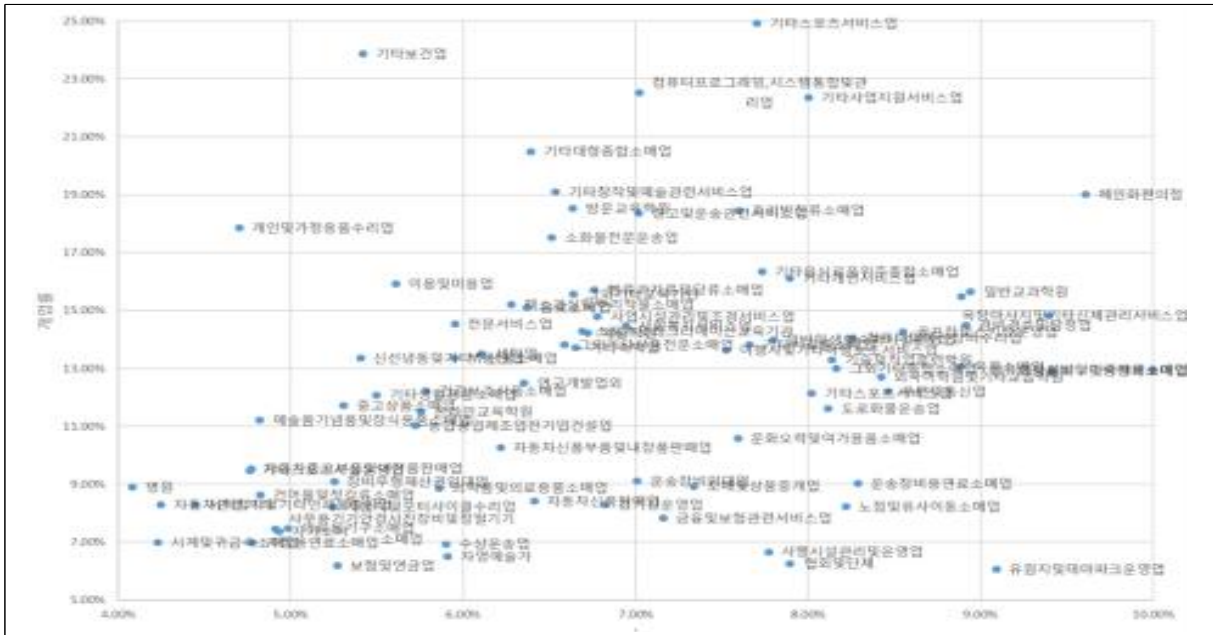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13] 업종별 자영업자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9년)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14] 업종별 자영업자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9년, 부분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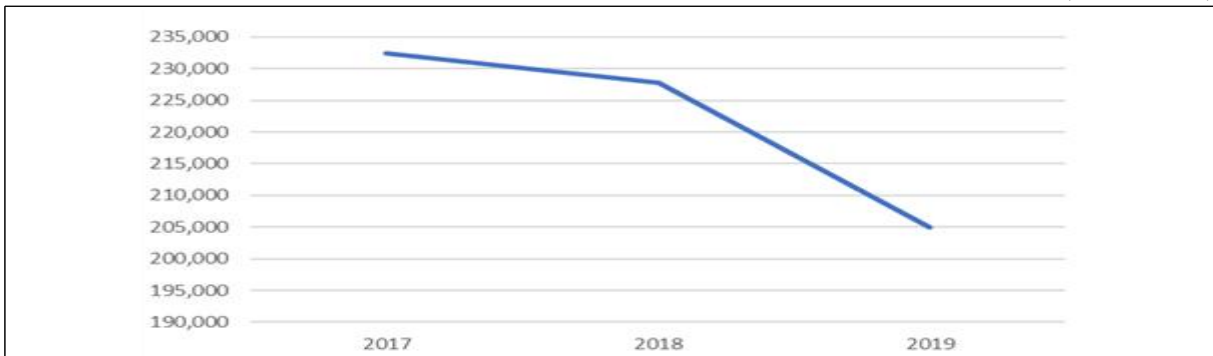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진입이 많고 철수가 적어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나는 반면, KCB의 추정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자영업자 매출액 증가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특히 2019년 추정연매출액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체당 추정 연매출액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9)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체당 평균 추정 매출액은 2017년 2억3천3백만원에서 2018년 2억 2천8백만원, 2019년 2억 5백만원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자영업자의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15] 자영업자 사업체당 추정연매출액

(단위: 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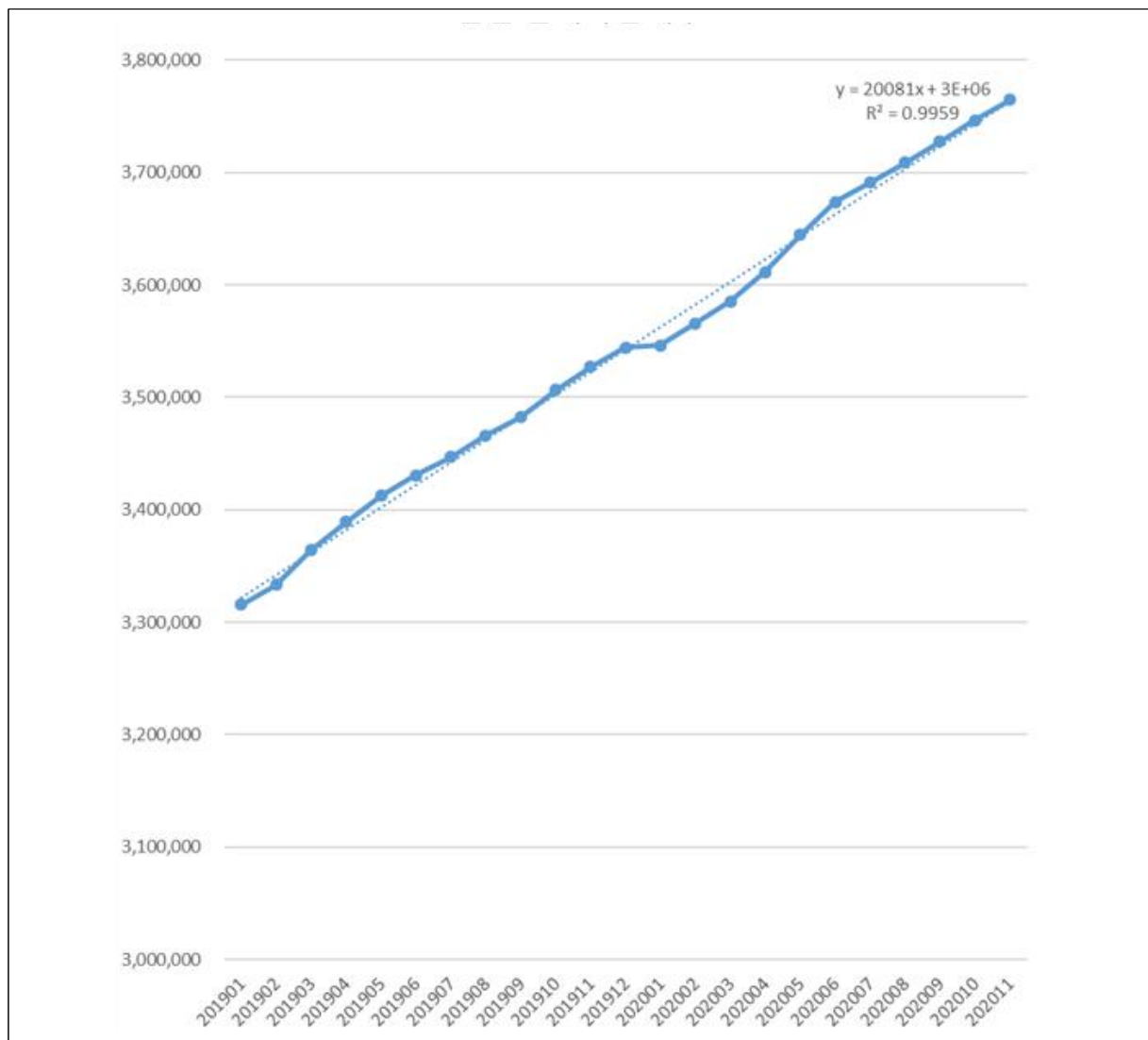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19) 다만, 실제 매출이 아닌 KCB의 추정매출액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추정 시 연간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연간 자료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월간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진입이 철수보다 유의하게 많지만, 2017년부터 2019년 연간으로 보면 진입률은 낮아지고 폐업률은 높아지는 추이를 보여, 자영업자 증가 추세는 완화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전체사업체 수 대비 진입 비율은 2017년 16.75%에서 2018년 15.96%, 2019년 14.9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전체사업체 수 대비 철수 비율은 2017년 7.69%에서 2018년 7.98%, 2019년 8.37%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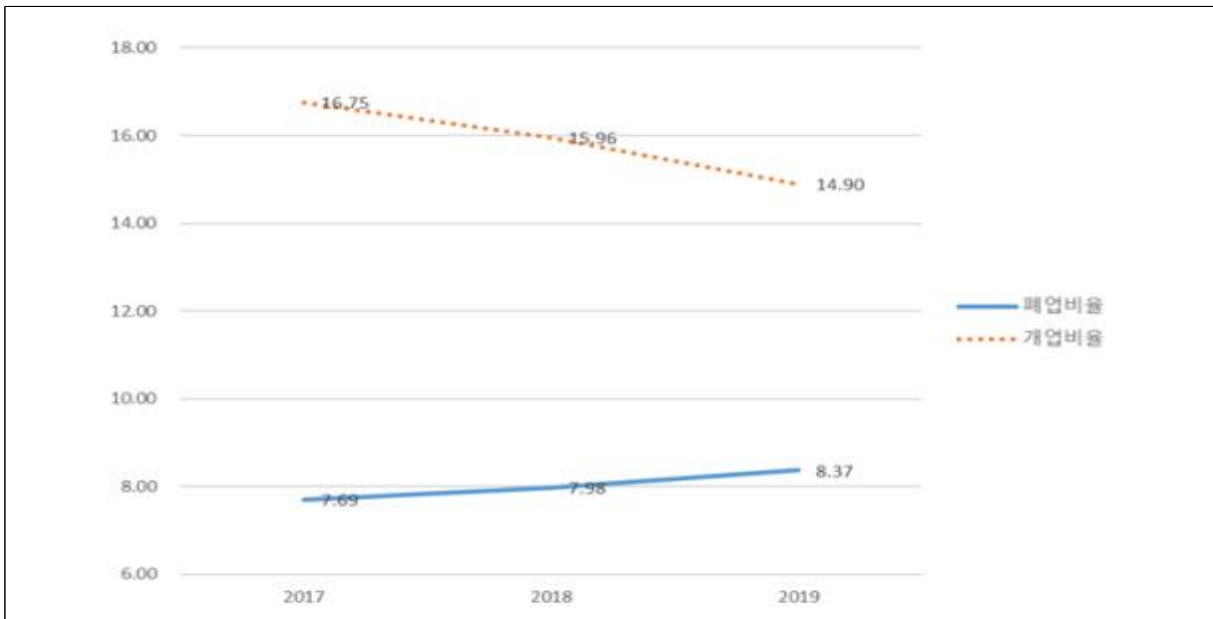
다만, 그림에서는 표시되고 있지 않지만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에는 개업비율은 12.88%로 추세적 하락하였으나, 오히려 폐업비율은 6.70%로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뒤에서 업종별 지역별로 다시 살펴보겠지만, 많은 경우 코로나 19의 상황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폐업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림 2-16] 월별 전체사업체 수 추이 확대(2019~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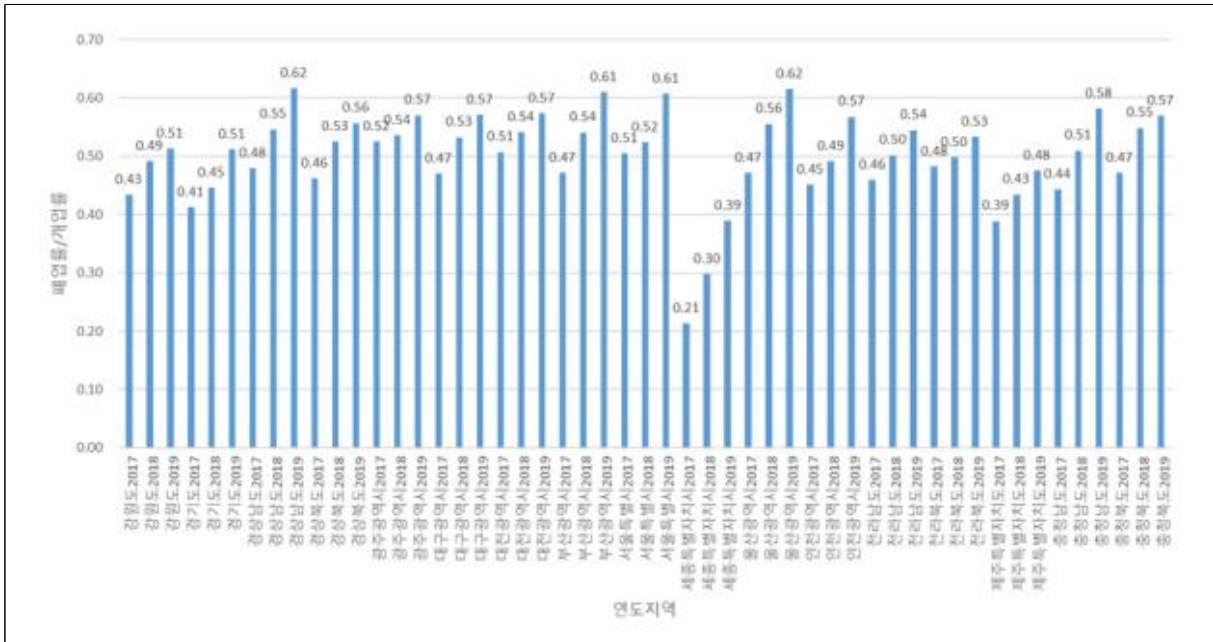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17] 자영업 사업체 연도별 폐업률과 개업률(KCB SOHO, 2017~2019년)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18] 광역자치단체별 폐업률/개업률(KCB SOHO, 2017~2019년)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2017~2019년간 세종특별자치시처럼 개업이 압도적이었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업률은 일반적으로 개업률의 50% 이상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1년에 8.37% 수준(287,384개)의 사업체가 폐업하여 철수하고 있으며, 이는 창업사업체 대비 56%에 해당하는 비중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입보다 철수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의 비중 기준으로도 철수가 진입의 50%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책도 이에 맞춰 생애주기별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하겠다.

자영업자의 영세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철수 비중을 높여나가고 진입은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입보다 철수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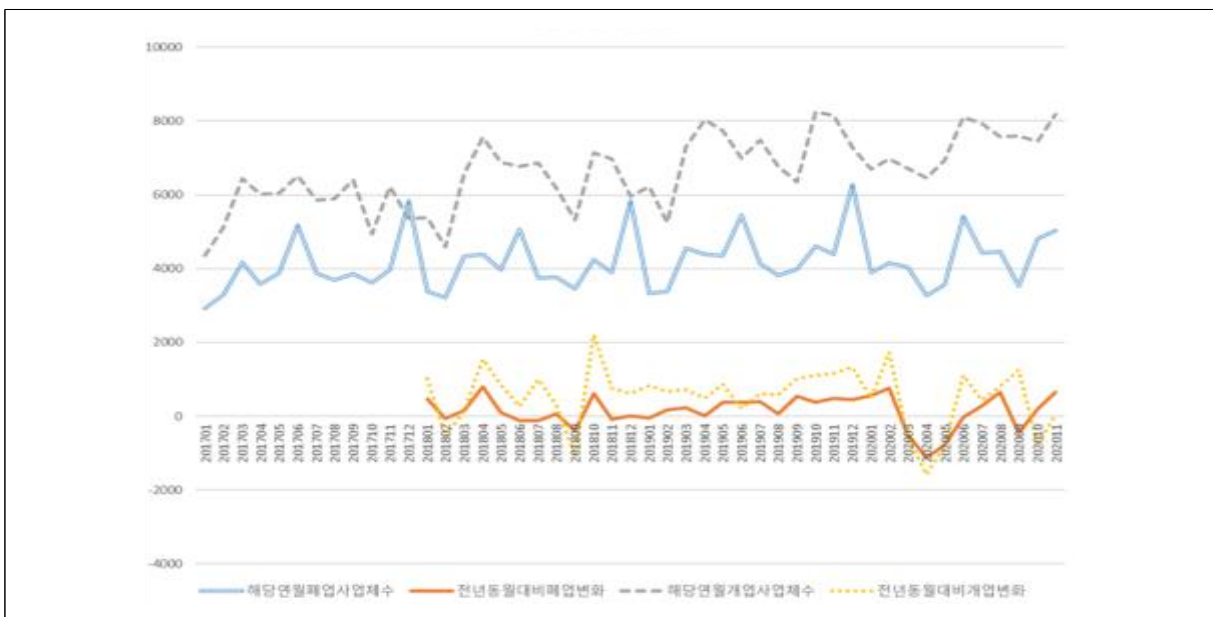
이를 전제하되, 이와 같은 방향성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현재 상황만으로도, 경제현상 기준으로 폐업은 창업의 50% 수준에 달하는 정책 수요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업종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분석

본 소절에서는 업종별 폐업 및 개업 사업체수와 전년동월대비 폐업과 개업 변화를 확인하기로 한다. 부록20)에는 전체 결과가 도출되어 있으나, 본 소절에서는 주목할만한 업종들 위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장우현(2021) 기준으로 코로나 19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업종들의 개업과 폐업 정보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식음식점업, 외국식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 여행업, 오락장 운영업, 육탕마사지 및 기타신체관리서비스업 등은 대표적인 타격업종으로 확인되는 업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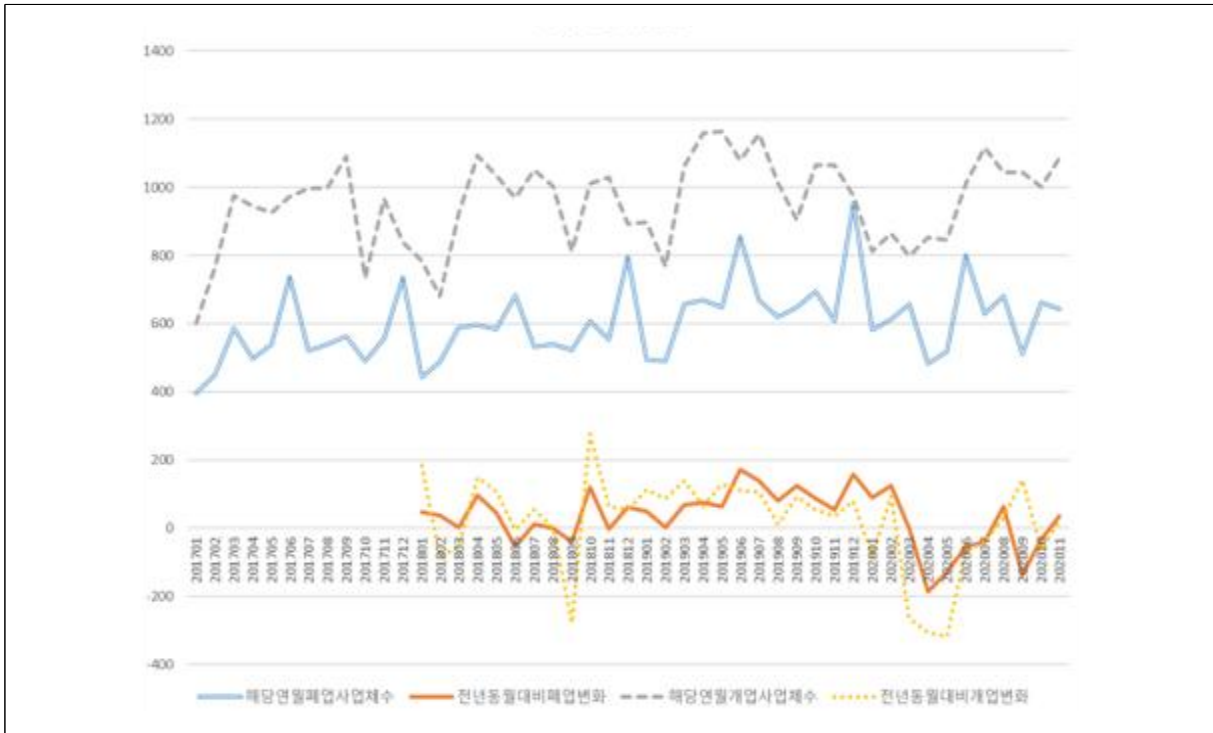
[그림 2-19] 한식음식점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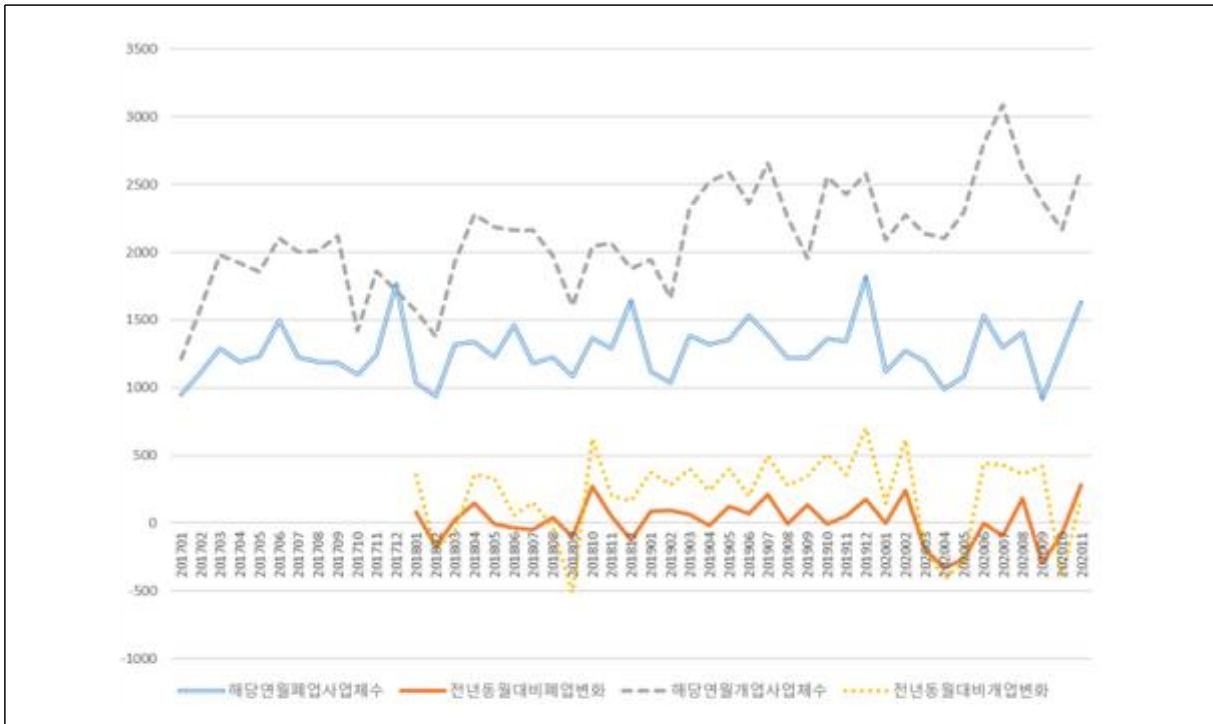
20) 전 업종 결과가 도출되어 있으며, 최종 인쇄본에는 주요 업종 중심으로 추가 예정임.

[그림 2-20] 외국식음식점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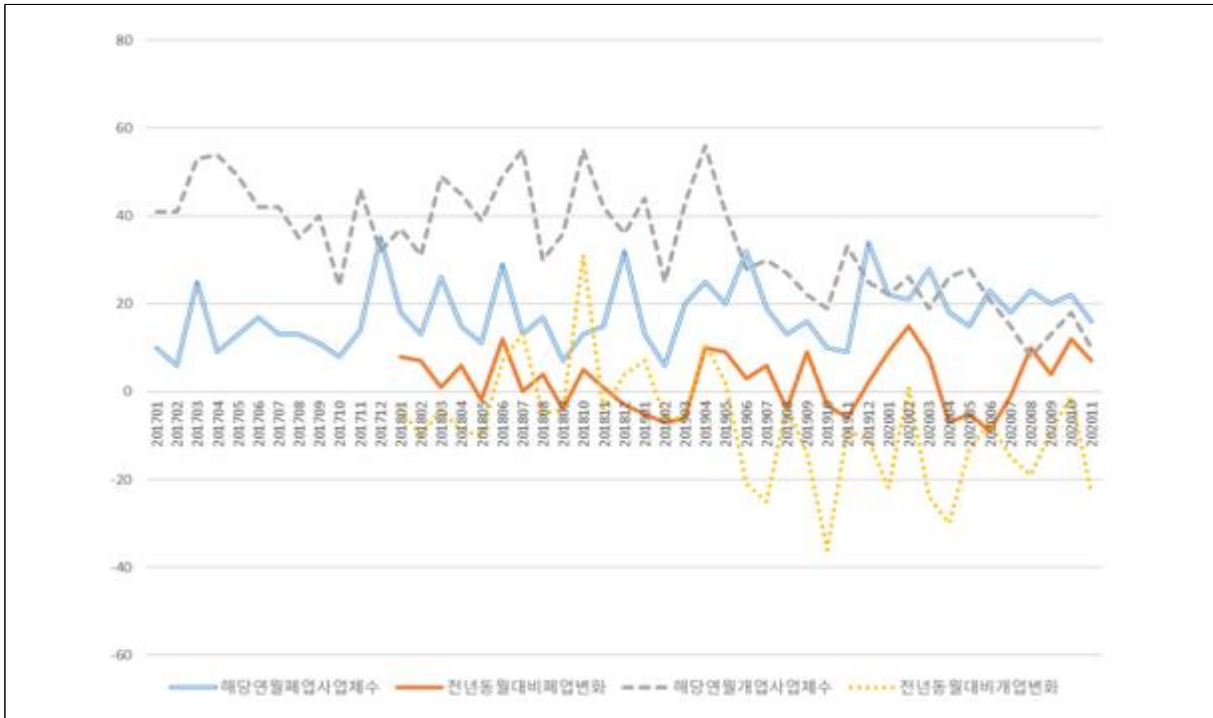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21]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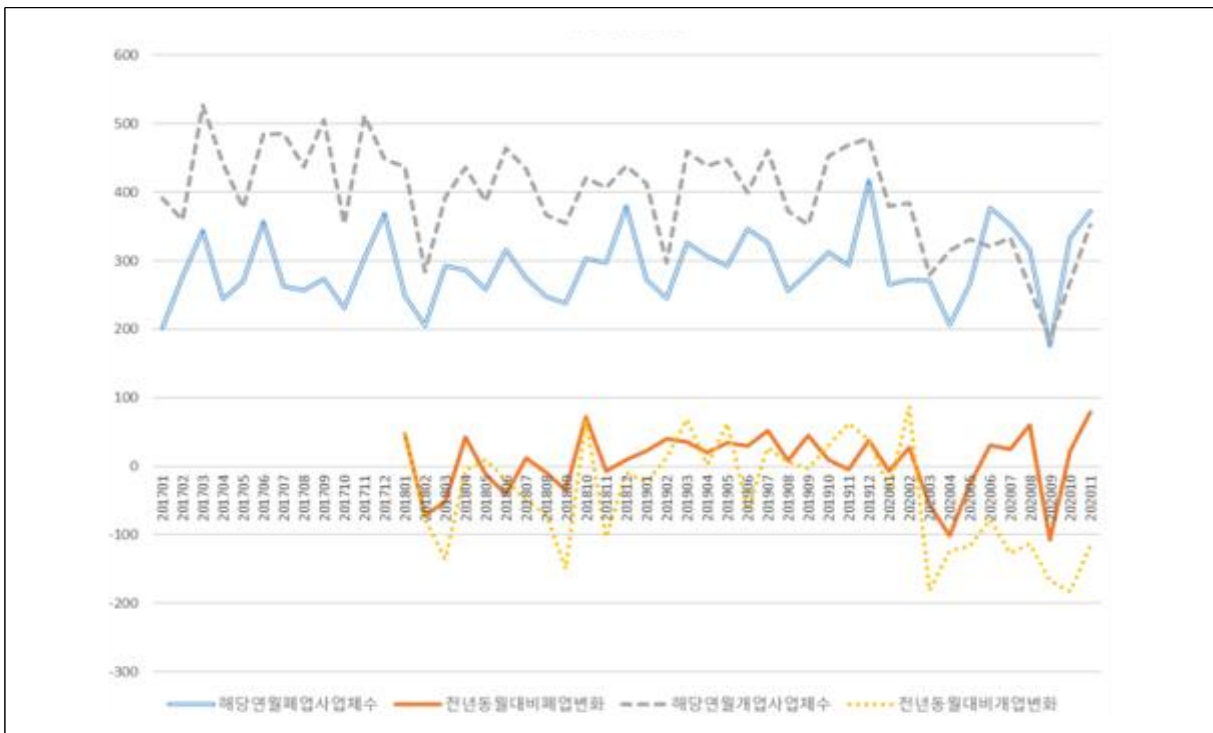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22]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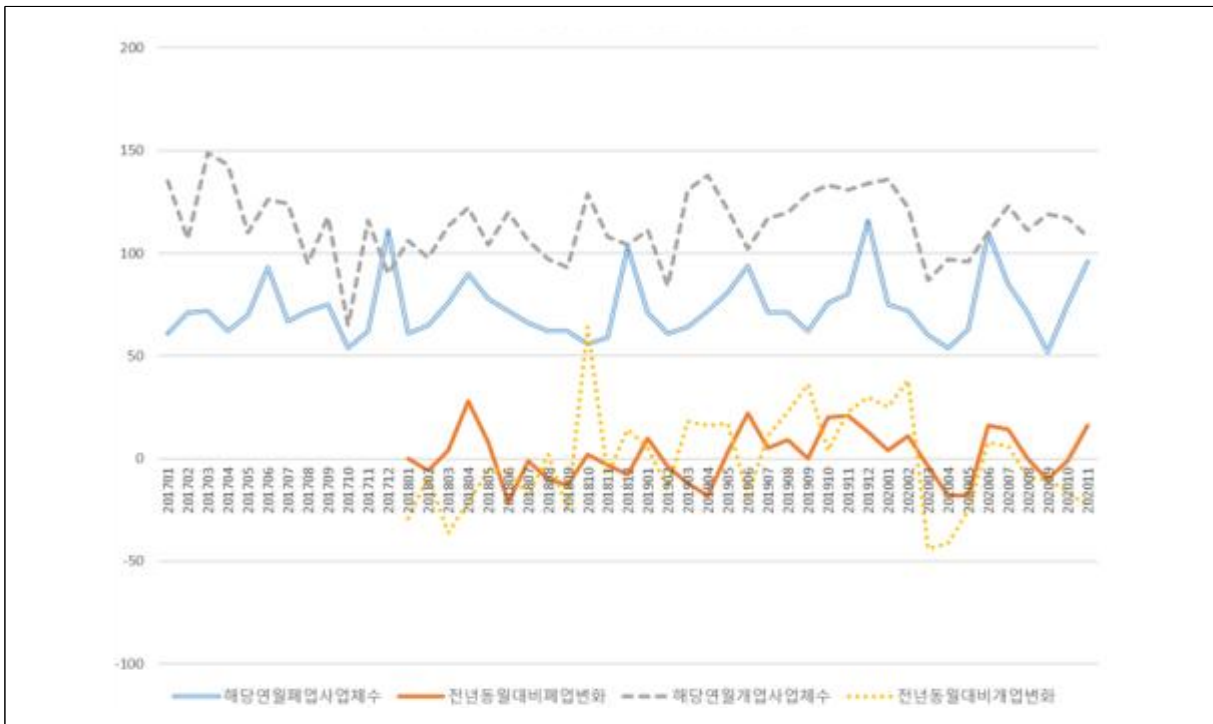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23] 오락장운영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24] 옥탕마사지 및 기타신체관리서비스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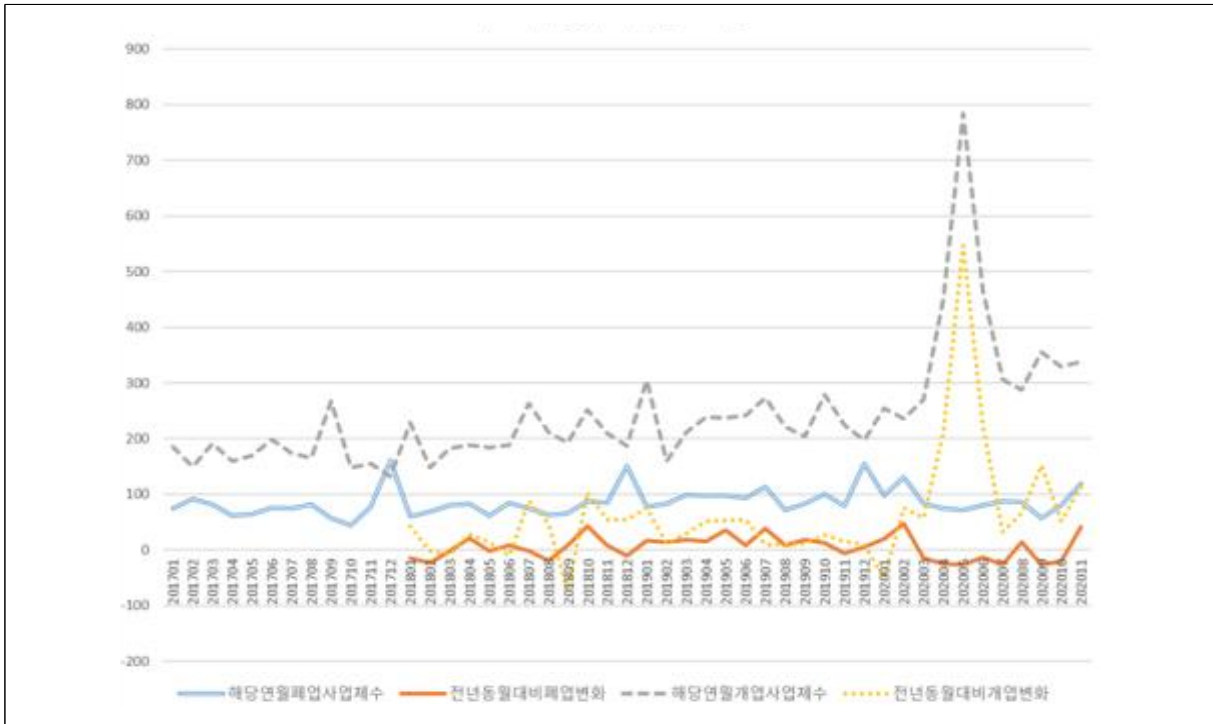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분석결과를 보면 해당업종의 경우에도 여행업이나 오락장 운영업 등에서 코로나 19가 영향을 크게 미치던 시기에 폐업과 개업이 비슷해지는 수준인 점을 제외하고는 개업이 폐업보다 여전히 높으며, 코로나 19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는 2020년 4월과 5월의 폐업은 오히려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기 개업과 폐업은 같은 경향성을 보이는데, 오히려 위기가 닦쳤을 때 평시와 비교해볼 때 폐업 결정이나 개업 결정을 꺼리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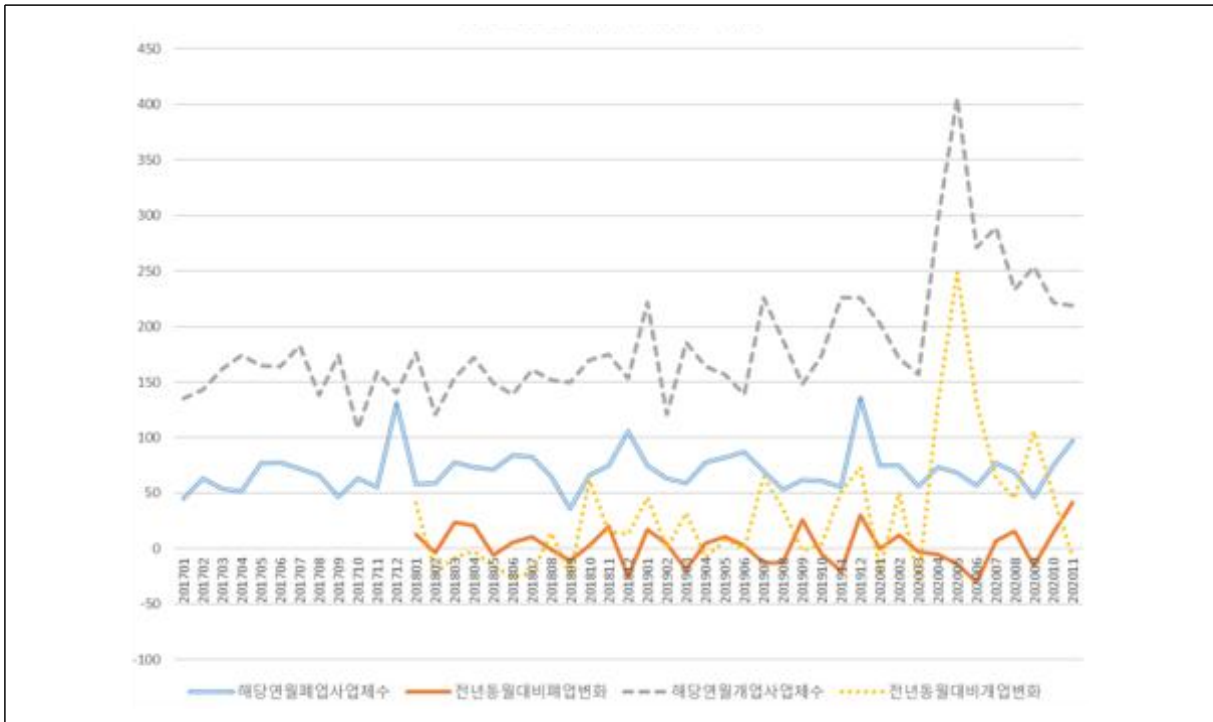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피해가 크지 않았던 업종과 수혜업종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채소과실 및 뿌리작물소매업, 신선냉동 기타수산물소매업, 육류소매업,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등은 기존의 다른 업종에서 소화되던 대면 수요가 줄면서 오히려 많은 창업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육류소매업은 장우현(2021) 기준 매출면에서도 가장 큰 수혜업종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업도 늘고 매출도 늘어났다는 점에서 코로나 19시기 분명한 수혜업종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5] 채소과실 및 부리작물소매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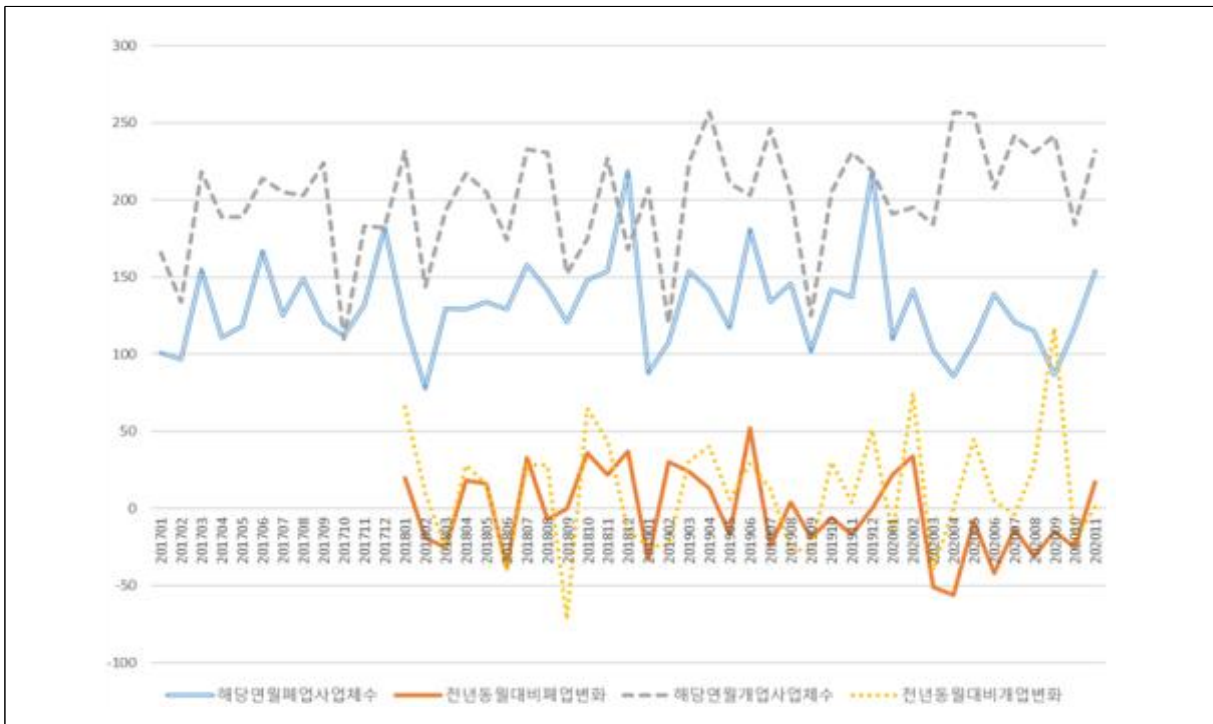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26] 신선냉동 및 기타수산물 소매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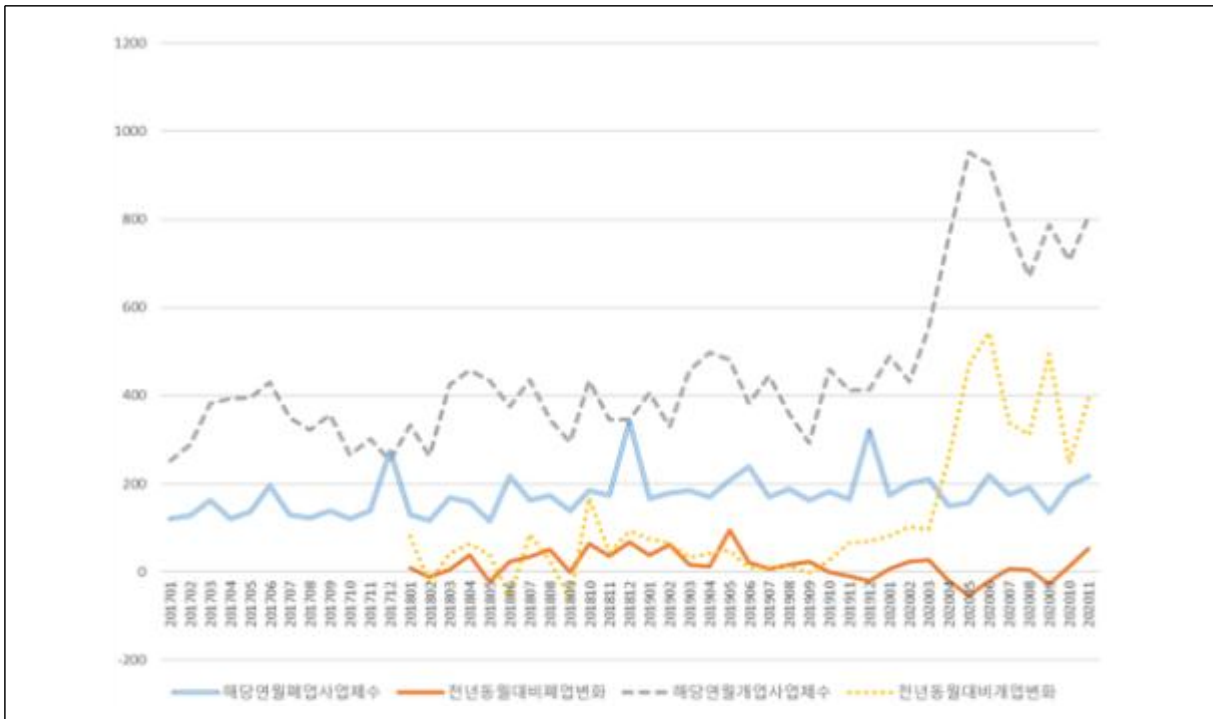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27] 육류소매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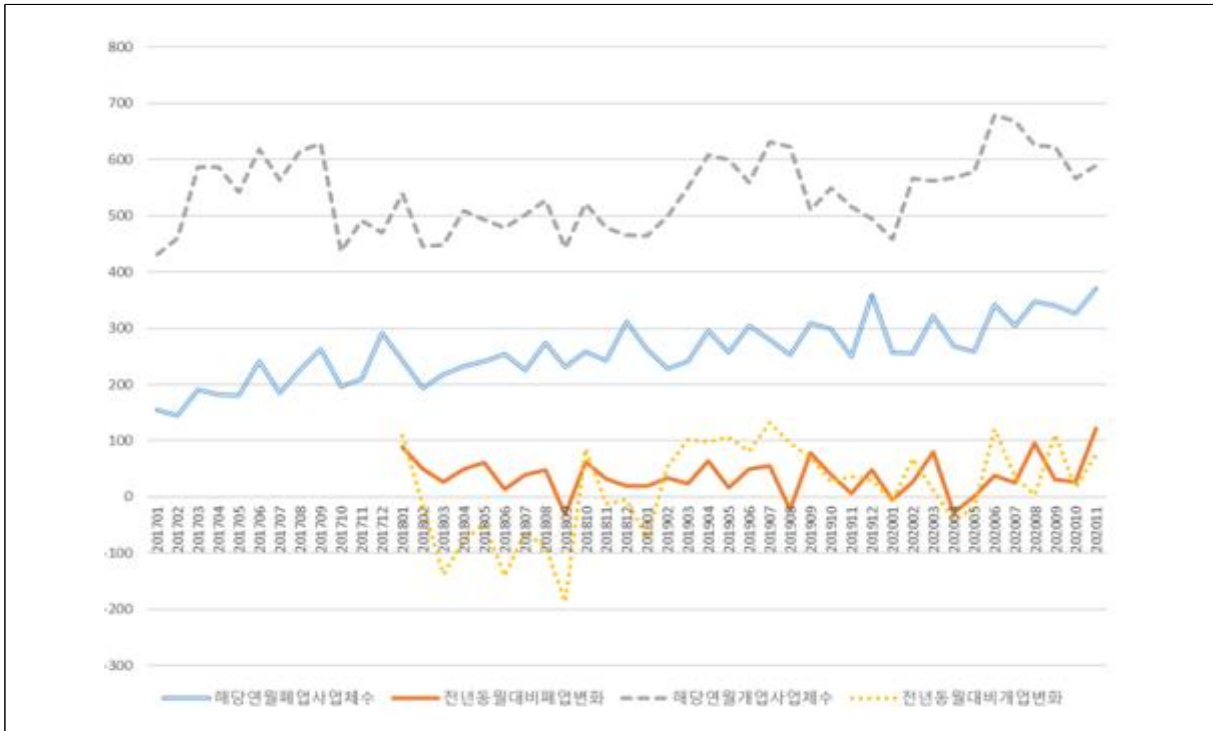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28] 기타음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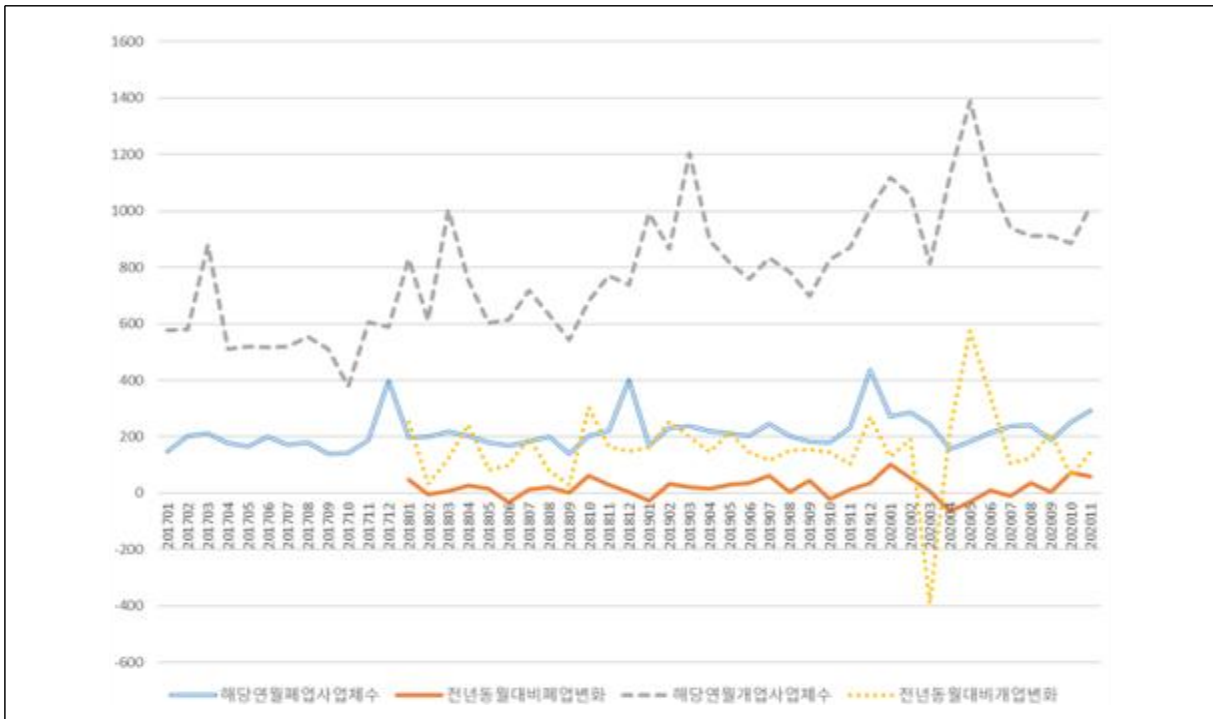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29] 체인화편의점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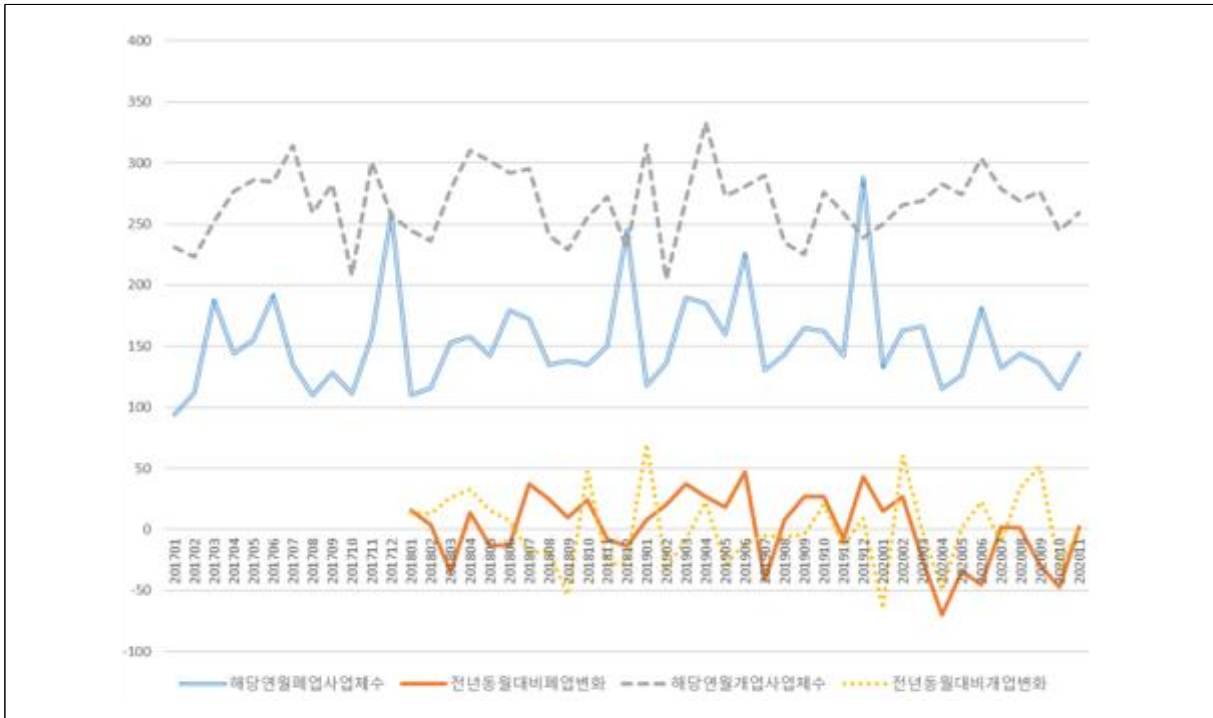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30] 교육지원서비스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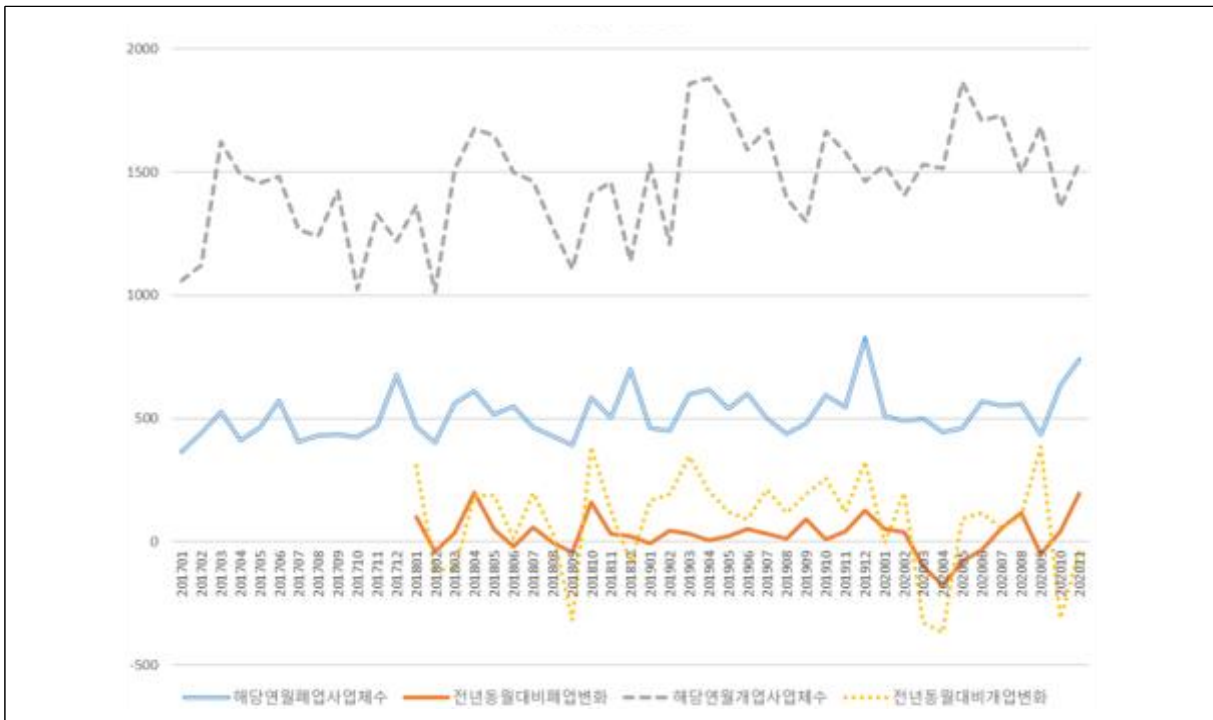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31]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32] 이용 및 미용업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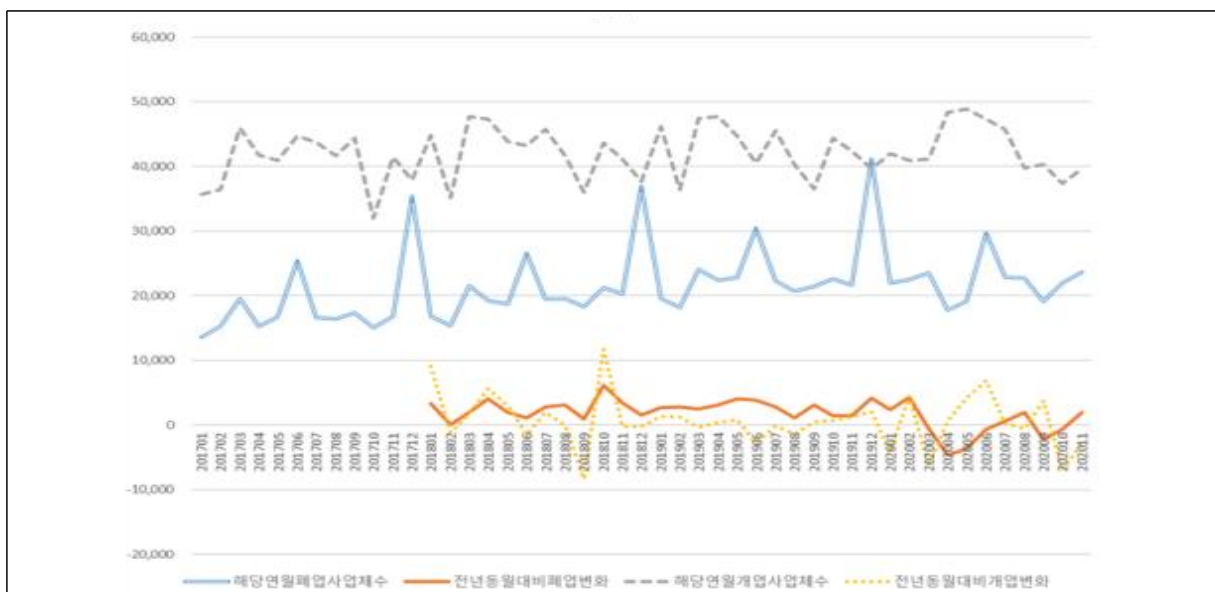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3. 지역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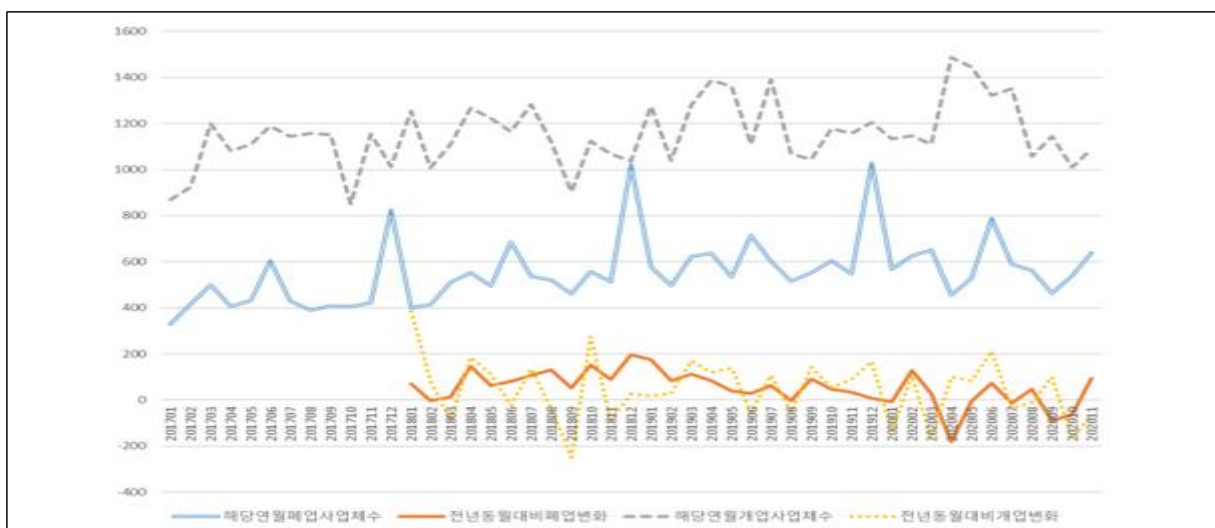
본 소절에서는 지역별 폐업 및 개업 사업체수와 전년동월대비 폐업과 개업 변화를 확인하기로 한다. 전국 전체의 경우 4월과 5월, 6월에서 전년동월대비 폐업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는 반면, 5월과 6월에는 전년동월대비 오히려 활발한 창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편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개업이 폐업보다 유의하게 많다는 사실은 차이 없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3] 전국 개업과 폐업 추이 및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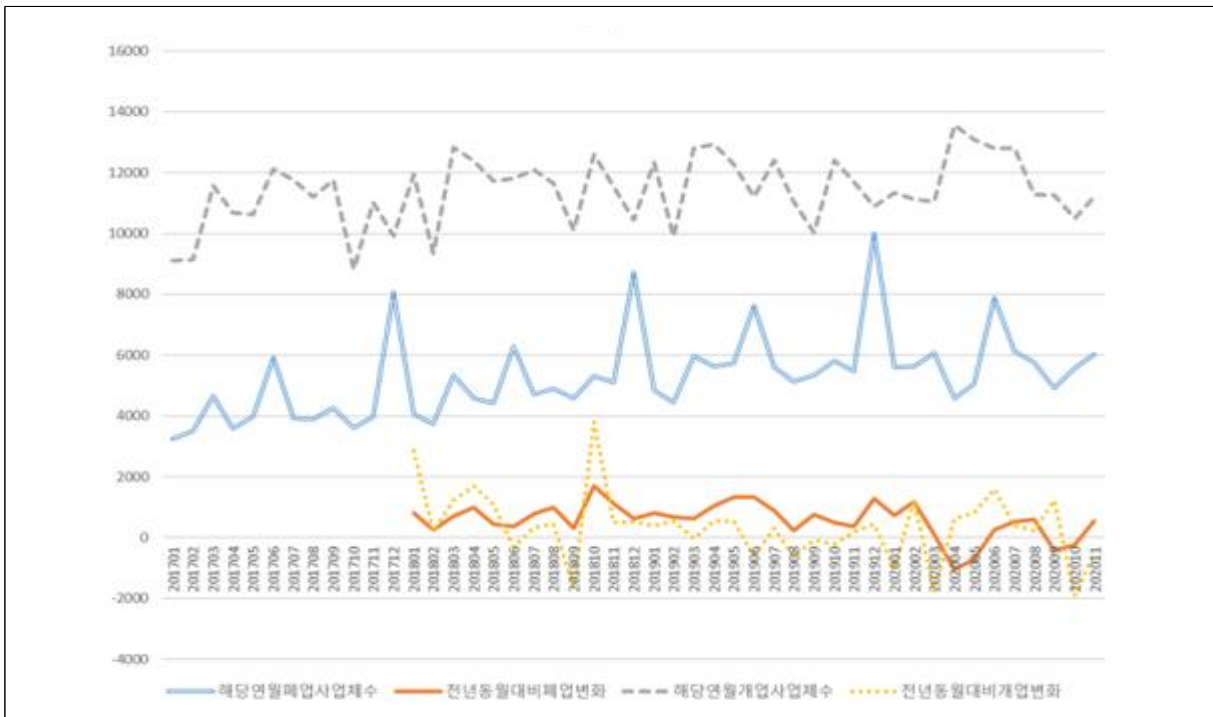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34] 강원도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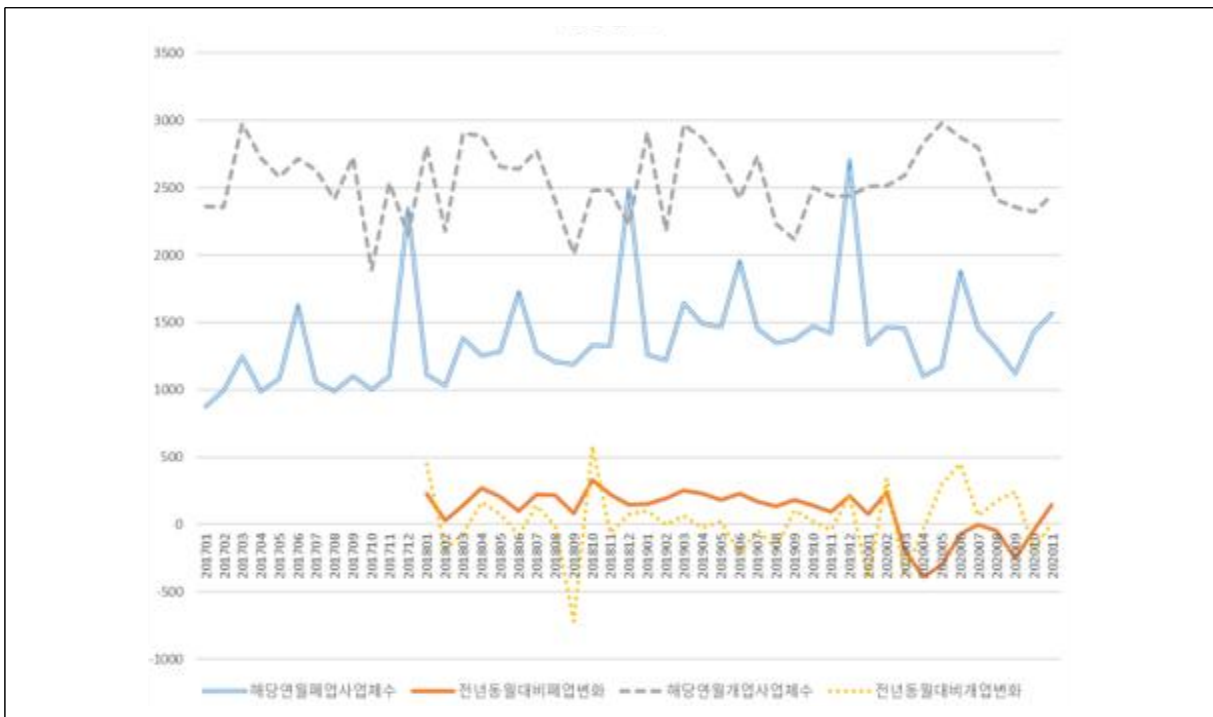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35] 경기도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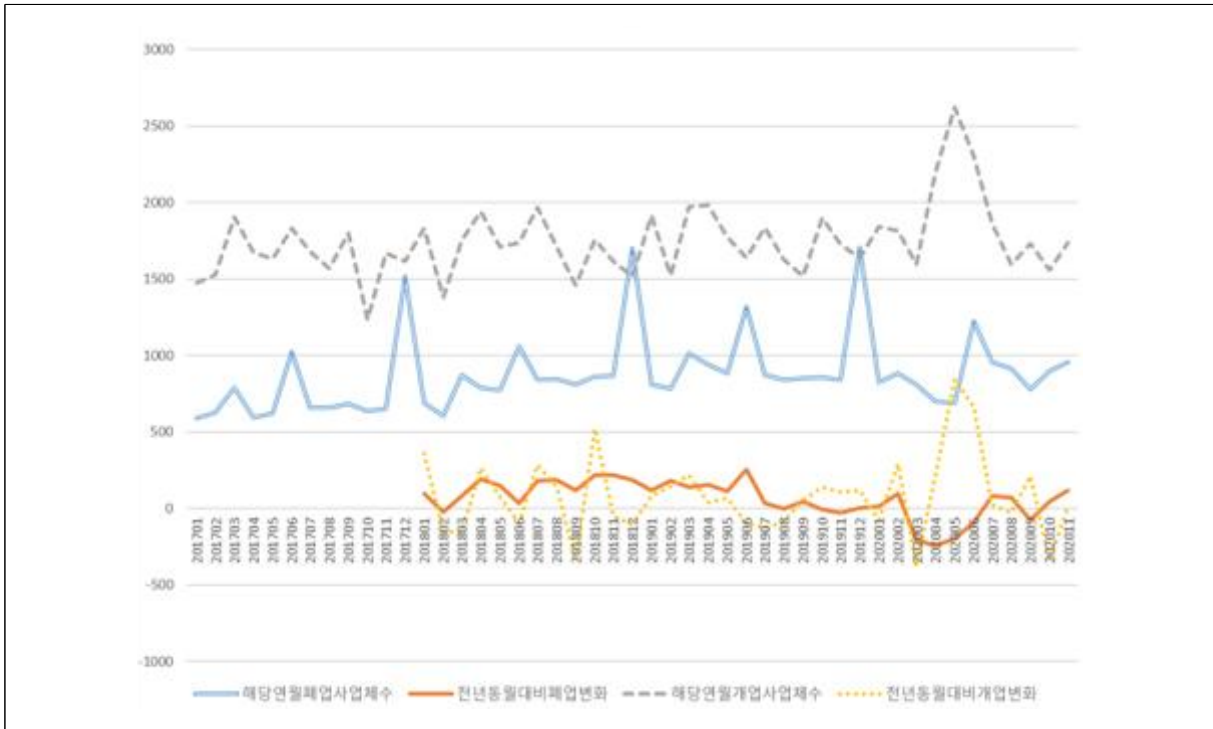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36] 경상남도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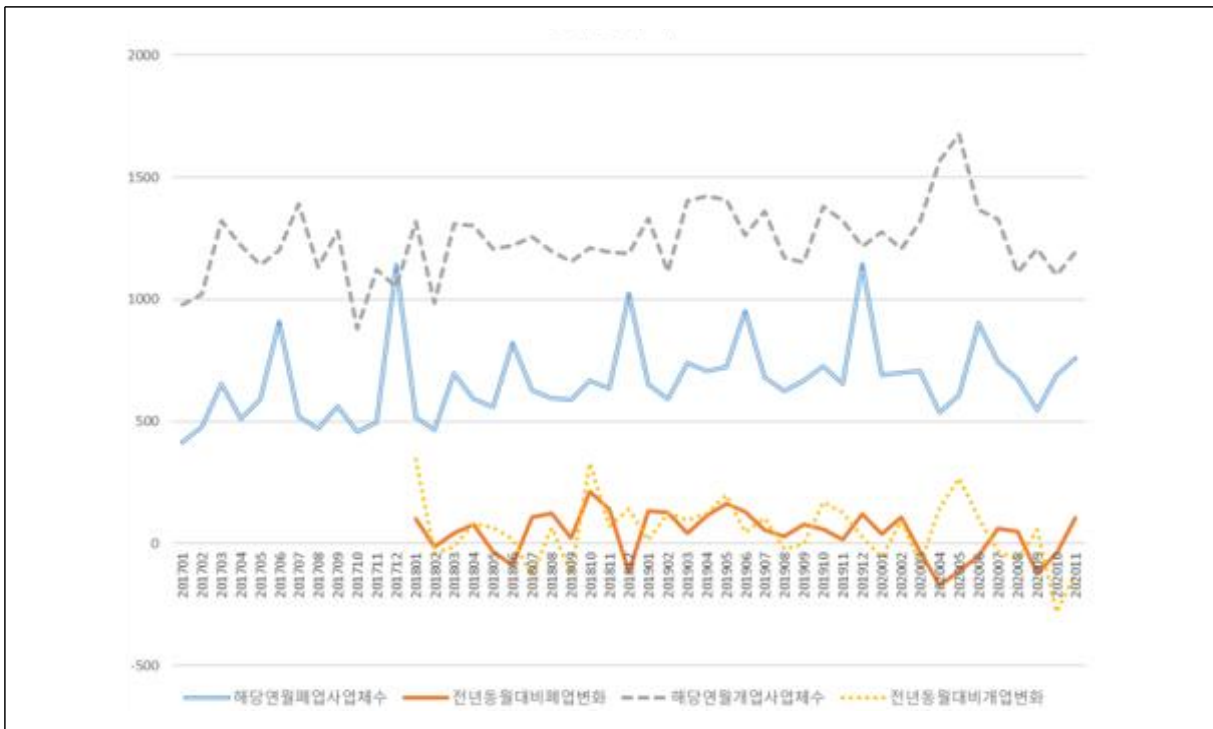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37] 경상북도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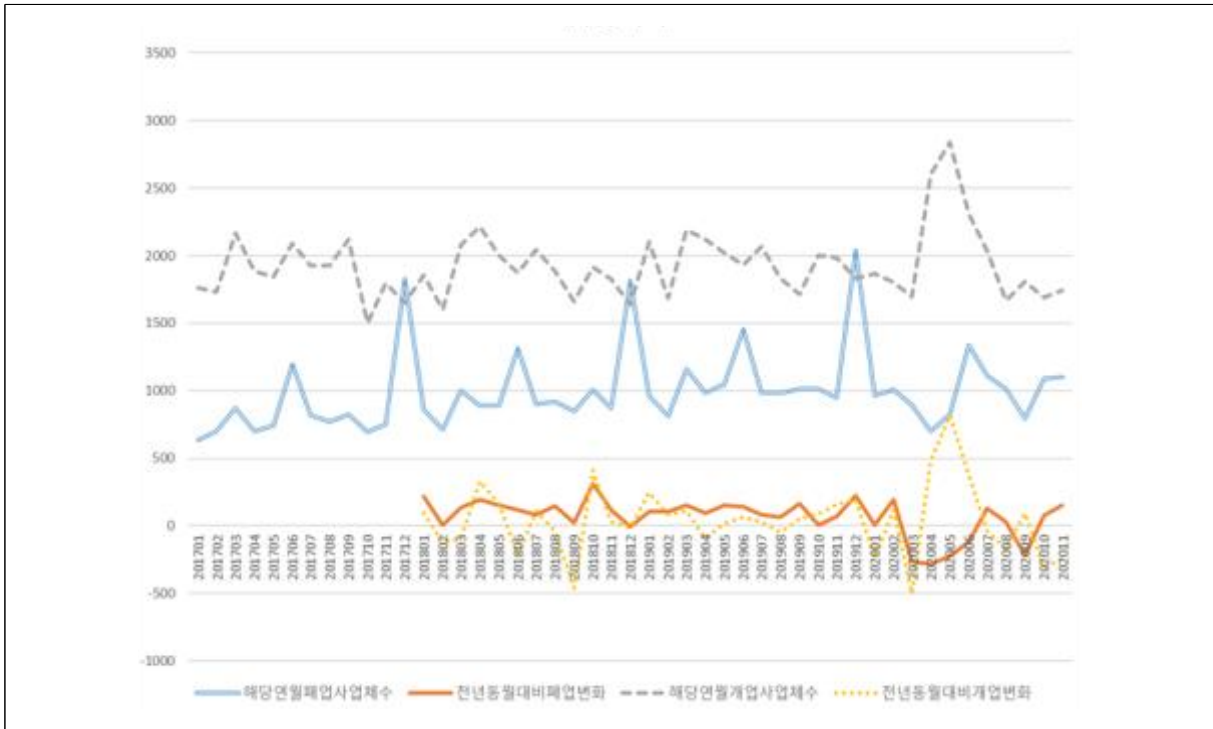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38] 광주광역시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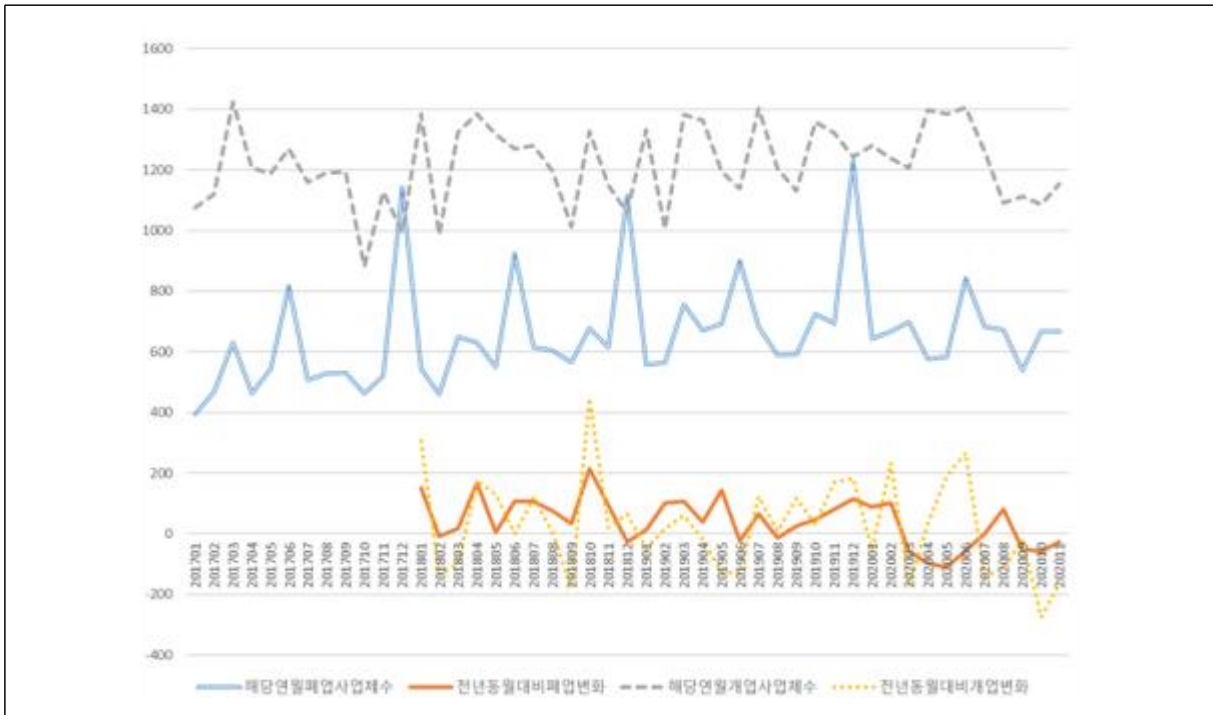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39] 대구광역시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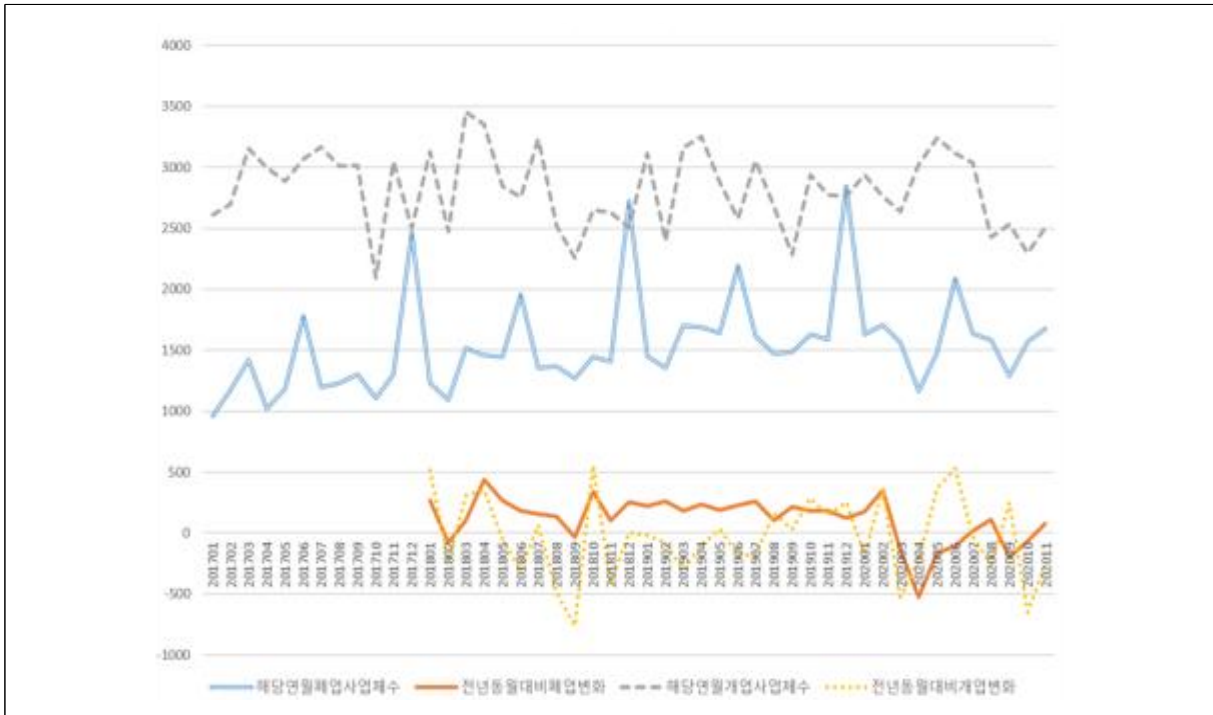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40] 대전광역시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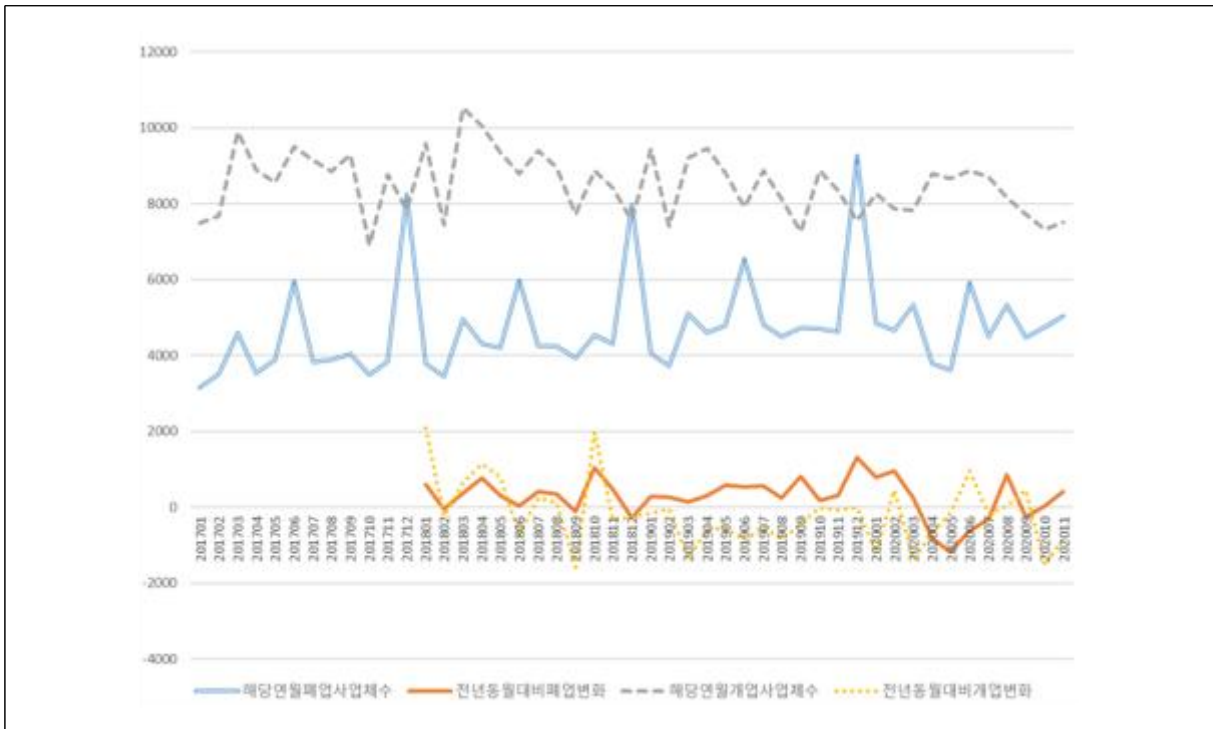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41] 부산광역시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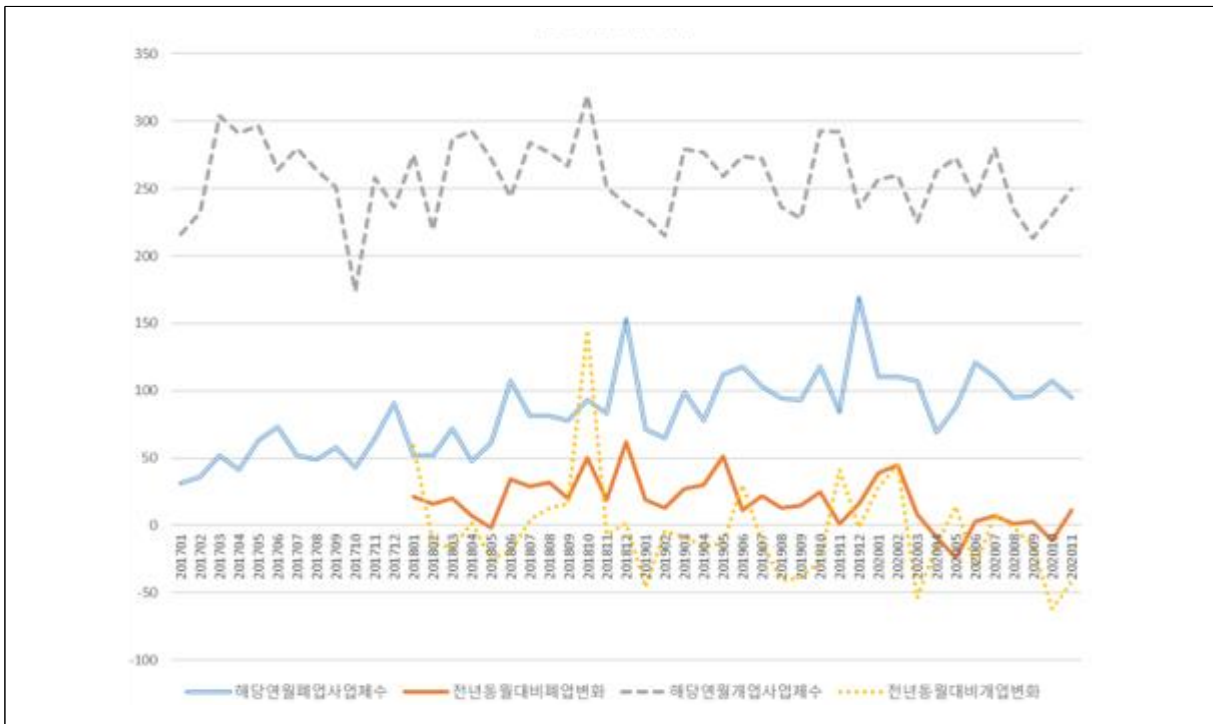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42] 서울특별시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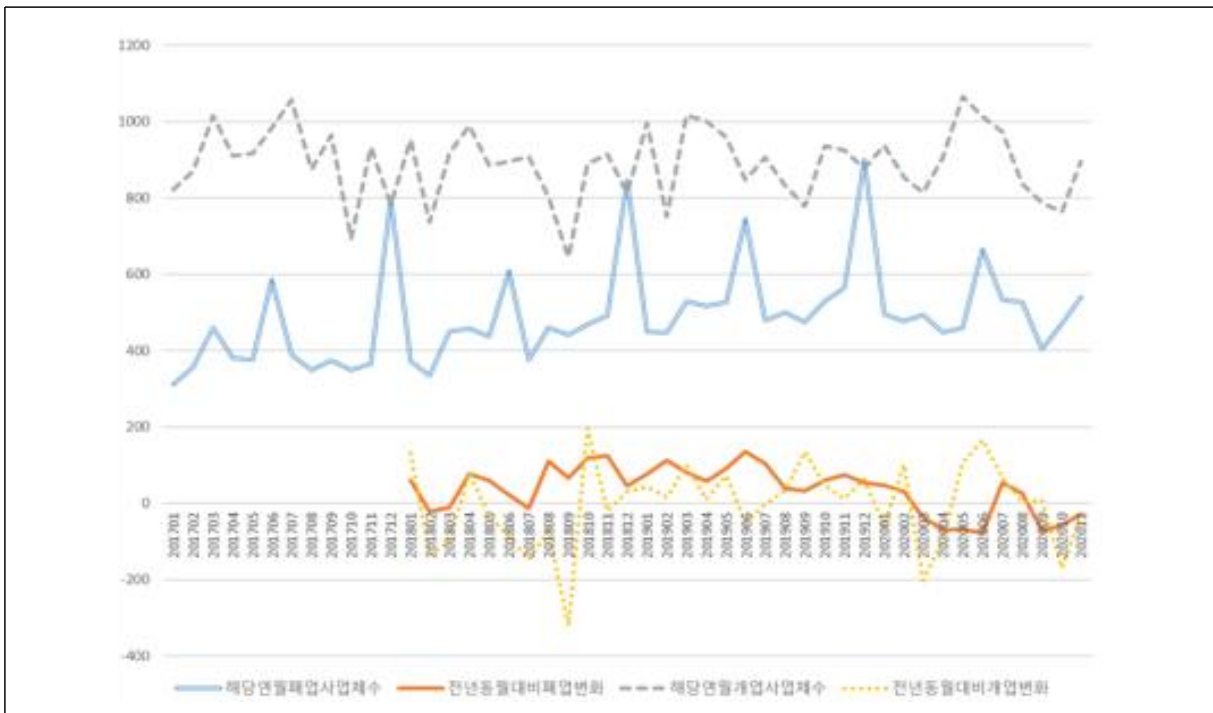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43] 세종특별자치시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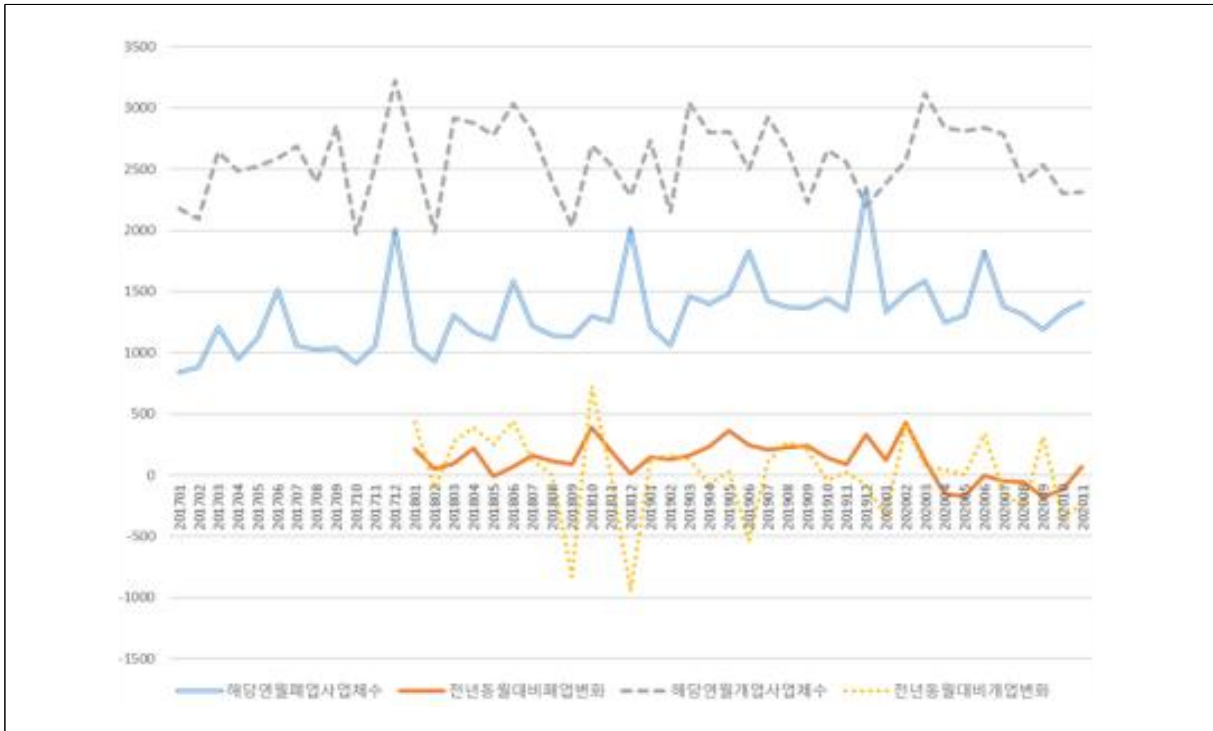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44] 울산광역시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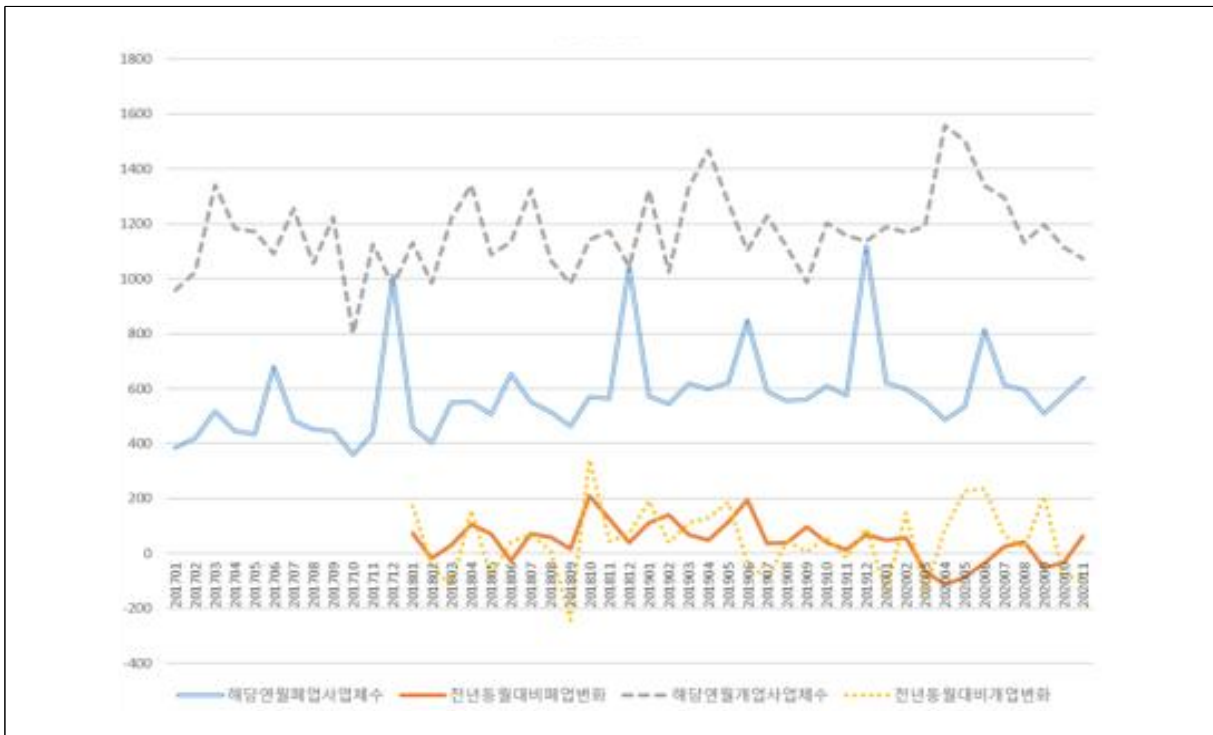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45] 인천광역시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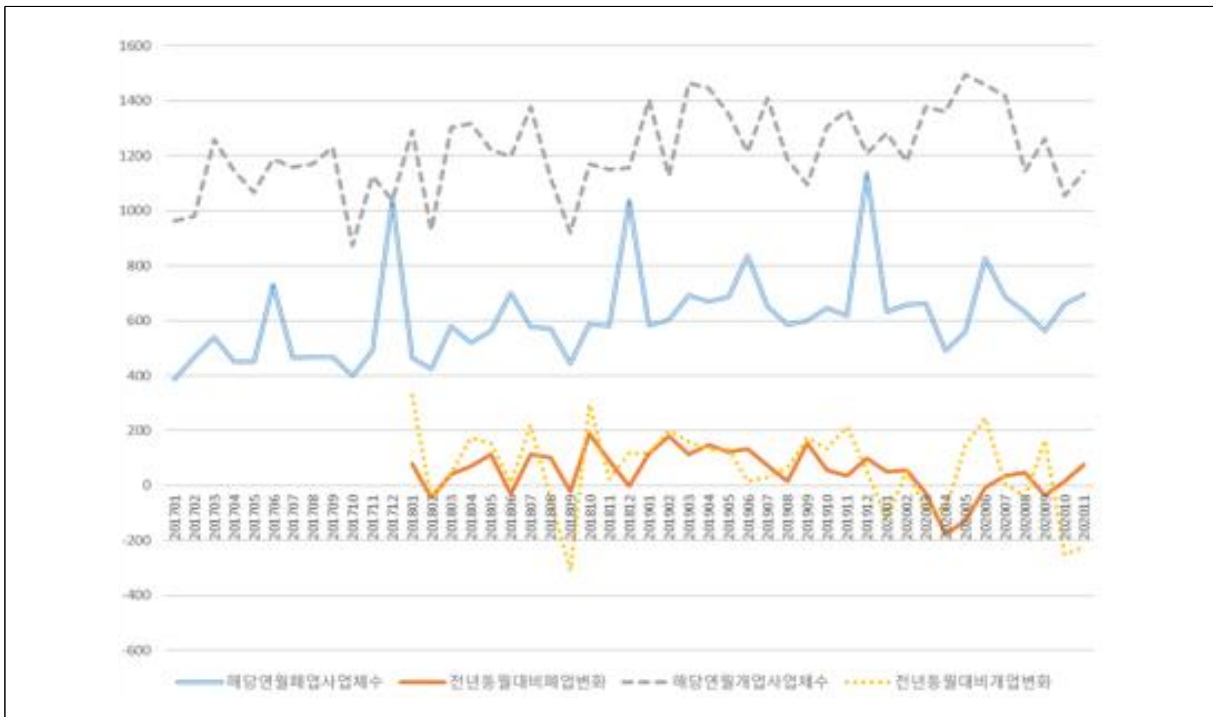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46] 전라남도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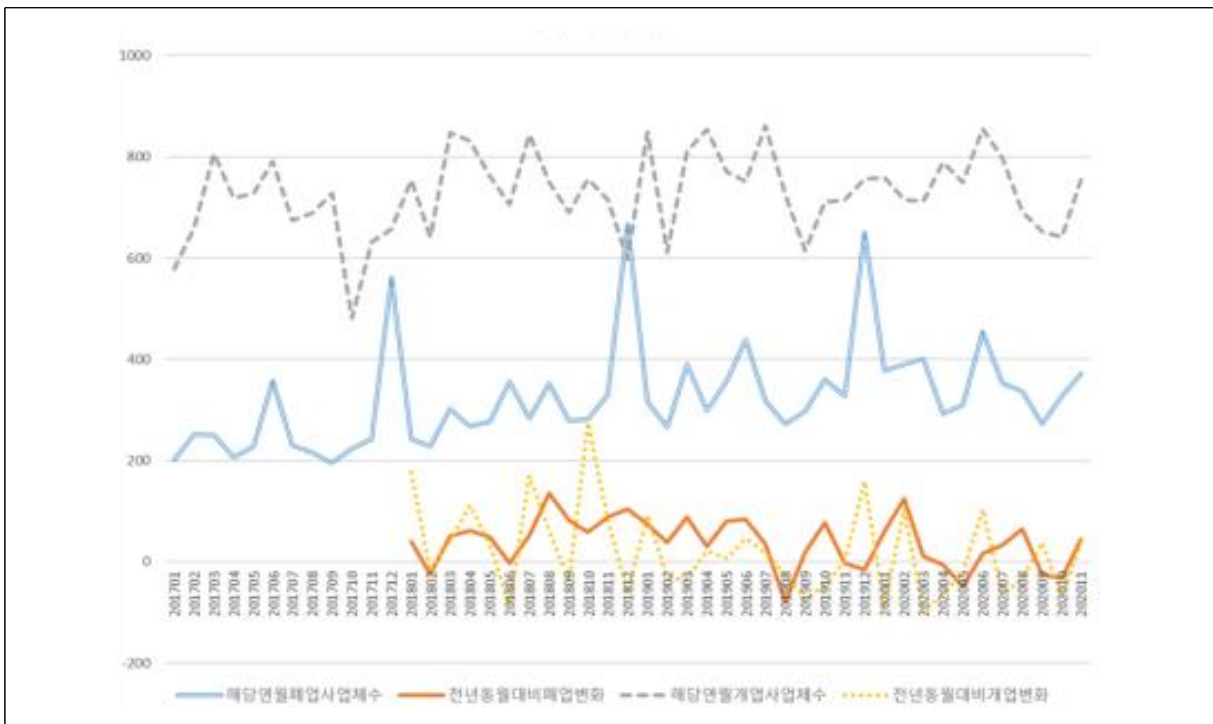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47] 전라북도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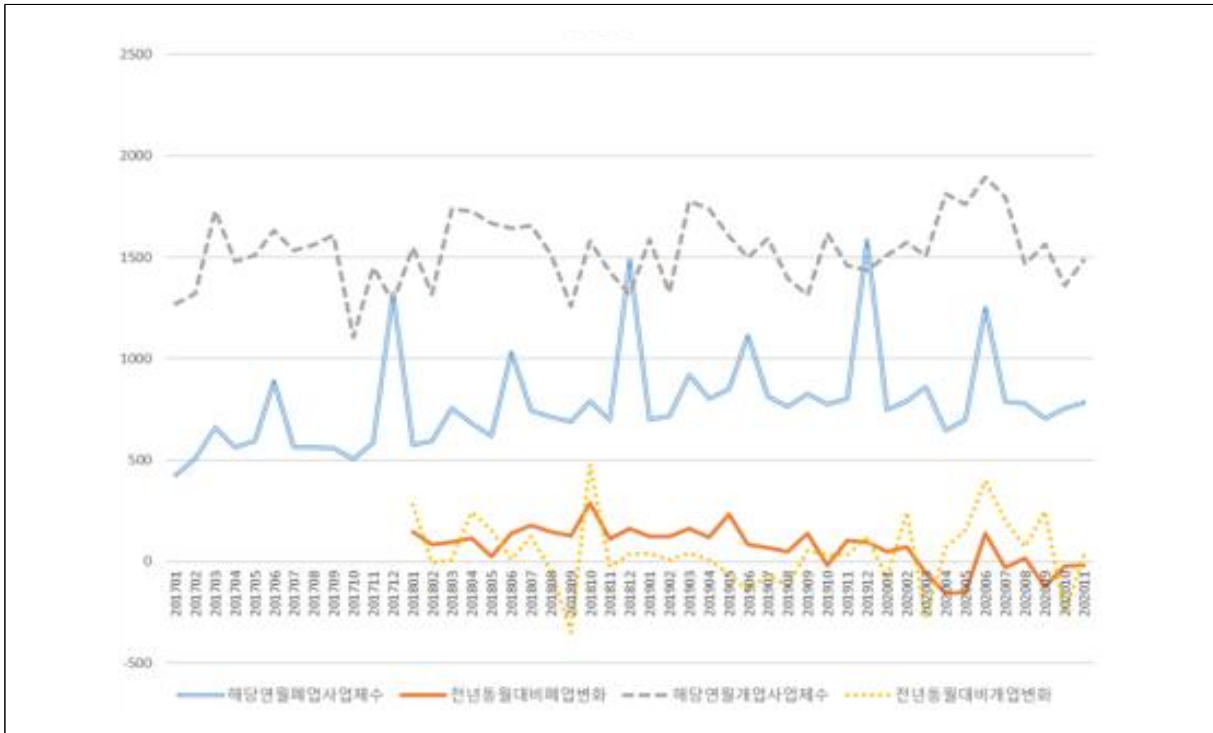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48] 제주특별자치도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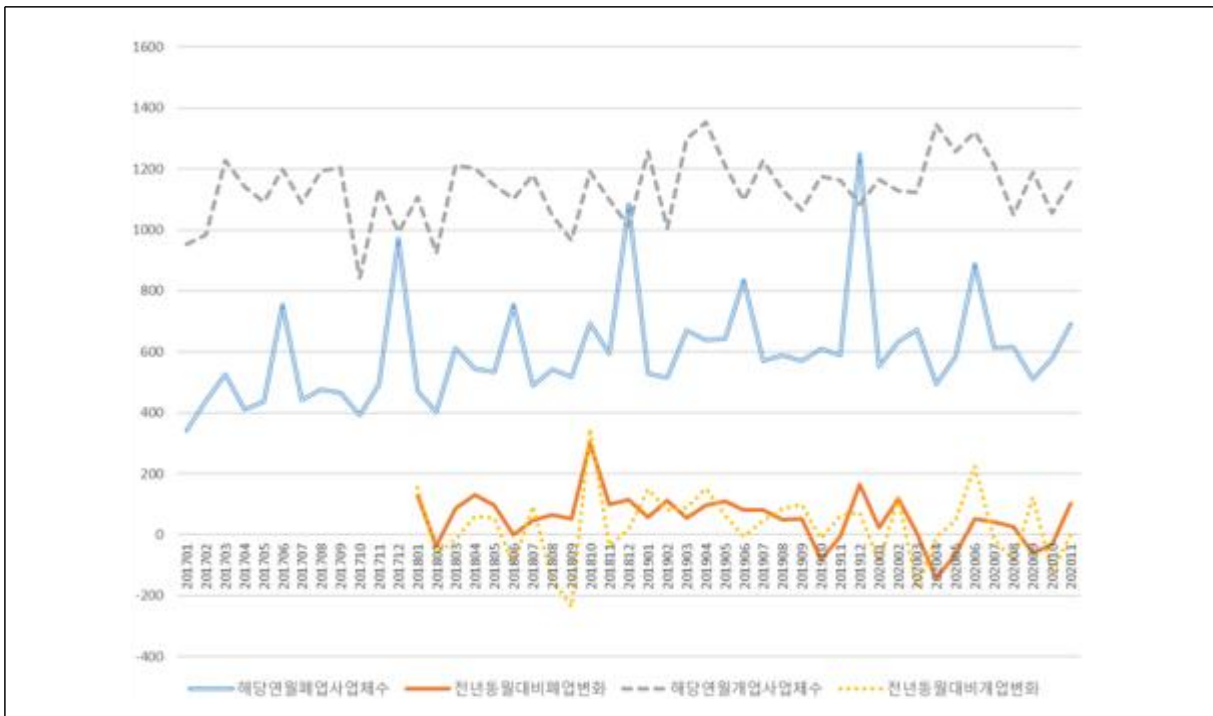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49] 충청남도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2-50] 충청북도 월별 폐업·개업사업체 수와 전년동월대비 변화



주: KCB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제3장 소상공인 대상 예산사업 분석

제1절 생애주기별 예산사업분석 개요

1. 예산사업분석 개요

앞선 2장에서는 코리아크레딧뷰로의 마이크로 수준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생태계에서는 창업도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그 비중의 절반 이상으로 폐업도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 자료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정책 공급이 이와 같은 정책 수요와 맞게 설계되어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현재 소상공인 정책의 생애주기별 특화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창업-성장-철수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상황에 따라 재정사업이 특화하여 조준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 확인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3단계로 나누어 소상공인 정책으로 명시된 정책을 살펴보고 소상공인도 수혜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범부처 정책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수혜할 수 있는 정책들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을 분류해 보기로 한다. 연구의 목적에 맞춰 창업, 성장, 철수 세 단계로 나누고 특히 그 중 철수에 특화되어 있는 정책의 비중을 확인하기로 한다.

소상공인 정책으로 명명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도 함께 고려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의 부분집합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특별한 배제기준이 없는 한 보편적으로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함께 수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우현 외(2013)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원래 소상공인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업들에서도 실제 자료를 연결해보면 상당한 양의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소상공인이 수혜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되지만 범부처적으로 설계되고 집행되고 있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가 평가를 포함

한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2021)에서 중소기업정책으로 정리해서 파악한 사업들은 전부 포함하고, 재정정보를 통해 추가로 파악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가하여 기본적으로는 세부사업단위 수준에서 정책을 파악하였다.

참고로 2장에서 도출된 2019년 생애주기 비중을 사업체 숫자 수요 기준으로 검토하면, 철수-폐업지원의 경우도 8.37% 수준, 창업은 14.90% 수준, 나머지 사업이 유지 및 성장 특화로 구성되는 것이 현상 대비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산사업 분석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접근은 부가가치 비중으로 가중치를 주는 것이겠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성상 부가가치 기준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은 일반적으로 다른 생산부문 사업체 대비 규모가 작고 동질적인 측면에 강하므로 사업체 수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도 합리적인 최선의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폐업·철수 지원의 법적 근거

다음으로는 정부가 폐업 및 철수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짧게 확인하고 지나가고자 한다. 소상공인기본법의 제25조는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구성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양한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4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공제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전환,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공제)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제2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예산사업 분석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전체 정부 사업 중에서 명시적인 소상공인 지원명칭을 가진 사업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중 소상공인-소상공인-소공인 명칭이 붙은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분류로 볼 때 8개 사업이 확인되며 총 금액은 약 4조원 규모로 볼 수 있다.

소상공인 예산사업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유지·성장에 특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폐업특화 지원은 1.8%, 창업특화 지원은 0.6%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유지와 성장지원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명칭상 소상공인이 명시된 소상공인 정책은 창업과 유지-성장, 폐업에 특화된 사업들이 구성되어 있어 형식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생애주기지원체계를 염두에 둔 사업설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사업 예산 분석

부처명	사업명	본예산 (백만원)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기지원	71,66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지원	131,396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창업지원	23,768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R&D)	3,962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융자)	3,700,0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인프라	24,49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스마트상점기술보급	22,000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특화지원	74,347		○		
합계		3,977,284	23,768	3,881,855	71,661	0
비율			0.6%	97.64%	1.77%	0%

주: 중소벤처기업부(2021) 자료를 기초로 저자 직접 작성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명칭 정책 외에도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수혜하므로 해당 정책들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장우현 외(2013)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함께 수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리 및 분류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제3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관련 정책(중소기업정책) 예산사업 분석

다음으로는 생애주기별 특화를 확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들에 대해 검토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결과적으로 총 101개 사업, 15조 4천억여원의 사업을 검토하였다.

검토에 있어서는 사업의 명칭은 물론 대한민국정부(2020), 중소벤처기업부(2021) 자료

등 사업설명서와 재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책이 의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리뷰하여 결정하였다.

참고로 소상공인 정책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3절에서는 2절의 내용을 함께 포함하여 분석한다.

검토 결과, 창업특화사업에 29%의 예산, 유지 및 성장사업에 54%, 특화한 것으로 보기 힘든 사업에는 13.0%, 철수 및 퇴출에 특화한 사업에는 단 2.1%에 불과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업과 폐업의 비율을 고려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사업 자체에서도 적지 않은 미스매치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2〉 중소벤처기업부 전체 예산사업 분석

부처명	사업명	본예산 (백만원)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기지원	71,66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지원	131,396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창업지원	23,768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R&D)	3,962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융자)	3,700,0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인프라	24,49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스마트상점기술보급	22,000		○		
중소벤처기업부	윈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11,583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협력기반구축	1,864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기반조성	15,875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 (정보화)	13,010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 (R&D)	25,134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28,680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R&D)	98,480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화지원플랫폼	31,064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91,696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	442,456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활용(중기부)	106,361		○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수출플랫폼(정보화)	3,684		○		

〈표 3-2〉의 계속

부처명	사업명	본예산 (백만원)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Tech-Bridge활용상용화기술 개발사업	24,923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중소기업육성프로젝트 지원사업	49,132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규제해결형기술개발 (R&D)	13,856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지주회사자회사R&D 지원(R&D)	9,975		○		
중소벤처기업부	미세먼지저감실용화기술 개발(R&D)	7,785				○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CollaboR&D	46,572				○
중소벤처기업부	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R&D)	11,633				○
중소벤처기업부	예비가젤형기술개발(R&D)	12,408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R&D역량제고(R&D)	14,972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 강화(R&D)	4,350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일반)	288,783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사업(R&D)	201,103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6,093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 기술개발	6,077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R&D)(일반)	408,578	○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원천기술상용화기술 개발(R&D)	3,790				○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기술 개발(R&D)	10,469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 (정보화)	6,943		○		
중소벤처기업부	AI기반고부가신제품기술 개발(R&D)	7,715		○		
중소벤처기업부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437,690		○		

〈표 3-2〉의 계속

부처명	사업명	본예산 (백만원)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빅데이터기반서비스개발 지원사업(R&D)	13,000		○		
중소벤처기업부	융복합기술교류촉진(R&D)	3,710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스마트서비스지원	9,288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략기술연구조사 (R&D)	1,758		○		
중소벤처기업부	민관협력창업자육성	102,440	○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500,000		○		
중소벤처기업부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770,000		○		
중소벤처기업부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500,000		○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출연(일반)	300,000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236,886				○
중소벤처기업부	투융자복합금융(융자)	140,000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250,000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제도운영	4,779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저변확대	53,185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특별)	60,000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경영지도	3,727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출연	330,00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	6,507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기반구축	126,637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40,100		○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육성	13,354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인력애로센터활용취업 지원	10,013		○		
중소벤처기업부	연수사업	26,271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유입인프라조성	318,209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	36,815		○		
중소벤처기업부	제도약지원자금(융자)	250,000			○	
중소벤처기업부	남북경제협력중소기업육성	198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육성	8,819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16,541				○

〈표 3-2〉의 계속

부처명	사업명	본예산 (백만원)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인프라구축(정보화)	13,425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품질기술개발(R&D)	48,031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센서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10,998				○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수요형스마트공장기술 개발(R&D)	9,263				○
중소벤처기업부	위기대응지역기업비즈니스 센터운영	6,400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중기부)	83,588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	3,291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R&D)	122,707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R&D) (세종)	3,372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운영	1,082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혁신바우처지원 사업	52,605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반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8,800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인프라지원	74,888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인프라지원(세종)	80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인프라지원(제주)	1,160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공패키지	107,717	○			
중소벤처기업부	마케팅지원사업	25,900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사업(R&D)(소부장)	31,100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성장기술개발(R&D) (특별)	29,555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특별)	104,684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일반)	740,0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전략협력 기술개발	5,013		○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기반활용플러스	8,590				○

〈표 3-2〉의 계속

부처명	사업명	본예산 (백만원)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R&D)	1,301		○		
중소벤처기업부	현장수요맞춤형방역물품 기술개발(R&D)	8,905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우수연구개발혁신 제품지정및시범구매사업	1,416		○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서비스플랫폼구축	216,600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데이터공동활용플랫폼 기술개발(R&D)	4,544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단지대개조지역기업R&D	9,000		○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기업성장집중 지원	1,925		○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출연(특별)	60,000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제도운영	6,836		○		
합계		15,355,031	4,420,464	8,288,290	321,661	1,994,616
비율			28.79%	53.98%	2.09%	12.99%

주: 중소기업부(2021) 자료를 기초로 저자 직접 작성

제4절 기타 주요부처 소상공인 관련 정책(중소기업정책) 예산사업 분석

본 절에서는 마지막으로 기타 주요부처의 중소기업정책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중소기업부(2021) 자료를 기초로 하되, 재정사업 분류에 따라 재구성하고 재조정하여 접근한다.

최종적으로 총 222개 사업, 14조 6천억여원의 사업을 검토하였는데, 검토결과, 대부분이 유지-성장특화 또는 특화 없음, 일부 창업사업이 확인되어 철수나 퇴출에 특화한 사업은 확인할 수 없어, 2절에서 확인한 철수나 퇴출 수치 비율은 더 낮아지게 됨을 확인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사업 중 유지-성장특화에 40%, 특화 없음이 59%, 창업에 1.3%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3〉 소상공인 관련(중소기업지원) 사업 - 범부처

부처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백만원)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154,979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1,372,832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186,481		○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융자	9,167		○		
고용노동부	일터혁신지원	22,054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지원	59,924		○		
고용노동부	유해작업환경개선	61,592		○		
고용노동부	안전인증및안전검사	6,763		○		
고용노동부	업종별재해예방	69,571		○		
고용노동부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27,29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용자	322,758				○
고용노동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276,304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	1,296,564		○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4,746		○		
고용노동부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 지원	11,523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493,592		○		
고용노동부	근로자복지지원	1,64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해외진출역량강화	3,30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해외진출 지원	2,39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IT지원센터운영	5,6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미디어기술개발 사업화(R&BD)지원	1,85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미디어산업육성 기반구축(정보화)	3,2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VR·AR콘텐츠산업육성	70,36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기업경쟁력 강화	25,7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DB산업육성(정보화)	3,35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 경쟁력강화	122,970				○

〈표 3-3〉의 계속

부처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백만원)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반보호강화	22,85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기반확충	77,5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제조운영체제 개발및실증(R&D)	3,55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SW산업진흥지원 (정보화/제주)	7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SW산업진흥지원 (정보화/세종)	78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SW산업진흥지원 (정보화/지역지원포함)	11,0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SW전문기업육성	7,63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연구성과기반BIG 선도모델	4,66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핵심기술개발(R&D)	1,44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 집적단지조성	9,6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389,9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58,86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	1,7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산업창출및 중소기업육성	3,06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미래앞장감양성	80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창의기업육성	14,75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협력기반ICT 스타트업육성(R&D)	5,10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융용기술개발 지원(유자)	25,58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시험인증허브 기반구축	19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미래시장최적화협업 기술개발(R&D)	2,40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기반개방형혁신제품 서비스개발(R&D)	2,920				○

〈표 3-3〉의 계속

부처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백만원)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관세청	수출입화물검사지원	9,128		○		
국토부	물류산업지원	2,954				○
국토부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R&D)	39,685		○		
국토부	국토교통혁신펀드	20,000		○		
국토부	자동차대체부품활성화 사업	4,500		○		
금융위원회	경영지도	12,020				○
금융위원회	보증연계투자	60,000				○
금융위원회	코넥스시장활성화지원	1,235				○
금융위원회	팩토링금융	39,750		○		
기상청	연직바람관측장비용합 기술개발(R&D)	1,494				○
기상청	기상산업활성화	11,678				○
기상청	미래유망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R&D)	2,624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R&D)	17,497				○
농림축산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R&D)	3,985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기술융합창의 인재양성(R&D)	13,363				○
농림축산식품부	유용농생명자원산업화 기술개발(R&D)	8,663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생산기술개발(R&D)	9,972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수출활성화	2,233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 지원	16,694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ICT기자재국 가표준확산지원	4,100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모태펀드출자	40,000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80,903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 자금(융자)	372,882		○		

〈표 3-3〉의 계속

부처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백만원)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인프라강화	47,506				○
농림축산식품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R&D)	20,826				○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성식품산업육성	6,051				○
농림축산식품부	맞춤형혁신식품및천연 안심소재기술개발(R&D)	10,506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종합자금	179,800				○
농림축산식품부	전통발효식품육성	14,383				○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유통활성화지원(음자)	80,000				○
농림축산식품부	GoldenSeed프로젝트(R&D)	25,280				○
농림축산식품부	사료산업종합지원(음자)	50,610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육성	64,609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74,504	○			
문화체육관광부	공간정보기반실감형 콘텐츠융복합기술개발 (R&D)	1,095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용자지원	599,000		○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및대중문화산업 육성	54,063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연구개발(R&D)	56,779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투자활성화	28,305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콘텐츠산업균형발전 지원	49,730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생태계조성	48,254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지원	8,699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39,283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금융지원	119,220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60,386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 (R&D)	4,291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창업·선도기업 육성핵심기술개발(R&D)	1,701	○			

<표 3-3>의 계속

부처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백만원)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중심도시육성 (지자체)	42,392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육성	28,636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10,578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창업 및 융합활성화	3,950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수출지원	51,947		○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1,375				○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R&D)	90,832				○
방위사업청	국방벤처기업육성	19,722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이차보전	9,316				○
방위사업청	글로벌방산강소기업지원	11,836		○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밀착형방송광고 활성화기반구축	1,640				○
방송통신위원회	혁신형중소기업방송광고 활성화지원	1,350				○
산림청	산촌활성화지원	15,455				○
산림청	목재자원의고부가가치 첨단화기술개발(R&D)	8,735				○
산림청	산림과학기술실용화 지원사업(R&D)	4,921				○
산림청	융복합기반임산업의신 산업화기술개발(R&D)	2,115				○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50,819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사중재원지원	918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83,071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경쟁력강화지원	41,173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산업부)	81,692				○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4,561				○
산업통상자원부	CDM기반정밀의료데이터 통합플랫폼기술개발(R&D)	4,980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기술개발(R&D)	110,675				○

〈표 3-3〉의 계속

부처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백만원)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 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R&D)(산업부)	3,430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용임베디드시스템 기술개발(R&D)	8,357				○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R&D)	7,992				○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 개발(설계·제조)(R&D)	63,703				○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하이브리드PCB 기술개발(R&D)	4,900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형스마트그리드실증 (R&D)	5,357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전원확대와전력 계통안정화를위한RMS 기술개발(R&D)	4,365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	4,865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 사업(R&D)	1,346				○
산업통상자원부	ESS기술개발사업(R&D)	4,080				○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 개발(R&D)	14,457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국제협력(R&D)	81,896				○
산업통상자원부	우수기술연구센터(ATC)	25,200				○
산업통상자원부	우수기업연구소육성 (ATC+)(R&D)	39,812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R&D)(산업부)	5,000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성과활용촉진	25,088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화연계기술개발(R&D)	14,855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R&D)	195,437				○
산업통상자원부	청정제조기반구축(R&D)	1,980				○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	9,000				○

〈표 3-3〉의 계속

부처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백만원)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제품성능안전평가 기술개발및기업지원	3,320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의류혁신역량강화 사업	5,278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 개발사업(R&D)	12,391				○
산업통상자원부	안전보호용복합섬유 산업육성사업	8,636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혁신Lab 기술개발	9,297				○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13,890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글로벌투자연계 기술개발(R&D)	9,741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R&D)	886,632				○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산업경쟁력강화(R&D)	1,847				○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주력산업품질대응 뿌리기술개발사업(R&D)	27,272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사업(R&D)	48,202				○
산업통상자원부	가격변동리스크헷지지원	46,658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 지원	136,905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플랜트진출확대	8,372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 개발(예특)(R&D)	214,010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 기업육성(R&D)	4,668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19,132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유자)	326,000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진단보조	10,575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 지원	2,566				○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핵심기술개발 (R&D)	56,218				○

〈표 3-3〉의 계속

부처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백만원)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안전부품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	6,526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중대사고방지안전 강화기술개발(R&D)	7,050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R&D)	72,196				○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R&D)	11,748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9,000				○
산업통상자원부	e-모빌리티기업지원센터 구축지원	5,500				○
산업통상자원부	드론활용서비스시장 창출지원(R&D)	8,580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지역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R&D)	1,875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지역미래형 전기차부품개발(R&D)	5,508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연계형자동차부품 기술개발(R&D)	4,366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부품기업혁신지원	5,845				○
산업통상자원부	자율비행개인항공기 기술개발(R&D)	7,335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R&D)	2,592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기술개발(R&D)	5,664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개발(R&D)	283,890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유자)	534,000				○
산업통상자원부	LNG발전용가스터빈 고온부품성능검증혁신 기술개발(R&D)	4,455				○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용가스터빈연료다변화 기술개발사업(R&D)	5,986				○

〈표 3-3〉의 계속

부처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백만원)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석탄발전미세먼지저감 친환경설비혁신기술개발 (R&D)(산업부)	6,833				○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중견기업육성 프로젝트지원(R&D)	32,220				○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혁신성장	24,610				○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혁신성장(R&D)	5,793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R&D)	77,888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R&D)(세종)	5,991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활력프로젝트	18,725				○
산업통상자원부	i-Ceramic플랫폼구축사업 (R&D)	5,000				○
산업통상자원부	수송분야비배기관미세 먼지저감사업(R&D)	7,000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 지원	14,313				○
산업통상자원부	대체물질활용기술개발	655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산업기술(R&D)	127,013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156,711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	186,840				○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제도활성화	7,281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고도화	6,838				○
조달청	정부조달국제협력체구축	3,347				○
조달청	조달물자구매및관리지원 (자본)	44,500				○
특허청	IP-R&D전략지원(R&D)	40,352				○
특허청	모태조합출자	20,000	○			
특허청	스타트업지식재산바우처	1,686				○
특허청	여성발명진흥	1,696				○
특허청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11,770				○
특허청	지식재산창출지원	19,026				○

〈표 3-3〉의 계속

부처명	세부사업명	본예산 (백만원)	창업 특화	유지- 성장특화	폐업- 전환특화	특화 없음
해양수산부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4,750				○
해양수산부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 (R&D)	8,950				○
해양수산부	우수수산물지원(육자)	132,401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매지원(육자)	70,389		○		
해양수산부	해양모태펀드	10,000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수요기술개발 사업(R&D)	14,060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신산업육성및 기업투자유치지원	12,601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	4,830				○
환경부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51,932				○
환경부	물산업진흥및물기업육성	6,030				○
환경부	재활용저해제품순환 이용성개선기술개발사업 (R&D)	8,386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체계선진화	62,155				○
환경부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지원	21,640				○
환경부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30,000				○
환경부	중소환경기업사업화 지원사업	89,730				○
환경부	글로벌담환경기술개발사업	8,918				○
환경부	환경시설재난재해대응 기술개발사업	5,511				○
환경부	미래환경산업육성육자	311,078				○
환경부	사업장미세먼지관리	505,561				○
환경부	생활주변미세먼지관리 사업	72,761				○
환경부	유망녹색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9,223				○
합계		14,586,468	187,721	5,833,273	0	8,565,474
비율		100%	1.29%	39.99%	0	58.72%

주: 중소벤처기업부(2021) 자료를 기초로 저자 직접 작성

타부처의 경우 자신의 부처와 관계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유지에만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는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정책의 콘트를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포커스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주기기반의 정책 설계가 확인되는 경향이 있지만, 소상공인이 실제 수혜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포커스가 미흡한 사업들의 경우에는 생애주기 설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5절 소결

이상의 분석 결과, 현실 생태계에서의 철수 수요와 비교해 볼 때 재정사업 중 철수에 특화된 사업의 수와 예산액은 과소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예산 15조 4천억원의 29%가 창업, 54%가 성장과 유지 특화, 13%는 특별히 생애주기에 특화되지 않게 조준된 반면 철수에 특화된 사업 예산은 2.1%에 불과하였다.

기타 부처의 소상공인 관련 예산 14조 5천억원 중에서는 철수에 특화된 사업 예산이 존재하지 않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애주기 정책 수요에 비해 정책의 설계 개념이 특히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정확히 소상공인, 철수에 조준된 금액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 설계에 있어 소상공인의 철수에 관련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가장 이상적으로는 실제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수혜액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필요할 경우 추후 심층평가를 거쳐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기적으로는 정책제언에서 제시하겠지만 각 부처가 소상공인 지원 비율, 소상공인 지원 비율 중 생애주기 지원비율을 사업별로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제4장

소상공인 정책수요: 소상공인지원공단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제1절 소상공인 정책수요 분석 개요

본 장에서는 소상공인지원공단의 협조를 받아, 소상공인사업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라 폐업 현황 조사 내용과 수요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 19 발생 이후 1년 9개월 경과 후 현재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폐업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하여, 해당 결과를 함께 소개하기로 한다. 특히, 4명의 폐업 소상공인과의 심층 인터뷰도 진행하여 해당 인터뷰에서 제기된 정책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기로 한다.

소상공인 지원공단 조사에서 폐업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생계비 확보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뷰 결과에 있어서도 폐업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보고서와 같이 ‘생계비 지원’이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출 상환 유예’ 14.1%, ‘손실보상 소급적용’ 12.1%, ‘세금 면제 또는 유예’ 10.1%, ‘권리금 보호’ 9.4% 등 자금 지원과 보호에 대한 응답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나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기존 정책의 패키지 지원 강화, 집기 처리를 위한 공공 전자상거래 장터 설계 제안 등의 내용이 도출되어, 향후 생애주기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있어 참고가 될 사항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소상공인 폐업 관련 정책수요 분석

1. 폐업 소상공인 정책수요 분석

가. 소상공인 사업현황 실태조사 보고서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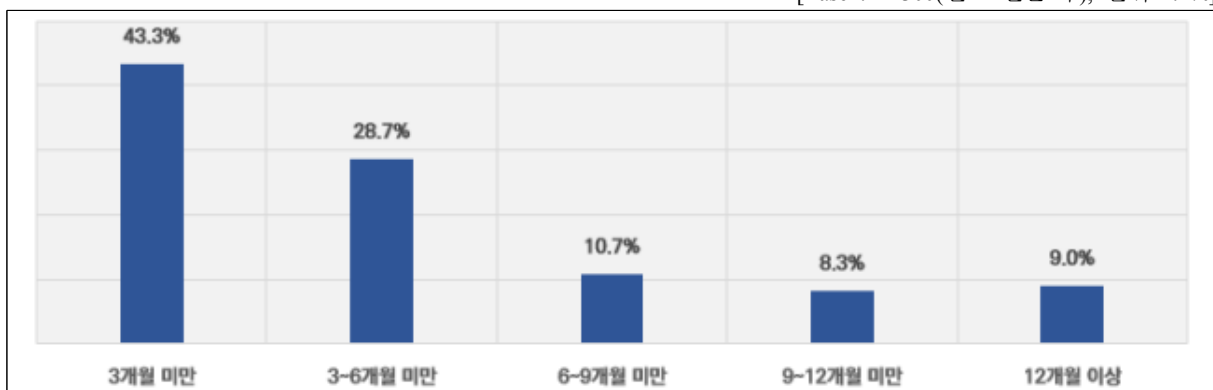
- 먼저 소상공인연합회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시한 「소상공인 사업현황 실태조사 보고서」(2020)를 참고하여 폐업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과 폐업시 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을 살펴봄

1) 폐업 소요 기간

- 폐업 소요 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3개월 미만’이 4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6개월 미만’이 28.7%로 나타남

[그림 4-1] 폐업 소요 기간

[Base : n=300(괄호 안은 수), 단위 : %]



2) 폐업의 주된 원인(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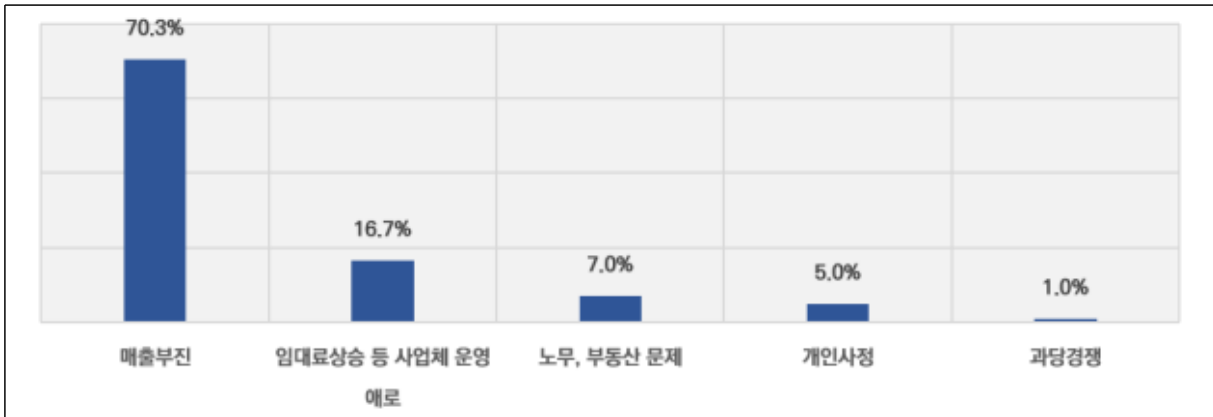
- 폐업의 주된 원인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매출부진(70.3%)’을 1순위로 응답 - 다음으로 ‘임대료 상승 등 사업체 운영 애로 사항’ 16.7%, ‘노무, 부동산 문제’ 7.0%, ‘개인사정’ 5.0%, ‘과당경쟁’ 1.0% 순으로 응답

※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요 폐업 원인에 대한 응답이 과거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1순위로 꼽은 ‘상권쇠퇴’와 차이가 있음

21) 소상공인연합회(2020), 「소상공인 사업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조사기간: 2020년 10월 13일~ 2020년 11월 3일)

[그림 4-2] 폐업의 주된 원인(1순위)

[Base : n=300, 단위 : %]



-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폐업의 주된 원인 또한 ‘매출부진’이 8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임대료 상승 등 사업체 운영 애로사항’ 43.0%, ‘과당경쟁’ 27.0%, ‘사업체 법률, 노무, 부동산 문제’ 20.0%, ‘건강, 가족 돌봄 등 개인사정’ 15.7%, ‘사건 사고 및 자연 재난’ 8.0%로 응답

[그림 4-3] 폐업의 주된 원인(1+2순위)

[Base : n=3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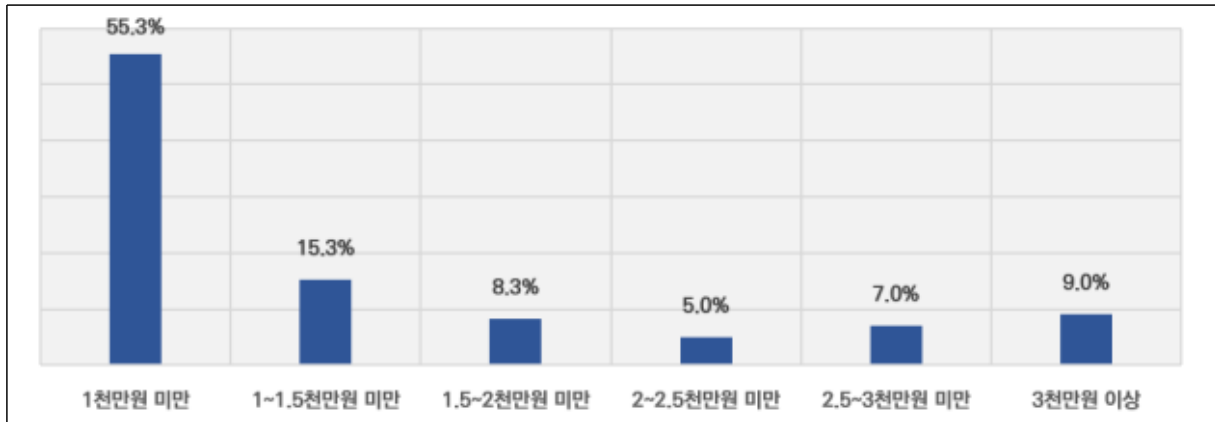


3) 폐업 소요 비용

- 폐업 시 소요 비용으로는 천만 원 미만(55.3%)이 응답자의 1/2 이상을 차지함
 - 다음으로 ‘1~1.5천만 원 미만’ 15.3%, ‘1.5~2천만 원 미만’ 8.3% 순으로 나타남

[그림 4-4] 폐업 소요 비용

[Base : n=300, 단위 : %]



4) 구체적 폐업 비용

- 폐업 소요된 구체적 비용에 대한 1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철거 원상 복구비용 (42.3%)’과 ‘영업관련(32.7%)’ 비용이 높게 나타남

[그림 4-5] 구체적 폐업 비용(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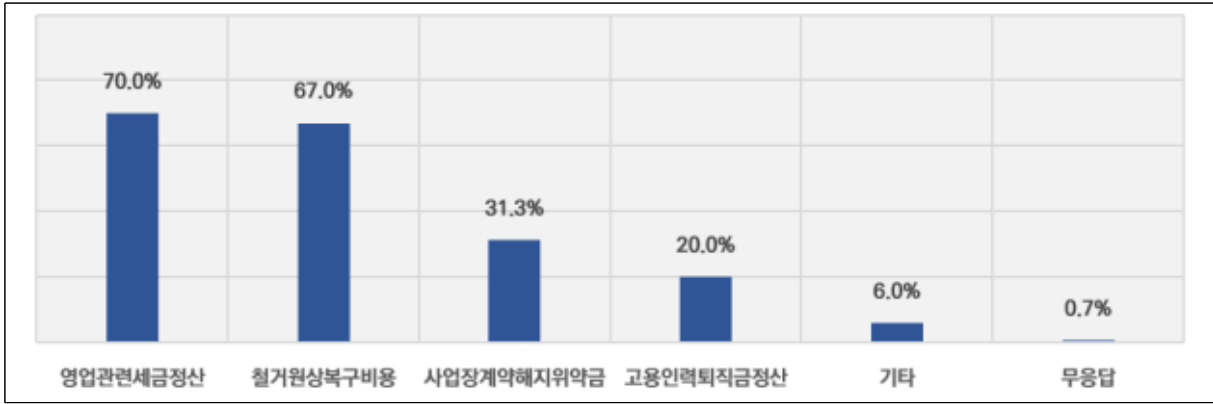
[Base : n=300, 단위 : %]



- 폐업 소요된 비용에 대한 1·2순위를 합한 결과 ‘영업관련 세금정산’이 70.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철거원상 복구 비용’ 60.7%로 높게 나타남
 - ‘사업장계약해지 위약금’은 31.3%, ‘고용인력 퇴직금 정산’ 20.0%, ‘기타’ 6.0% 순으로 나타남

[그림 4-6] 구체적 폐업 비용(1+2순위)

[Base : n=3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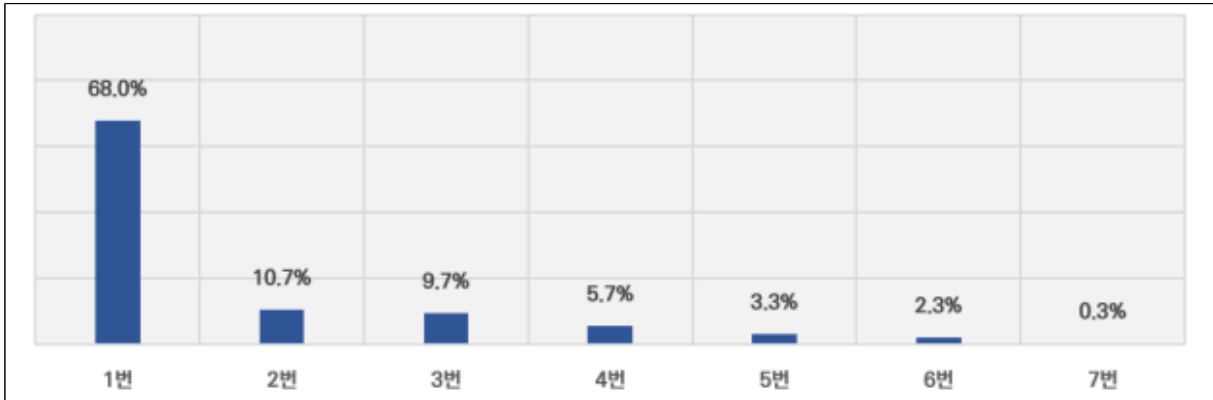


5) 폐업 과정 혹은 폐업 시 가장 어려운 점

- 폐업 과정 혹은 폐업 시 1순위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생계비 확보’가 68.0%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4-7] 폐업 과정 및 폐업 시 가장 어려운 점(1순위)

[Base : n=3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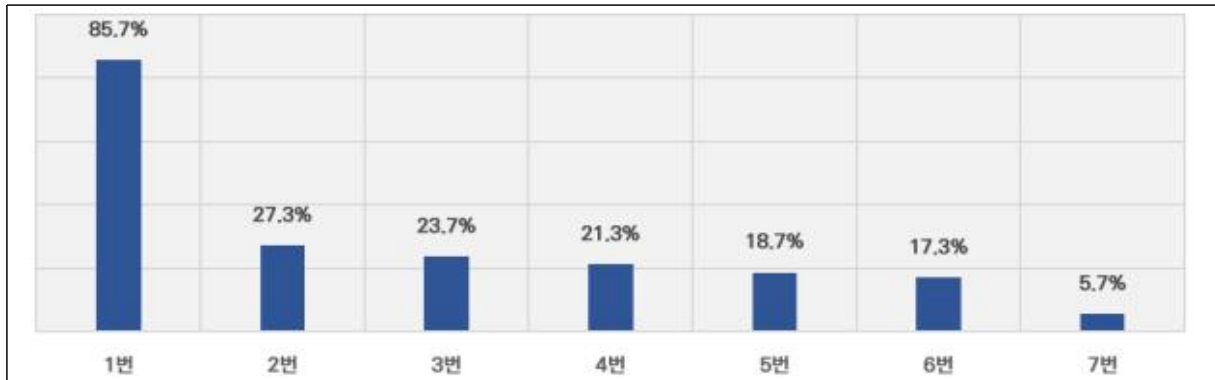


- 주: 1번: 생계비 확보
 2번: 미래에 대한 불안(재창업, 재취업 등에 대한 불확실성)
 3번: 기타 영업시 또는 영업 종료에 따라 발생된 손해비용
 4번: 폐업 정리 절차에 따른 세금 정산 및 신고
 5번: 사업체 기존 설치 정리 비용(철거, 원상복구 등)
 6번: 법 관련 분쟁(가맹사업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7번: 기타

-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폐업 과정 혹은 폐업 시 가장 어려운 부분 또한 ‘생계비 확보’가 85.7%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4-8] 폐업 과정 및 폐업 시 가장 어려운 점(1+2순위)

[Base : n=3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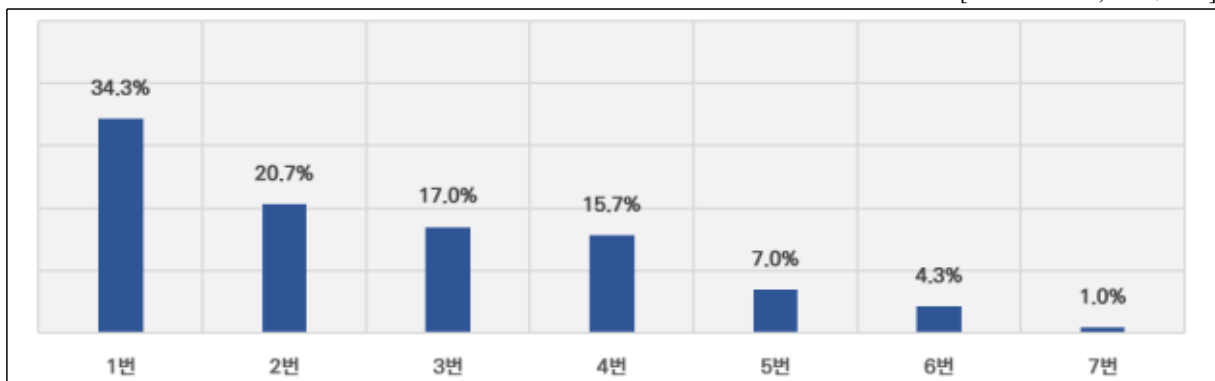
- 주: 1번: 생계비 확보
 2번: 미래에 대한 불안(재창업, 재취업 등에 대한 불확실성)
 3번: 기타 영업시 또는 영업 종료에 따라 발생된 손해비용
 4번: 폐업 정리 절차에 따른 세금 정산 및 신고
 5번: 사업체 기존 설치 정리 비용(철거, 원상복구 등)
 6번: 법 관련 분쟁(가맹사업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7번: 기타

6) 폐업 시 필요한 정부의 지원정책

- 폐업 시 필요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는 ‘가계생활안정자금지원’이 34.3%, ‘재창업·취업을 위한 지원’이 20.7%, ‘폐업 절차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 17.0% 순으로 나타남

[그림 4-9] 폐업 시 정부의 지원정책(1순위)

[Base : n=3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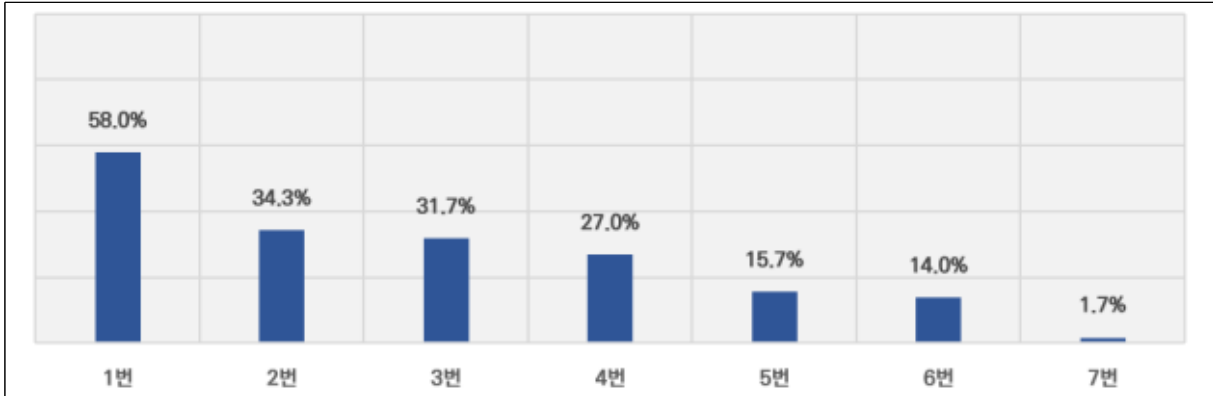


- 주: 1번: 가계생활 안정자금 지원
 2번: 재창업 취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
 3번: 폐업절차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
 4번: 철거원상 복구비용 자금 지원
 5번: 신용불량 회복을 위한 지원
 6번: 사회보험 지원
 7번: 기타

- 1순위를 합한 폐업 시 필요한 정부의 지원정책 또한 ‘가계생활안정자금지원’이 58.0%로 가장 높았으며, ‘재창업·취업을 위한 지원’ 34.3%, ‘폐업절차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 31.7%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0] 폐업 시 정부의 지원정책(1+2순위)

[Base : n=300, 단위 : %]



- 주: 1번: 가계생활 안정자금 지원
 2번: 재창업·취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
 3번: 폐업절차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
 4번: 철거원상 복구비용 자금 지원
 5번: 신용불량 회복을 위한 지원
 6번: 사회보험 지원
 7번: 기타

나. 폐업지원 수요조사²²⁾

- 코로나19 발생 후 약 1년 9개월 지난 시점인 현재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폐업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 2021년 10월 11~18일 기간 동안 44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

1) 폐업을 고려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 폐업할 경우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으로는 ‘대출이자 상환’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래 생계수단 부재’가 22.1%,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 17.0% 순으로 가장 많이 나타남
 -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 대부분은 대출상환 부담 및 미래 생계를 위한 자금 사정 악화 등 자금경색으로 인한 고통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음

22) 설문 문항은 [부록 2] 참조

[그림 4-11] 폐업을 고려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Base : n=442,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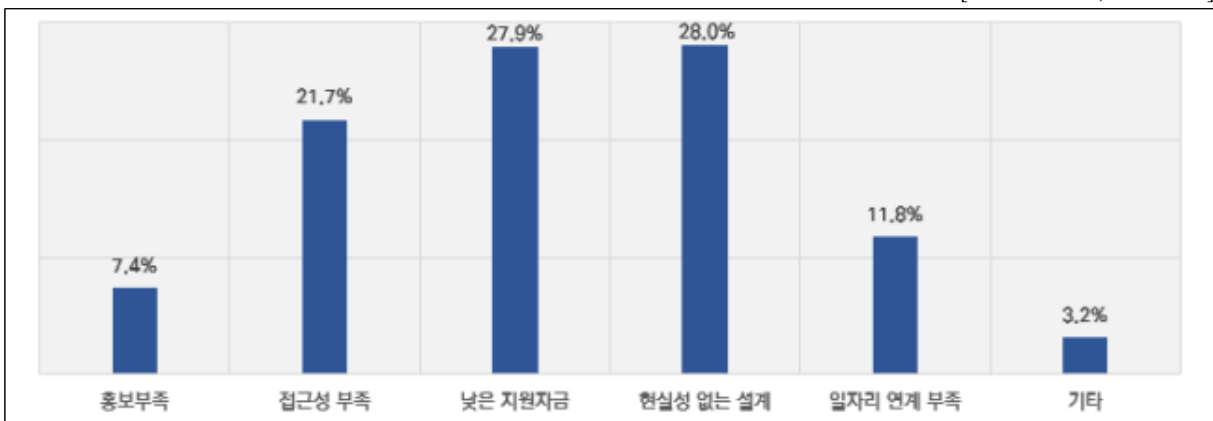


2) 폐업 또는 퇴로 관련 정부 정책의 문제점

- 현재 폐업 또는 퇴로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현실성 없는 정책 설계’가 28.0%로 가장 많았으며, ‘낮은 지원자금’도 27.9%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다음으로 ‘접근성 부족’ 21.7%, ‘일자리 연계 부족’ 11.8%로 응답해 이용 접근성 및 홍보 부족으로 관련 정책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그림 4-12] 폐업 및 퇴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

[Base : n=443,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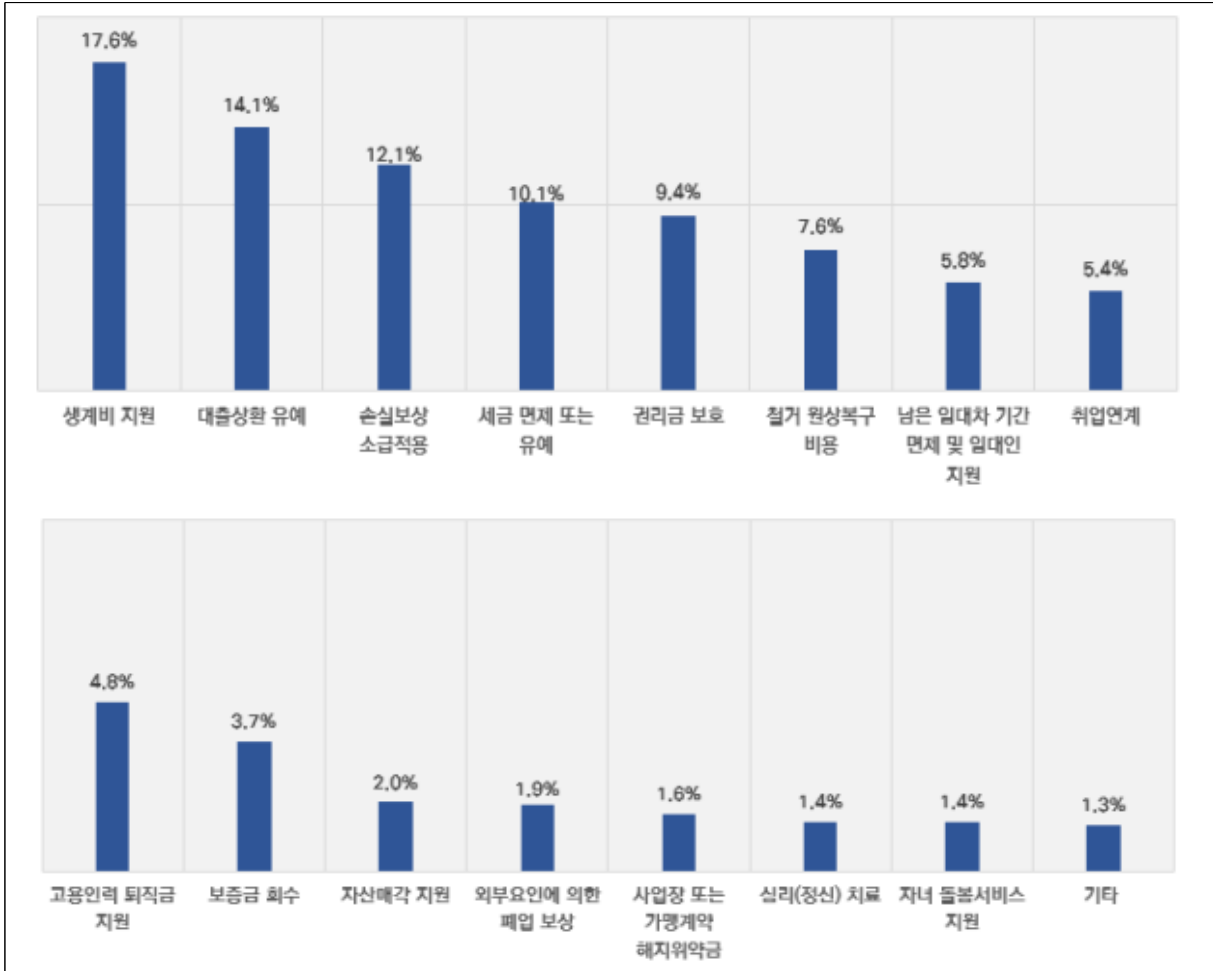
3) 폐업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객관식)

- 폐업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보고서와 같이 ‘생계비 지원’이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대출 상환 유예’ 14.1%, ‘손실보상 소급적용’ 12.1%, ‘세금 면제 또는 유예’

10.1%, ‘권리금 보호’ 9.4% 등 자금 지원과 보호에 대한 응답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나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그림 4-13] 폐업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

[Base : n=446,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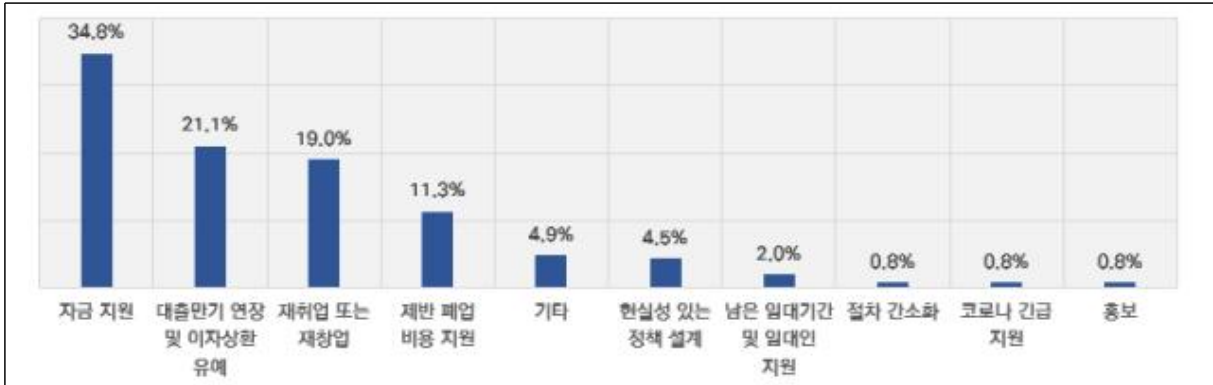


4) 정부의 폐업 지원 시 가장 필요한 정책(주관식)

- 이 외에 필요한 정책을 주관식으로 질의한 결과, 손실보상금, 권리금 보호, 임대료, 퇴직연금, 생계비용 등의 자금 지원이 34.8%로 높게 나타남
- 또한 ‘대출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관련 응답이 21.1%로 나타났으며, ‘재취업 또는 재창업’ 19.0%, ‘제반 폐업 비용 지원’ 11.3% 순으로 정책 수요를 파악할 수 있음
 - 정부도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자발적 구조조정 진입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고려하여 이들의 신용위험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

[그림 4-14] 정부의 폐업 지원 시 가장 필요한 정책

[Base : n=247, 중복응답]



다. 소상공인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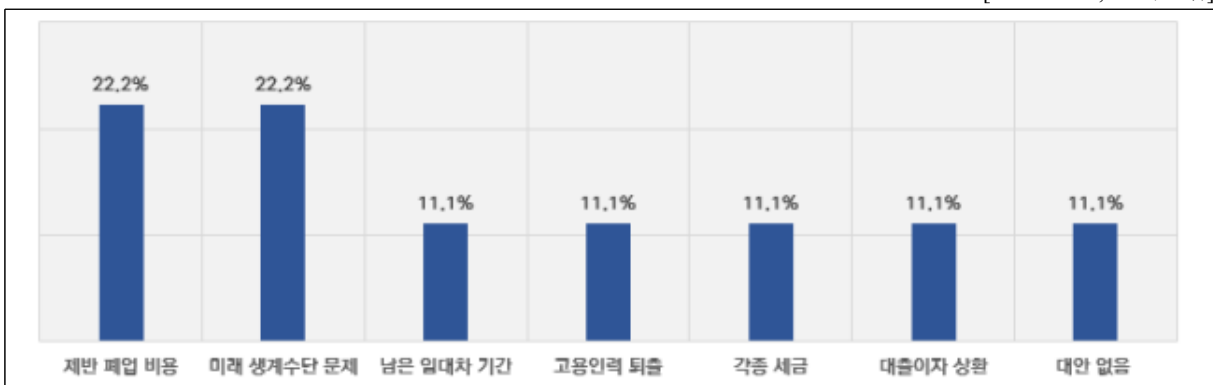
○ 폐업 소상공인 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폐업시 애로사항과 필요했던 정책들의 질의

1) 폐업 시 가장 힘든 애로사항

○ 폐업 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미래 생계수단과 인테리어 원상복구 비용 등 제반 폐업비용을 언급

[그림 4-15] 폐업 시 가장 힘든 애로사항

[Base : n=4,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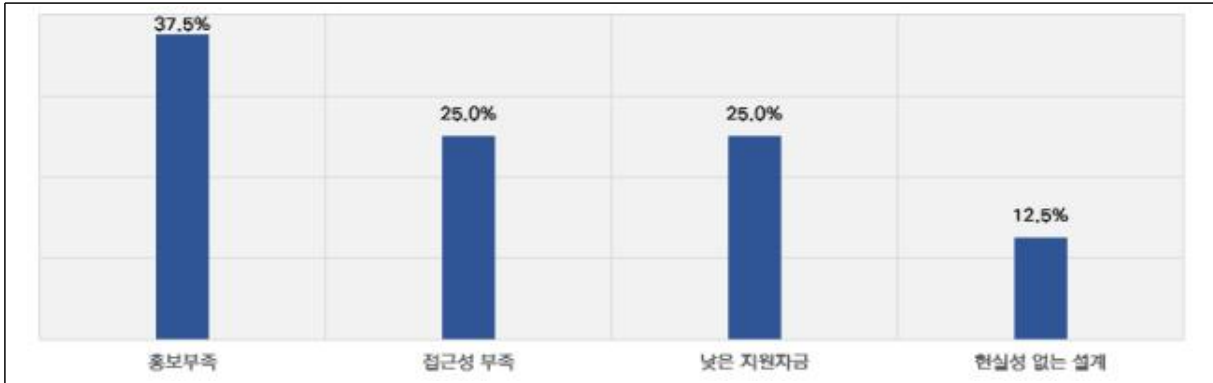


2) 폐업 또는 퇴로 관련 정부 정책의 문제점

○ 폐업 또는 퇴로 정부 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는 ‘홍보 부족’ 37.5%, ‘접근성 부족 및 낮은 지원 자금’ 25%,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설계’ 12.5%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6] 폐업 및 퇴로 정부정책의 문제점

[Base : n=4,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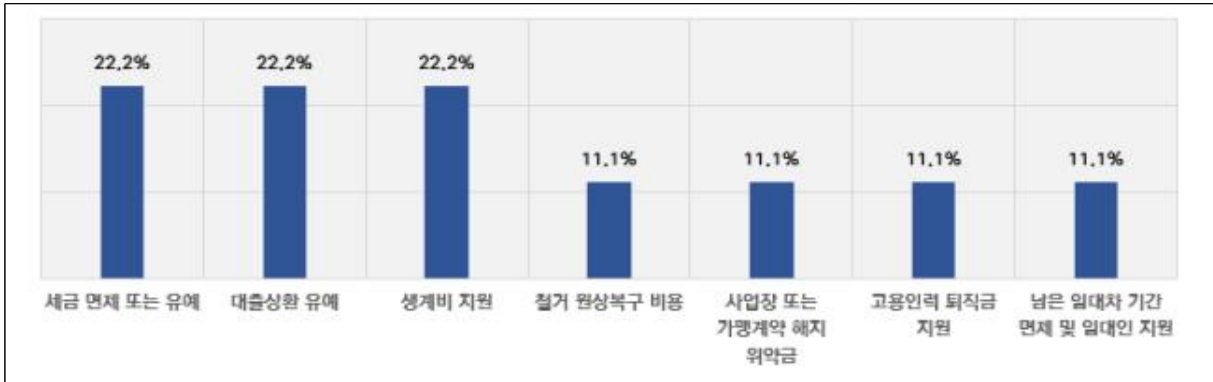


3) 폐업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

- 폐업할 경우 소상공인은 세금 면제 및 유예, 대출상환 유예, 생계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언급

[그림 4-17] 폐업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심층면접)

[Base : n=4, 중복응답]



- 이 외에도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
 - **(패키지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및 노란우산공제와 희망리턴 패키지를 연계한 One-Stop 폐업지원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적 장치를 공고화
 - **(임대차 기간 면제 및 임대인 지원)** 폐업 소상공인에게 임차기간의 임대료와 인테리어 복구비용(희망리턴 패키지의 점포철거비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임대인과의 마찰문제 해소
 - **(정부 보증 및 재정지원)** 폐업 후 가장 큰 문제는 대출금 상환 문제로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정부의 기금 마련을 통한 직접 지원, 정부 보증을 통한 대출로 폐업 후 이자비용에 대한 상환 유예나 기간 확대를 해주는 정책 필요

- **(폐업지원 거버넌스 구축)** 고용노동부 ‘체불청산지원 사업자 용자’,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 패키지’ 등 부처 간의 사업 연계 강화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제공
- **(소상공인 공적자금 투입)** 소상공인이 여러 어려움과 폐업으로 인한 가계의 고통이 사회적 문제와 충격을 생각하여 이들 대상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지원
- **(폐업 前)** 음식업, 서비스업, 소규모 소매업 등의 소상공인은 대부분 본사와의 가맹계약에 의한 창업으로 본사와의 공정한 수수료 계약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과 소상공인특별법 제정 등 현행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소상공인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
- **(폐업 後)** 밀린 지방세, 과태료 등 관련 세금 면제 및 유예 및 지자체가 주선한 업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철거 활용, 남은 집기 등은 공공 전자상거래 장터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관련 시장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제5장

정책제언과 결론

자영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입보다 철수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의 비중 기준으로도 철수가 진입의 50%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책도 이에 맞춰 생애주기별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하겠다.

자영업자의 영세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철수 비중을 높여나가고 진입은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현재 상황만으로도, 경제현상 기준으로 폐업에도 상당한 규모의 정책 수요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7~2019년간 모든 지역, 모든 기간, 사실상 모든 업종에서 개업이 폐업보다 유의하게 높으며, 이에 따라 사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 KCB 월별 자료로부터 도출한 평균 전체 자영업체 사업체 수는 3,430,500개이며, 해당연도 폐업사업체 수는 287,384개, 개업사업체 수는 511,815개로 전체 사업체 대비 연간 폐업비율은 8.37%, 개업비율은 14.90%로, 2017~2019년간 광역지방자치단체단위 모두에서 개업은 폐업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분류 기준 업종에서도 일부 이상치 외 절대 다수의 업종에서 개업은 폐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진입이 철수보다 높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던 2020년의 경우에도 자영업의 진입은 철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자영업 사업체 수도 증가하고 있음이 강하게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재정사업 분석 결과, 현실 생태계에서의 철수 수요와 비교해 볼 때 재정사업 중 철수에 특화된 사업의 수와 예산액은 과소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분류체계에 있어 생애주기별 분류는 존재하지 않아 해당 분류로 사업을 분류할 수 없었으며, 사업설명자료와 재정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소상공인이 수혜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에 관리 포커스가 충분히 맞춰져 있지 않은 사업들의 경우에는 특히 생애주기별 설계나 관리가 미흡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예산 15조 4천억원의 29%가 창업, 54%가 성장과 유지 특화, 13%는 특화되지 않게 조준된 반면 철수에 특화된 사업 예산은 2.1%에 불과하였으며, 가장 심각한 것은 기타 부처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예산 사업의 경우로 전체 14조 5천억원 중에서는 철수에 특화된 사업 예산이 존재하지 않았다.

정책 설계에 있어 생애주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철수에 관련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보아 세가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정책들을 생애주기별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생애주기에 특화하지 않은 정책들을 중심으로 생애주기 기준의 특화 요소를 갖추도록 하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단기적-중기적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철수를 지원하는 특화사업을 설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의 수요에 따라 단기 생활자금 지원, 설비 처리 지원, 권리금 문제 해결,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해결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폐업 사업체들이 받을 수 없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금액 등 사업 규모를 파악하여 보완적인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현행 정책이 특화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소상공인 비중, 생애주기 지원 비중을 지원부서들이 특화해서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제도들을 강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적 근거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지원, 명시적인 재정정책은 아니지만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공제제도가 있음에 주목하여 해당 제도에 대한 지원을 추구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사업을 재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목적을 위해 현업 당국이 개별 정책에 있어 소상공인 지원 비중과, 생애주기 배분 비중을 관리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증거에 기반하여 폐업컨설팅, 설비처분 관련 정보 제공 등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설계를 추구해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장의 수요에 생활자금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지원, 노란우산공제제도의 보장 등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생애주기지원체계 차원에서 폐업지원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의식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의 목표로 소상공인 경쟁력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동력 확충도 함께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는 창업 외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주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인구대비 자영업자 사장 비율 목표를 하향 목표로 낮추어 나가는 한편, 소상공인 인당지급액 등 질적 지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에서 진입과 철수가 유사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과, 정책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철수를 촉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경제현상 비중만큼은 철수지원 비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설계 및 예산배분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기획재정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업그레이드」,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021.
- 김문정·장우현, 「Covid-19 대응 재정정책 설계를 위한 경제현황 기초분석 - 신용카드 자료를 기반으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김미루·오윤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KDI 정책포럼 제 281호, 한국개발연구원, 2020.
- 대한민국정부, 『2021년 성과계획서(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정부, 2020.
- 이우진·강창희·우석진, 「2020년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2021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21.
- 이진국,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 - 자영업자 비중의 결정 요인과 과잉 수준 분석: OECD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한국개발연구원, 2021.
- 장우현, 「신용카드자료를 활용한 코로나 19의 경제적 영향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재정포럼 2021년 4월호 현안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장우현·양용현·우석진,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3.
- 장우현·우석진,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I)』,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14.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부 편』, 중소기업부, 2021.
- _____,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유관기관 편』, 중소기업부, 2021.
- 코리아크레딧뷰로(KCB), “KCB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데이터베이스 2021”, 2021.
-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데이터 2010~2018년도 자료」, 2020.
- 한국은행,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 보도자료, 한국은행, 2019.
- 홍민기,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노동리뷰 제189호, 한국노동연구원, 2020.

<웹사이트>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https://www.work.go.kr/kua/intro/kuaIntro.do>)
- 노란우산공제 사이트(<https://www.8899.or.kr/yuma/index.do>)

취업성공패키지 사이트(<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공공데이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MDIS, 1990-2019년

통계청, 2020년 9월 고용동향, 2020년

Euro Stat, Labour force survey, 1990-2018년

ILO, Labour Force Statistics, 1990-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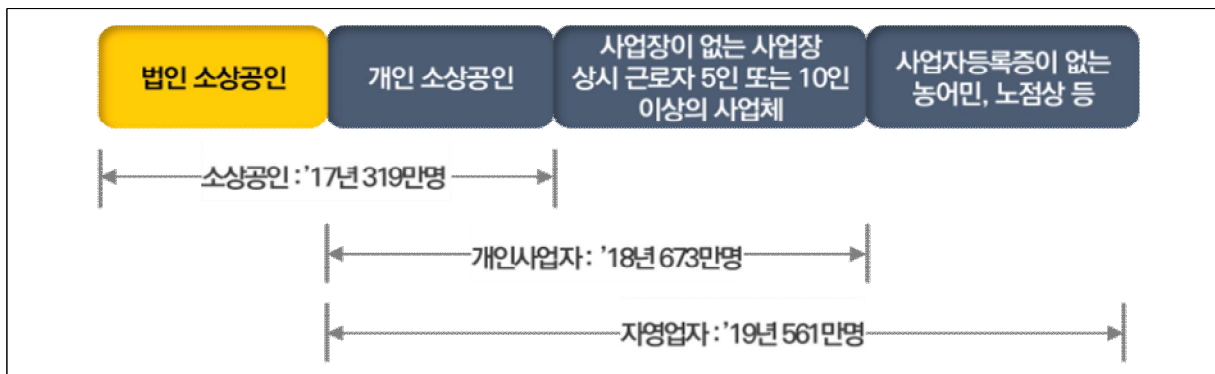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1990-2019년

Statistics Canada, Labour force characteristics by industry, 1990-2019년

부록 1.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차이

- (소상공인) 소상공인보호지원법 법적 근거 아래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10명 미만인 사업체를 말함
 - 업종에 따라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이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자영업자)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합친 개념

[그림 부록-1] 소상공인·자영업·자영업자 개념 비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1), 내부자료 가공

<표 부록-1> 소상공인·자영업자 비교

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의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1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고용 또는 자기 혼자 사업하는 사람
법적근거	소상공인보호지원법	없음
통계산출	경제총조사(5년), 전국사업체조사(연간)	경제활동인구조사(월별)
조사방법	조사통계 (전체 사업체 중 소상공인 분류)	조사통계 (표본 추출[3만명 내외])
현황	319만개('17년)	561만개('19년)
차이점	개인사업체+법인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보유(법인제외) 또는 무등록사업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1), 내부자료 가공


부록 2. 제4장 설문지

소상공인 안전한 퇴로에 관한 조사 ID(일련번호)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대중소기업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하는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은 소상공인들이 안전하게 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잠시만 시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내용은 통계분석과 재합의를 위한 목적 이외에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KSBI** 중소기업연구원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담당자: 02-707-8272

I. 일반현황

Q1. 사업체 일반 현황			
1) 업체명			
2) 사업주 나이	()세		
3) 사업주 성별	남자 () 여자 ()		
4) 소재지	()사도	5) 사업개시(현 사업체)	()년 ()월
6) 사업체 형태	① 독립 점포	② 프랜차이즈 가맹점	③ 기타()
7) 디지털 or 온라인 활용 여부	① 미활용	② 활용	
8) 업종	① 음식점업 ② 도·소매업 ③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④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⑤ 제조업 ⑥ 숙박업 ⑦ 교육서비스업 ⑧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⑨ 부동산중개업 ⑩ 운수업 ⑪ 건설업 ⑫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부동산업 제외, 여행업 포함) ⑬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Q4. 폐업을 하게 된다면 가장 지원 받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유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권리금 보호 ② 보증금 회수 ③ 생계비 지원 ④ 남은 임대차 기간 면제 및 임대인 지원 ⑤ 세금 면제 또는 유예 ⑥ 철거 원상복구 비용 ⑦ 사업장 또는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⑧ 자산 매각 지원 ⑨ 대출상환 유예 ⑩ 취업 알선 ⑪ 고용인력 퇴직금 지원 ⑫ 심리치료·정신치료 등 ⑬ 폐업소상공인 자녀 돌봄서비스 지원 ⑭ 외부요인(젠트리피케이션 등)에 의한 폐업인정 및 보상 ⑮ 폐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	--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역량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